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22-10

 www.mifaff.go.kr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2012. 2.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목 차

I. 행사 개요	1
II. 2012년 업무계획	5
1. 서면보고서	7
2. Presentation (PPT)	179
3. 만화로 보는 업무계획	211
4.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223
III. 보도자료	233
1. 보도자료	235
2. 보도자료 Q&A	243
IV. 언론 보도	297
V. 국회 상임위 보고(2.8)	319

I

행 사 개 요

행 사 개 요

- 일시 : 2012.12.16(금), 07:20 ~ 10:10(170분)
- 장소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대강당(안양소재)
- 행사개요
 - 조 찬 : 40분(검역검사현장 및 구제역 실무자 등)
 - ※ 메뉴 : 설렁탕 + 수육, 뷔페방식
 - 환 담 : 15분(BH·관계부처·국회 및 외부전문가 등)
 - 업무보고 : 20분(참석자 소개 및 농림수산물식품부 업무 보고)
 - 토 론 : 70분(기획조정실장 주제, 마무리말씀 포함)
 - ※ 주제 : FTA 이후 농업경쟁력강화 방안, 귀농·귀촌 활성화
 - 사무실 방문 및 간담회 : 25분(동물위생연구동 AI 연구실)
- 보고내용 : 2012년도 업무계획 ※ FTA를 넘어 선진농어업 실현
 - ⇒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 보고형식
 - 보 고 자 : 장 관
 - 업무보고(과워포인트) 후, 토론으로 진행

Ⅱ

2012년 업무계획

1. 서면보고서
2. Presentation (ppt)
3. 만화로 보는 업무계획
4.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1. 서면보고서

2012년도 업무계획

2012년 업무계획

-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

2011. 12. 16.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 ❖ 목 차 ❖ ❖

I. 이명박 정부 농정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3
II. 2012년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23
III.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29
1. 체질개선·미래준비	31
(1) 농수산물 생산 시스템 선진화	31
(2) R&D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	35
(3) 수산업 체질개선	42
(4)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	47
2. 활력창출·생활안정	55
(1)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55
(2) 인력 육성·유입·지원 체계화	60
(3) 농어촌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66
(4) 투자 활성화	72

3. 소득안정·위험관리	75
(1)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75
(2) 동물 질병방역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	79
(3) FTA/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84
4. 안전식품·안정공급	87
(1) 안전 농식품 공급	87
(2) 협동조합 개혁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	94
(3) 안정적인 식량공급	101
(4) 기후변화 대응	113
IV. 과제별 추진일정	117
< 참고 >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128
< 별첨1 > 201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137
< 별첨2 > 2012년 산림청 업무계획	161

I. 이명박 정부 농정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성 과
2. 반 성
3. 현 좌표 진단

1. 성 과

- (농협개혁)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 완료('11.3)
 -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경제·금융) 체제로 전환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 전담
 -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및 세제 지원방안 마련('11.9)

- (FTA대책)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21.1조원 →22.1)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80→85%),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2.2조원 → 4.0),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등 재정·세제지원 강화

- (농림어업 성장) '04년 이후 40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농림어업 생산액*이 '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
 - * ('00) 37.1조원 → ('07) 41.6 → ('08) 46.0 → ('09) 49.9 → ('10) 50.9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등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농수산물 생산증가 및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

- (식품산업·수출) 규제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전략 산업화하여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출확대 견인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11.9) 및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통한 수요 창출
 - * 막걸리 출고량/시장규모 : ('07) 172천kl/29천억원 → ('08) 176/3.0 → ('09) 261/4.4 → ('10p) 412/7.1

-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11년 농식품 수출액은 76억불로 전망 (11.30기준 65.6억불)되며, 최근 4년간 38억불 수준 증가('07 : 38억불)
 - * '08년 이전에는 농식품 수출 10억불 증가에 20년 소요('88 : 32억불 → '08 : 45)
 - 한식의 본격적인 해외진출로 인지도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 뉴욕시민 한식 선호도 증가('09 : 9% → '11 : 31), 미슐랭가이드 인증 스타급 한식당 지정(4곳)
- (미래준비) R&D투자 효율화, 종자·생명산업 등 농식품분야 성장동력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
- R&D 공동기획단 운영으로 중복투자 사전차단 및 종자·종묘 개발을 위한 'Golden seed project' 추진('12~'21년간 4,911억원 투자)
 - * 전략적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 20개 개발 (토마토, 백합, 고추, 넉치 등)
 - '기후변화 대응 세부 추진계획'(12월) 및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7월) 수립 등 정책적 대응노력 강화
- (식품안전)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및 이력제 확대('08 : 국내산 쇠고기 → '10 : 수입산 쇠고기, '14년 돼지고기)
 - * ('07) 구이용 쇠고기 → ('11) 소·돼지·닭고기·오리고기, 쌀·배추김치, 수산물(6개 품목)
 - 인증제 통폐합 등 인증체계 정비('10 : 18종 → '11 : 11, '13년까지 8)
-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수급안정 대응 강화
- 농협 계약재배 및 사이버거래소 직거래 확대('09 : 52억원 → '11p : 6,000)
 - 쌀 가공산업에 대기업 참여로 가공제품 개발 및 수요 확대
 - * 가공용 쌀 소비량 : ('07) 183천톤 → ('10) 304 → ('11p) 357

○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곡물회사 설립(4월)

* 곡물유통망 확보를 위해 M&A 대상기업 발굴 및 지분투자 협의 진행 중

○ 러시아와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명태쿼터 확보

* ('07) 20,500톤 → ('09) 39,000 → ('11) 50,001(추가쿼터 10,000톤 포함)

□ (농어가 경영안정)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농지연금제도 신규 도입 등 농어가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강화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대상재해도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화재 등으로 확대

* ('07) 21품목(농작물 10, 가축 11) → ('11) 50(농작물 30, 가축 15, 양식수산물 5)

○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중고 농기계 매입 등으로 농가부채 경감

* 구입비용 절감(누계) : ('07) 338억원 → ('08) 889 → ('09) 1,569 → ('10) 2,429 → ('11p) 3,448

○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

* 가입자격 :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면적 30,000㎡ 이하 농업인 ('11.11월말 현재 983명 약정체결, 월평균 96만원 지급)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력유입 촉진

○ 농어촌 공공서비스기준, 영향평가제도 등 선진제도 도입 및 제1회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11.11) 등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정보제공

* 귀농 가구수 : ('07) 2,384호 → ('08) 2,218 → ('09) 4,080 → ('10) 4,067

○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우리 농어촌 운동' 추진중

* 재능기부 신청자('11.11월 현재) 1만명('13년까지 10만명 확보)

2. 미흡한 점

- (경쟁력 확보)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분야 신규투자 미흡
 - ‘先 대책, 後 비준’ 원칙에 따라 국내보완대책을 마련·시행 중이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자생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
 - 농어업인은 시설현대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해 줄 것을 건의(FTA 대책 관련 농어민 간담회, 1~6월)

- (유통체계) 협동조합 중심의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미흡
 - 수급·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생산자단체의 조직화, 계통 출하, 수급조절 시스템 취약
 - 유통구조개선 대책 추진 초기단계로 성과를 가시화하기에는 내·외부 요인(상품특성, 기후 등) 및 판매사업에서 농협의 역할 부족
 - 농산물 수급안정대책(‘11.1) 추진에도 불구하고, 배추·고추 등 일부 품목의 수급불안 반복
 - * 평균 소매가격 : (‘10.11월) 배추 3,443원/포기, 고추 10,140원/600g → (‘11.11월) 1,523, 17,450

- (구제역 대응) 사상 최악의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경제적·사회적 비용 낭비 초래
 - 초동대응 및 백신접종 등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SOP) 미흡
 - *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마련·추진중
 - 열악한 축사환경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구조적으로 취약

- (농어가 소득·경영) 농어가 소득정체 및 경영비 부담 가중
 - 평균 농어가 소득은 3천만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2/3 수준('07 : 농가 72.9%/어가 69.9% → '10 : 66.8/74.2)에 불과
 - * ('07) 농가소득 32.0백만원/어가소득 30.7백만원 → ('10) 32.1/35.7
 - 사료, 농약가격 등 농어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는 반면, 농어가판매지수는 하락하여 농어가 교역조건은 악화
 - * 농어가 교역조건 = (농어가판매가격지수/농어가구입가격지수)*100
 - * 농가 교역지수('05 = 100) : ('07) 96.8 → ('08) 86.2 → ('09) 83.9 → ('10) 88.5

- (식품산업-농어업간 연계 부족) 식품산업의 영세성, 식품산업과 농어업간 연계부족으로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
 - 대부분의 식품제조·외식업체가 영세·자영업자(5인 미만 업체 84.5%) 중심으로 운영
 - 국산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높지만, 안정적인 원물 공급 체계 미흡, 낮은 가격 경쟁력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

- (농어촌 생활여건)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대책' 추진으로 복지여건 개선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생활여건은 여전히 미흡
 - 의료·교육 등 기초 생활서비스에 대한 도시-농어촌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의 활력도 저하
 - * 삶의 질 만족도(농업인/도시민) : ('08) 13.1%/19.3% → ('10) 12.6/26.9
 -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적 관심과 지원노력 부족

3. 현 좌표 진단

□ (농어업 구조) '00~'10년까지 농림어업생산액은 연평균 3.2% 증가했지만, 부가가치는 정체(GDP 대비 비중은 매년 0.2%p 수준 감소)

* 농림어업 부가가치 : ('00) 24.9조원 → ('07) 25.2 → ('08) 24.7 → ('09) 26.6 → ('10p) 27.0

○ 쌀 등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소비성향 변화 등으로 감소('00 : 18.6조원 → '10 : 17.4)한 반면, 축산업·어업은 크게 증가*

* 축산업/어업 부가가치 : ('00) 2.6조원/2.2조원 → ('10) 5.0/2.6

-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로 지속 증가 ('00 : 11.1백만원/인 → '10 : 17.3)

○ 식품제조·외식산업 부가가치*는 국민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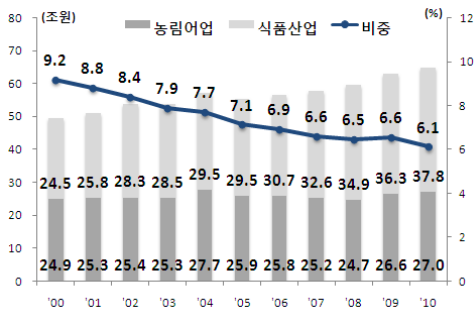
* ('00) 24.5조원 → ('07) 32.6 → ('08) 34.9 → ('09) 36.3 → ('10p) 37.8

○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00년 대비 30.2%↓)와 함께, 고령화도 급격히 진전('10년 농림어업취업자 중 65세이상 비중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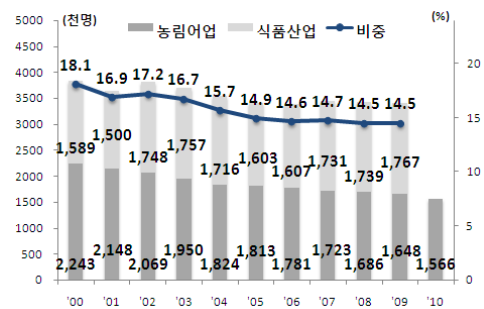
- 농어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농·영어 규모의 양극화 진행

* 영농 규모별 재배농가 비중(1ha 이하/3ha 이상) : ('00) 59.2%/6.1% → ('10) 64.6/8.2

농림수산물산업 부가가치



농림수산물산업 취업자 변화



□ (농어가 소득) '00~'10년까지 평균 농가소득은 연평균 3.3% (23백만원 → 32), 어가소득은 6.6% 증가(19백만원 → 36)

○ '10년 평균 농가소득은 32백만원, 어가소득은 36백만원이지만 연령대별 소득격차 존재(60세 미만 농가소득 49백만원, 어가소득 45)

- 60세 미만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격차는 '00년 86.9%에서 '10년 97.6%로 개선(전체 도·농간 소득격차 : '00년 80.5% → '10년 66.8)

○ '10년 연간 판매금액 1억원 이상 농가는 26천호, 어가는 6천호이며, 전체 농어가 중 비중은 지속 증가('00 : 농가 0.6%/어가 3.2% → '10 : 22/8.4)

○ 시설투자 증가 등으로 '10년 농가부채는 27백만원, 어가부채는 3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부채상환 능력*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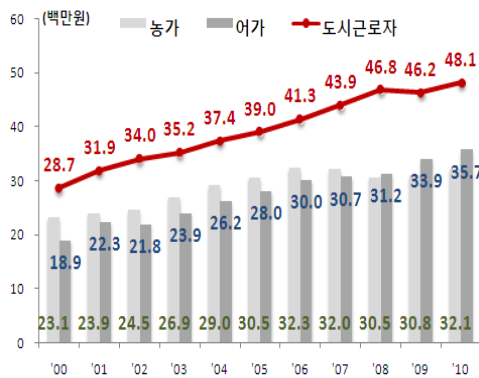
* 장기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 : ('00) 농가 12.6%/어가 11.3% → ('05) 9.1/18.8 → ('10) 7.3/13.8

○ 유류, 농약, 사료 등 농어업 경영비 증가가 농어업 총수입의 증가보다 커 농어업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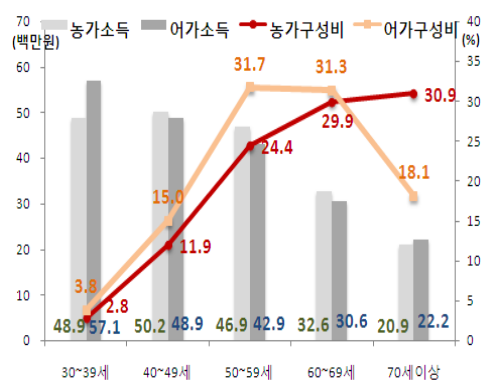
* 농어업소득률 = 농어업소득(농어업총수입 - 농어업경영비)/농어업총수입

* 소득률(농업/어업) : ('00) 55.8%/54.5% → ('10) 37.1%/44.1

연도별 농어가 소득



연령대별 농어가 소득('10)



□ (농식품 소비패턴) 연간 도시근로자가구당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은 '00년 2,884천원에서 '10년 3,825천원으로 증가

○ 품목별로 국민 1인당 쌀·채소류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육류·과실류의 소비량은 증가

* 1인당 소비량('00 → '09) : 쌀 93.6kg → 74.0, 육류 31.9kg → 36.8, 채소류 165.9kg → 153.6, 과실류 58.4kg → 67.7, 수산물 36.8kg → 49.8

○ 또한, 식료품비 중 외식 지출비중은 증가('00 : 44.4% → '10 : 49.3)

□ (농어촌 생활·복지) '삶의 질 향상 계획(1차 '05~'09, 2차 '10~'14)' 수립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복지여건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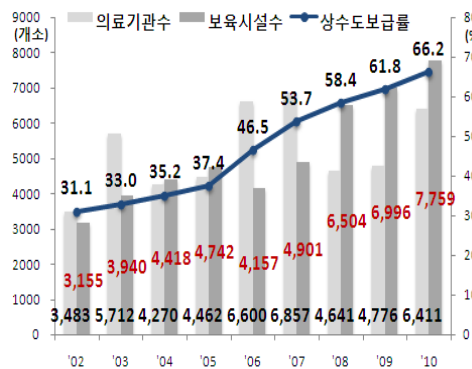
○ 상수도,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은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 '10년 상수도 보급률(면) 66.2%, 의료기관 비율(군) 11.4%, 보육시설 비율(읍·면)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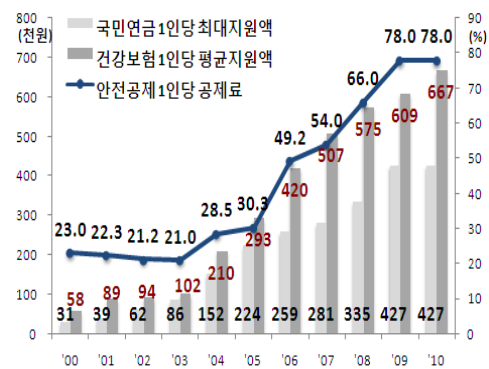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50%)·국민연금보험료(최대 50%)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1년 건강보험료 436천세대(1,544억원), 연금보험료 219천명(869억원), 양육비 34천명(310억원)

농어촌지역 생활 인프라



농어업인 복지지원



Ⅱ. 2012년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1. 정책 추진여건 전망
2. 정책고객 의견수렴 결과
3. 2012년 주요과제 추진방향

1. 정책 추진여건 전망

- 주요국과의 FTA 등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
 -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영향 가시화
 - 호주, 콜롬비아 등 농업 강국과의 FTA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
 - 중국, 일본과도 동북아 경제통합 차원의 FTA 추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유럽발 금융위기,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불안 지속
 - 원유·곡물·사료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금리 변동 가능성 증대는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 가능
 -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과일류 등 일부 기호성 농수산물의 소비에 영향 가능

-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성 증대
 -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함께, 농경지 침수, 양식품목 폐사, 산사태 등 농어업 분야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응 강화
 - 탄소상쇄제도 도입 등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5.2%) 달성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휴양, 일자리 등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농어촌 경관, 전통·문화유산 관리·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가능성 모색
 - 도시민의 귀농·귀촌지원 등을 위한 정보·교육 수요 확대

2. 정책고객 의견수렴 결과

1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10.11~28)

<도시민·농어업인·전문가 2,296명 대상, 농촌경제연구원 >

□ 2011년 농림수산물 주요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

- 가축질병 대응 강화(55.6%),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37.9%),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32.2%)에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37.5%), 재해 등 위험관리(36.5%),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증진(23.1%) 분야는 성과가 적다고 인식
 - 아울러, 개방에 대한 정부대책이 적절하지 않다(59.7%)고 평가

□ 농업인의 농업·농촌정책 수요에 대한 의식

- 농가 소득안정(54.2%)과 후계농업인 육성(13.4%)이 중요하며, 고령화 및 인력부족(35.3%)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
- 내년도 중점 추진 정책으로 FTA 등 농업개방 대응(27.5%), 농산물 가격안정(27.3%)이 중요하다고 인식

□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 가격·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우(63.5%), 쌀(53.3%)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

* 도시민의 품목별 경쟁력 인식('10) : 한우 78.9%, 쌀 75.8

- 아울러, 국산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 저하('10 : 51.1% → '11 : 45.1)

2 농어업·농어촌 정책인식 조사 (11.19~28)

<도시민·농어업인·전문가 1,200명 대상, 농촌정보문화센터 >

□ 2011년 농림수산물식품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

- 식품산업육성(12.9%), 농어촌 복지증진(11.4%), 식량의 안정 공급(11.3%), R&D지원(11.3%)을 높은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평가
- 농수산물 가격안정(20.5%),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15.3%), 수출(13.0%), 농협·수협개혁(13.0%)은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아울러,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31.8%)가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

* 농어가 소득안정장치 강화(21.0%), 직접피해보전 기능 강화(19.2%) 등

□ 농림수산물식품 주요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 (쌀)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의 안정적 매입(23.3%), 산업발전 측면에서 가공용 쌀 소비촉진(26.1%)이 중요
- (유통·수출)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사전 생산량 조절(32.8%)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판로개척·마케팅(27.8%)이 중요
- (축산)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초기대응(28.0%)이 중요하며,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26.7%)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
- (수산) 수산자원조성사업(28.8%)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양식산업육성을 위해 연안 양식장 오염(28.4%) 해결이 중요
- (농어촌) 종합적인 지역개발(22.0%), 인력육성(20.5%)이 중요

3. 2012년 주요과제 추진방향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체질개선·미래준비

- ▶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
- ▶ R&D 지원 및 성장동력 확충
- ▶ 수산업 체질개선
- ▶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

활력창출·생활안정

-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 인력육성·유입·지원 체계화
- ▶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지원
- ▶ 투자 활성화

소득안정·위험관리

- ▶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 ▶ 동물질병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
- ▶ FTA/DDA 대응 강화

안전식품·안정공급

- ▶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
- ▶ 안정적인 식량공급
- ▶ 기후변화 대응 강화

Ⅲ.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1. 체질개선 · 미래준비
2. 활력창출 · 생활안정
3. 소득안정 · 위험관리
4. 안전식품 · 안정공급

1. 체질개선 · 미래준비

1 농수산물 생산 시스템 선진화

가 농어업 시설현대화

◇ 지원방식 변경(보조+융자 → 이차보전)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MSY(모든당 연간 출하두수) : ('11) 15두 → ('17) 22(덴마크 25)

- (축산) 축사 신축·개보수, 급이·폐사축 처리시설 등 생산성 향상 및 방역관련 시설 중점 지원
 - '12년도에 양돈 등 약 2천호를 대상으로 시설지원(4,885억원)
 - 사업성이 검증된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하고,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지정 등 자금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현행 방식(보조+융자)은 전업농 중심으로 현행 한도(양돈 10억원 등)내에서 지원, 이차보전은 기업농 중심으로 지원한도 확대(양돈 50억원 등)
 - 과잉사육 기조에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방역 및 생산성 향상 시설은 제한 없음)
 - 축사시설 보완시 소독조, 휴대용 소독기, 방역울타리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농장단위 사전 방역관리 강화
 - 친환경축산 인증 농가 우선 지원 등으로 환경 친화 축산 유도

□ (과수) 사과·배·포도·감귤 등 주요 과실의 품질고급화·비용 절감시설 및 생산기반 정비 중점 지원

- '12년도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관·배수시설, 방풍·방조시설 등 지원('11 : 491억원 → '12 : 627)

* 과수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11 : 1,702kg/10a → '17 : 1,950) 및 노동력 절감(157시간/10a → 140) 등 추진

- 시설포도·시설감귤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다겹보온·지열 난방 등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전환

* 시설 재배면적('10) : 6,225ha(포도 2,242, 감귤 3,102, 기타 881)

- 집단화된 생산단지(30ha이상), 수출 전문단지(52개)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등 지원('11 : 171억원 → '12 : 106)

□ (채소·시설원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온실 자동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중점 지원

- '12년도에 고추 주산단지 중심으로 비가림 시설 신규 지원(180ha, 180억원)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로 생산성 향상('11 : 232kg/10a → '17 : 670) 및 병충해 방제회수 감소(11회 이상 → 6~7) 등 추진

- 시설원예전문단지의 유리온실·비닐하우스 개보수, 내재해형 시설보급 등 저비용·고품질 시설 지원('11 : 326억원 → '12 : 542)

* 일반 원예시설 신규지원(500ha, 250억원)

- 다접보온커튼, 지열냉난방기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속 보급
(’11 : 1,422억원 → ’12 : 1,323)

□ (수산) ’12년도 노후된 양식장 시설현대화 신규 지원(220개소, 768억원)

- 10대 전략 양식품목 중심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자동선별기 등 양식장 기계화·자동화 시설 확충

□ (제도개선) 농어가의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 마련(1월) 및 규제완화 추진

-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등 시설현대화 자금 특례제도 마련

- 보증한도 : (현행) 농어업인 10억원 / 법인 15억원 →

(개선) ‘시설현대화사업’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확대

- 어장 규모제한 등 진입제한 규정을 신규어장(신규면허 또는 갱신) 부터 단계별로 완화

* 어업면허 제한 : ①임대차 불가, ②규모제한(60ha 이하), ③법인 또는 어촌계 소유 면허 매매 불가, ④갱신시 기존 사업자 우선순위 등

- 품종별로 세분화된 양식면허를 여건에 따라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 도입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6월)

- 갯벌 등 양식어업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수산업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

나 축산업 선진화

◇ 축산업 허가제,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 축산법 개정과 연계, 사육규모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 도입('12)
 - * '12년(기업농) → '13년(전업농) → '14년(준전업농) → '15년(소규모 농가)
- 축사 위치·시설·사육두수·교육 기준 충족시 허가
 - '12년부터 허가대상 등 축산농가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21천명, 22억원)
 - * 교육시행을 위한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12.3월)
- 허가 대상이 아닌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유예기간 1년)
- 가축 방역의 효율화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도입('14년 본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2~'13년)
 - 농장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의 이동 또는 도축 금지('12.10월~)
-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
 - 원유 200만톤 수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전국단위 수급 관리체계' 구축, 생산비와 연계한 '원유가격 연동제' 운영 등 시행
- '말산업 육성법'('11)에 따라 말산업을 레저산업, 농외소득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12년 상반기)
 - 특구지정, 승마시설 확충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 특구지정기준 : 사육농가 50가구, 사육규모 500마리, 연간 매출규모 20억원 이상
 -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 말조련사 등 자격제도 도입 및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 추진

2 R&D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

가 농림수산물 R&D 강화

- ◇ 생산·유통·식품분야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중장기 투자계획 : ('12) 9,089억원 → ('14) 1.3조원 → ('20) 3.9

□ 첨단 생산기술 개발, FTA대응 시설 현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중점분야의 연구개발 집중 및 투자 확대 추진

- 첨단 환경제어, 온난화 대응 품종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생산성 혁신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13~'20년까지 1조원 투자)
- 농수산물자원에서 고부가가치소재 개발('13~'22년간 5,982억원 투자)

* 천연 방부제, 항생제 대체제, 바이오 향료 등 10대 소재 개발

□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R&D 지원 체계 선진화

- 소액·다건 지원에서 대형·프로젝트형 지원체제로 전환
 -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 및 관리기관의 연구관리 효율화 유도
-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 도입(12월) 등을 통한 성과관리 전주기화
 - 기획·관리·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성과평가 강화
- 금융기관 제휴를 통한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강화

* (현재) 카드사용 파악(17%) → (개선, 12년) 계좌 및 카드사용 파악(95%)

- 우수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인증제 및 정책자금 지원
 - 농림수산식품분야 우수 실용기술의 발굴 및 실용화·산업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도 기획(6월)
 - 실용화 관련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가점 등 인센티브 지원
 -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자금(1,000억원, 금리3%) 지원(3월)

- 농식품분야 연구개발 수준평가 및 중장기 추진상황 검토
 - 연구개발 사업별 **Micro road map** 작성(7월) 및 기술수준 분석(11월)을 통해 R&D 사업별 추진전략과 연계성 강화
 - * '12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최초로 7대 산업별 기술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정량적으로 평가

- 소규모 농가대상 수익창출 R&D 모델 개발
 -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마케팅 통합 지원으로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적 가치가 높은 수익모델로 연계
 - * (과거) 신품종 개발, 재배, 가공·유통 별도 지원 → (향후) 분야별 통합 지원
 - 생산·상품화·마케팅 등 종합기술을 투입, 40개 거점 육성(12월)

- 농식품분야 현장애로 기술 해결 및 사업화 촉진
 - 질병원인 규명, 재해 피해 최소화 등 현장지원팀(30개) 구성
 - * 농진청(농촌현장지원단), 산림청(임업기술컨설팅), 수과원(수산현장기술지원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실용화 전담기관 기능 강화
 - 특히 출원·관리 강화 및 수산, 임업 분야 기술이전 지원

나 종자산업 육성

◇ 글로벌 수출종자 개발 및 민간육종 인프라 확충 등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수출 종자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 **'Golden Seed Project**(‘12~’21년 4,911억원, ‘12년 25억원)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센터 구성**(3월) 및 **품목별 세부계획 마련**(12월)
 - 20개 전략품목의 글로벌 수출종자 개발(농산 : 벼, 감자, 배추, 무, 토마토 / 축산 : 돼지, 닭 / 수산 : 넙치 등)
- 수입종자 대체를 위한 **'로열티 대응사업단 운영'**(‘12 : 63억원) 및 **해외적응성 시험 확대**

* 대상 품목 : 딸기, 국화, 참다래, 버섯, 장미, 난 등 6개 작물

* 국산품종 보급 : ('11) 딸기68%, 국화 20, 참다래 15 → ('12) 70, 23, 20

* 해외적응성 시험 : ('11) 5개국 28개 품종 → ('12) 6개국 30개 품종

□ 민간의 육종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및 인력양성 지원

-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를 **신품종 육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29억원)
 - 20개 민간 종자업체 유치, 민간육종의 시너지 효과 도모
 - * ('11~'15) 270억원 (전북 김제 54ha) / ('12) 설계 및 기반공사
- 육종세대 단축, 신품종 조기육성을 위한 **'방사선육종센터' 설립**(39억원)
 - * ('10~'13) 132억원, 전북 정읍(한국원자력연구소 설립) / ('12) 시설공사

- 육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소류육종연구센터' 사업 추진
 - ('11) 석·박사 등 27명 → ('12) 29명('19까지 270명 양성 목표)
 - * 10년간('10~'19) 100억원, 서울대 등 5개 대학 및 3개 종자업체 참여

□ 우수 종자 보급 확대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딸기, 화훼, 버섯 등의 우량 종묘 생산기관 지원(7개소, 39억원)
- 벼·보리 등 정부 보급종 검사강화로 고품질 종자 공급('11 : 36톤 → '12 : 37)

□ (축산) 한우 종축 분산 관리 및 우량 유전자원 선발 강화

- 구제역 등 대비, 한우 종축 분산 관리(3개소, 서산·무주·영양)
 - 신규 분산처(경북 영양) 부지 매입 및 시설 설치('12~'13년)
- 우량 유전자원 보급을 위한 한우 종축 선발 강화
 - 당대검정두수 확대(500두→600)를 통해 우량종자 선발비율 강화(5%→3.8)

□ (수산) 품종보호제도(UPOV) 시행('12.1월)에 따른 해조류 신품종 관리 기반 조성 및 개발 확대 추진

- 신품종 출원·심사·등록 및 종자 유통관리를 위해 수산식품 품종관리센터 운영('12.3월~, 국립수산물과학원)
- 수입대체용 해조류 신품종 개발 확대('11 : 36, 미역3 → '12 : 미역1개 추가)

□ (산림) 우수 산림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지를 녹색자원화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주요 경제수 종자 45톤, 포플러類를 비롯한 바이오순환림 등 묘목 41백만본(17천ha) 생산·보급
 - * 편백, 가시, 후박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난대수종 종자와 묘목생산 확대

다 생명자원의 확보 및 산업화

◇ 생명자원의 활용도 제고,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생명자원산업화센터 건립('12) : 6개소(곤충 3, 천연색소 2, 양잠 1)

□ '생명자원통합정보서비스(BRIS)' 구축을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1월~)

- 생명자원의 활용·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전자원정보를 DB화(6만점)하고, 타 부처 정보시스템(수출입신고 등)과 연계 운영

□ 곤충·동식물 등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 지역별 곤충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등을 위한 '지역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지원('12~'14, 1개소, 총 50억원)
- 약용작물을 활용한 천연색소·음료소재 개발 등을 위한 '천연 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지원('12~'14, 3개소, 총 150억원)

□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기반조성 추진

-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12년, 8개소), 양잠산물종합단지 시범조성('12년 1개소) 등 산업화기반 구축

* 누에, 뽕잎, 오디 등을 활용한 가공제품개발 : ('11년까지) 9종 → ('12) 4

□ 농림수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성분평가 및 제품개발(523억원)

* 곤충자원의 약리성 및 독성 평가('12~'14, 12억원), 지역 특화 생명자원 활용 고부가 제품 개발('12~'14, 15억원), 농수축산용 미생물산업화('12~'14, 13억원) 등

라 낚시·관상어산업 육성

◇ 낚시 및 관상어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어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낚시문화 선진화 등 낚시산업 육성

○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바다낚시터 허가제 시행 및 수상구조물 인증기준 마련(9월)
- 낚시터 허가기간 연장(5년→10년) 등 내수면 낚시터 규제완화 추진
- 우수 낚시터 등 종합적 낚시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12월)

○ 낚시 서비스 질 제고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

- 낚시업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교재개발 : 11월, 시범교육 : 12월)
- 낚시인을 대상으로 낚시터 청소, 낚시제한 어종 등 홍보 확대
- * 건전한 낚시문화 리플렛 제작·배포, 명예감시원 활동 활성화 유도 등

○ 종합적인 낚시 산업 육성 대책 마련(2월)

□ 관상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

○ 관상어 품종개량, 기능성 용품개발* 등을 위한 R&D 확대 (560백만원)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120백만원)

- * 토속 어종의 관상 가치 개발, 로봇관상어, 이끼 방지 수족관 개발 등

○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법률안 마련(12월)

- * 육상 해수 관상어 양식, 산업 단지 조성 및 지원, 관상어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및 지원, 수족관 관리자 제도 도입 등 관련 내용 검토

마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도시농업시민 운동 전개, 박람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도시텃밭 조성 확대 : ('11) 485ha → ('12) 550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11.22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5월)

○ 지자체별 도시농업 육성 조례 제정을 확대하여 지역의 도시농업 활성화 도모('11 : 21개 지자체 → '12 : 40)

□ 도시농업 육성 추진체계 마련 및 미래형 기술 개발

○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7월) 및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운영(6월)을 통해 정부간 협조체제 강화

* 종합계획(안) : 도시농업 공간 확대, 도시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건물 실내·외 녹화기술 등 R&D 전략 마련 등

○ 수직빌딩농장 등 미래형 식물생산 산업화 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11월)

* 고부가가치 작물개발, 환경제어기술 표준화 및 기술 로드맵 작성, 해외실증 연구 등

□ 공감대 형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박람회 개최 등 시민운동 지원

○ '제1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6월) 개최로 도시농업 기술·정보 교류 확산

3 수산업 체질개선

가 연근해 어업관리 체계화

◇ 체계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전략 마련 및 어선시설 개선 등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선진화 도모

- 체계적·종합적 어업구조조정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 확충
 -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어선허가 유지를 위해 허가정수 재조정(6월)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2월)를 거쳐 관계법령(수산업법 시행령 등) 개정
 - 구조조정 방식을 어업인 희망 감척에서 자원남획용 어업 중심의 자원관리형 감척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절차 확립
 - 감척 대상 업종 선정, 감척절차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도상연습 실시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2.7월 시행)으로 어업인 희망 또는 직권에 의한 어선감척사업 근거 마련

- 어업 효율성 제고,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제도정비 및 시설개선
 -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등 어선구조 개선을 위한 어선톤수 조정(10월)
 - 어획강도를 높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업종별 어선톤수 제한을 완화
 - * 현행 어선톤수 제한 규정 : 연안 10톤 미만, 근해 140톤 미만
 -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로 조난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 '12년 5톤 이상 어선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15년 도입 완료)
 - 사고예방을 위한 '(가칭)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마련(12월)
 - 시범 실시중인 구명조끼 보급('11 : 2,200개)을 '13년부터는 본격 확대

나 수산자원 조성·관리 강화

◇ 수산자원 조성·관리의 내실화 및 생태환경에 적합한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 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 및 관리 내실화

- 연근해 수산자원의 잠재생산력 조사를 통해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체계 마련(12월)
-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 검토
- 어업자별 할당 방법, 할당된 배분량의 매매 또는 임대 방법 등

□ 연안 및 내수면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 연안 바다목장 5개소(웅진, 양양, 포항, 통영, 부안) 추가 조성
* 바다목장조성(누계) : ('10년까지) 22개소 → ('11) 26 → ('12) 31(신규 5)
- 바다숲 조성('11 : 705ha → '12 : 840)으로 산란·서식장 복원
- 하천·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도모델 개발 및 인공산란장 설치(4개소)

□ 어장관리해역 지정 및 어장환경조사 강화 등 어장관리 제도 정비 (어장관리법 개정, 8월 국회 제출)

- 어장환경 조사시기(5년 주가→수시), 범위(어장관리해역→전어장) 확대 등

□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 시스템 구축

-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전담선(1,250톤급) 배치 및
관련기관 합동단속 실시

다 10대 전략품목 및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

- ◇ 전략품목 종묘생산기술 확보 및 신개념 양식기술 개발
- ◇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10대 양식전략품목 육성】

- **종묘생산 등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민·관 공동 기술 개발**
 - 참다랑어, 해삼 완전양식을 위한 인공종묘생산기술 개발
 - 참다랑어 어미를 확보하여 수정란 채집 및 부화시험 실시
 - * '11년 몰타에서 참다랑어 수정란 이식, 세계 4번째로 인공부화(45마리)에 성공
 - 한·중 기술협력을 통해 해삼 우량종묘(5g 내외) 생산기술 확보
 - 10대 전략품목별 민·관·학·연 연구클러스터를 구성, 맞춤형 양식 및 가공기술 개발 등 지원

- **다기능 육상양식방법 개발 및 양식어장 확대**
 - 소비지 인근 빌딩형 양식 등 관광·소비기능을 겸한 복합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5월)
 - * 빌딩양식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11.1~12월)
 -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외해, 갯벌 등 신규어장 개발(4천ha)
 - * 전복 2,000ha, 김·미역 1,762, 굴 140, 기타 45

- **양식용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 주산지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 건립(제주, 1개소)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

□ 서·남해안 갯벌을 활용하여 무급이·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갯벌참굴, 해삼 등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인공종묘생산, 양성 및 가공기술 집중 개발
- ‘(가칭)갯벌양식어업육성법’ 제정으로 유희, 방치된 갯벌의 종합적·체계적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 갯벌실태조사,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 갯벌어업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갯벌어업육성지구(생산, 종묘육성) 지정·운영
- ▶ 갯벌어업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 마을어업에 양식업을 허용하고, 신규인력 및 대규모 자본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권 임대차 허용 및 위탁관리제 도입

- 갯벌양식어업에 대한 임대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수산업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

□ 수출용 갯벌참굴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갯벌참굴 양식적지 조사(‘12 : 1천ha → ‘15 : 4) 및 종패생산 기술 민간이전(수산과학원 → 어촌계)
- 갯벌참굴 생산을 위한 수평망식 양식어장 시범단지(30ha) 조성
 - 종묘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모델 구축
 - * ‘11.12월 갯벌참굴 시범사업(‘12 : 40억원) 출범(태안)

라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 원양어선 현대화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원양산업 저변 확대

-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建造)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고수익성 참치잡이 어선은 대체건조(4척, 154억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오징어·꽁치잡이 어선 등은 시설 개선(1척, 10억원) 추진
- 해외진출을 통한 원양산업의 다각화 및 글로벌화
 - 양식시설·가공공장 등 해외 수산시설 인수·설립 지원(12억원) 및 투자정보·컨설팅 제공 등 종합 지원계획 수립(4월)
 -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산업의 해외 성공 사업모델의 확립·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3년 이후) 방안 연구
 - 투자기업 현지 지원을 위한 해외 개발거점 설립(3개소) 검토 등
 - 상업 조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해외 신어장 조사(2개소, 17억원)
 - 수산자원 개발 및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한 해외양식 진출
 - 권역(국가)별 투자환경, 유망 품목·기술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투자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연 협의체 운영
- 국제 자원관리 규제를 반영한 원양산업 정책 및 제도 정비
 - 허가제도 개편 등 '원양산업발전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

4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

가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 확충

【 글로벌 역량강화 】

□ 핵심 식품기술 R&D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

○ 18개* 핵심 식품기술 중심으로 R&D 지원 확대('11 : 248억원 → '12 : 290)

* 기능성 증진, 신소재 개발, 발효핵심 기술, 저탄소·융복합 가공, 식품유통기술 등

- 식품기술 연구기관간 중점연구 분야 분담을 통한 R&D 효율성 및 산업화 제고(식품 R&D 증장기 계획 보완, 9월)

* 역할(안) : 농식품부(상품화, 290억원), 농진청(원천기술, 59), 한식연(기업협업 171)

○ 식품시장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식품인력 양성 종합계획 마련(9월)

- 성장단계(진입·선도·성숙), 인재군(고급인력, 현장인력 등)별 맞춤형 교육

- 교육기관별 연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17년까지 10만명(누계) 교육을 목표로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등 기관별 연간 교육 목표 설정

-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aT 농식품유통교육원)하고, 고부가가치 식품 분야 교육 확대(신규, '11 : 4개 대학 → '12: 5개)

- **식품분야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 상생**을 위한 공조노력 강화
 - 동반성장 가능품목 대상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사업 지원**
 - * 대기업은 중소기업 협력사에 원가혁신, 품질고급화 기술 전수 등으로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자체 유통망을 통해 중소기업 유망 제품을 전국 판매
 - 식품제조업체-대형 유통업체간 **'상생발전 협의회'**를 설치(9월)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식품기업 One-stop 서비스 제공
 - 식품기업의 애로접수·상담, 기업진단·컨설팅, 자금·R&D 등 **종합지원**
 -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기업 : ('10) 946개소 → ('12p) 1,100 → ('17) 2,000
 - 해외 식품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출 대상국 **시장현황·전망, 검역, 현지업체 현황** 등 정보 수집·전파
 - 식품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안내서** 발간(3월)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단지**지정, 기업유치 활동 본격 전개
 -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12년 상반기)
 - 글로벌 수준의 기능성평가센터 등 6개* 핵심 지원시설 기본 설계 마무리
 - *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임대형공장, 파일럿플랜트, 지원센터
 -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참여기업 역량강화
 - * 덴마크·스웨덴 '외레순'의 푸드네트워크 사례 : 입주기업·기관간 협의회 구성·운영,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구성 등
 - 글로벌 선도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연중)

【 식품산업 부가가치 제고 】

- 설탕·제분·첨가물 등 '식품소재 산업 활성화방안' 마련(8월)
 - 소재별 국내외 수급 현황을 점검하여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재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 해외진출 확대 전략 수립

- 전통·발효식품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 '김치산업 종합계획' 수립(7월), 김치 품평회(11월) 등 추진
 - * 김치산업진흥법('12.1.23) 시행에 맞추어 자조금 조성 및 김치문화 확산방안 등 마련
 - 장류·소스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인 입맛에 맞는 수출용 상품개발 및 해외 판촉 지원 강화
 - 천일염 품질인증제(제품·생산방식 인증) 시범사업 추진(6월), 염전 주변 및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 마련(9월)
 - 소금산업진흥법('12.11.22) 시행에 따른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12월)
 - 술 품질인증제 확대* 및 숙성명주 프로젝트 추진(과실주·증류주, 5월)
 - * ('11)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 ('12)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추가

- 기능성 식품 및 식품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저변확대
 - 기능성 소재 DB를 기존 농산물 중심에서 수산식품까지 확대하고, 연구자 및 식품기업에게 정보 제공
 - 업체의 기능성 식품 개별인정을 위한 동물·독성시험단계 평가지원(21억원)
 - 국내 최초 포장기술 전문연구기관인 '패키징센터' 기본 설계(6월) 및 식품 기자재 R&D 지원 확대('11 : 14억원 → '12 : 20)
 - * (식품기계) 살균·제어기술, 한식 조리장비 표준화, (식품포장) 기능성·친환경 포장 등

나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

◇ 식품산업이 국내 농수산물의 핵심 수요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과의 연결고리 강화

□ 국내산 원료 조달 확대 및 식품가공 산업 활성화 추진

- 식품기업이 사용하는 국산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9월)
 - 식품기업 생산자간 원료공급 규모화 및 계약이행 안정화(농협역할 강화) 유도
 - * '식품기업(수요자)-농협중앙회(사업관리)-단위농협(공급자)' 공급망 확충
- 농어업인의 시제품 생산,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플랜트 확충(시군농업기술센터, 누계, '11 : 8개소 → '12 : 12)

□ 지역전략식품사업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성과평가(3월) 및 '13년 사업단 신규 선정(10개소, '12년 하반기)
 - 67개 사업단 대상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원(50억원)
 - *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식품을 등록·보호하는 지리적표시제와 연계강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발굴·육성('12년 200개, 누계 300)
 - 농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및 R&D·컨설팅 등 지원
 - * 농공상 융합기업 자금(172억원, 융자 3~4%), 컨설팅 지원(5억원) 및 R&D지원(20억원)
 - * '11년 선정사례 : 농업법인(주)장수채가 여주땅콩작목반과 장수채 판매(주)와 협력하여 땅콩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일괄 추진('10 : 매출 7억원 → '12목표 : 173)

다 농식품 수출확대

◇ 수출기반 확충 및 공세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농어업' 견인

- 농식품 수출 : ('10) 58.8억불 → ('11) 76.9 → ('12년 목표) 100

□ 성장 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 중점 지원

- * 신선 :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 가공 :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 수산 : 김, 넙치, 굴, 전복, 해삼 등

- 품목별 해외 타겟 시장을 선정하고, 연차별 수출지원 로드맵을 마련(상반기)하여 스타 품목으로 육성

- 전략 품목별 '수출촉진단' 운영으로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괄 지원

- 검역장벽 해소, R&D, 해외마케팅 등 우선 해결과제 발굴·지원

- * 수출촉진단 :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유통공사, 품목별 협회·단체 참여

□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생산자와 수출업체를 계열화한 품목별 수출선도조직('11 : 18개)을 수출 공동브랜드 '휘모리'와 통합(3월)하여 집중 육성

- * (사례) 팽이버섯 수출의 84%를 점유하고 있는 9개 업체가 설립한 선도조직이 품질 균일화 및 안정적 물량 공급을 통해 일본 최대 유통그룹 '이온' 진출

-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 관리 강화

- 수출 농산물 안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12년 상반기)

- 수출용 패류 해역(7개) 확대 및 수출 양식장 종사자 위생안전교육 실시

□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체크 프라이스 등 자율규제 추진

- 저가 수출 등 수출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 운영 정착

- * '11.11월 현재 사과, 배 등 주요 품목(12개)에 대한 가이드라인(가격, 품위) 운영 중

□ 개별업체 직접 지원에서 물류 경쟁력 중심의 간접지원으로 전환

○ 전문물류업체를 선정(상반기)하여 수출업체의 공동 이용 지원

* 다품목 포괄 운송이 가능한 가공식품에서 시작하여 농산물로 공동물류 확산

○ 해외전진기지(중국 청도, '12년 말 운영업체 선정) 구축 및 해외공동 물류센터 확대('11 : 5개국/9개소 → '12 : 6/11)로 수출 물류 인프라 확충

○ 저장 유통기술 활용 및 물류 최적화에 필요한 시험 운송 지원

* 예시 : 항공으로 동남아에 수출되던 쌀의 경우, 최근 살균·훈증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컨테이너로 운송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 제고

□ 주요 시장별 현지화 노력을 통해 전략적인 해외시장개척 추진

○ FTA 체결 국가 및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 지원 확대

- (중국) 동부 연안에서 중서부 내륙지방으로 시장 확대

- (아세안) 국가별 선호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관측

* 예시 : 베트남(인삼), 말레이시아(단감·딸기), 필리핀(조제분유) 등

- (미국) 교포 중심의 시장에서 현지인 마켓으로의 진입 확대

○ 수출업체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업체별 수요 조사, 지원 대상 선정 등을 관리하고, 수출지원기관(aT)과 업체 간 쌍방향 소통의 매개가 되는 정보시스템('11.10월 구축)

- 시장개척·바이어 발굴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 북미·유럽·중화권 등 권역별 대표박람회에 한국관 구성·운영('12년 총 38회)

- 해외 소비자 대상 판촉행사 지원 및 대형유통매장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대 지원

라 외식산업 진흥 및 한식세계화

- ◇ 외식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및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 ◇ 한식 세계화를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정착

□ 외식산업 경영효율화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 외식업체 시설·경영 표준화 모델개발 및 컨설팅·마케팅 등 지원
 - 지역별로 대학·연구소 등을 외식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외식프랜차이즈 평가(10월)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갖춘 외식업체 육성
- 현지 정보제공, 바이어소개, 법률상담, 해외박람회 참여지원 등을 통해 우수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진출 계획: ('11) 65개업체/1,322개 점포 → ('17 목표) 100/5,000

□ 외식업체와 산지간 연계 강화로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 지역별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4월)
 - 식품안전·위생 시설 인프라가 구비된 유망 외식업 지구에 경영 개선, 조리 교육, 홍보사업 등을 중점 지원
- *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 30% 이상, ('12) 최대 10개소 → ('17) 60(연간 10개소)
- 국내산 식재료 사용 유도 및 식재료 규격 표준화로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 구매 활성화

□ 외식산업 현황을 제공하는 '한국외식 경기지수' 조사·발표(분기별)

- 외식업체의 연매출, 종업원 수, 국내산 식재료 비중 정보를 조사하고, 3개월 후의 외식경기 예측 등 정보제공

□ **한식세계화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과 선택·집중 전략으로 내실화**

○ **시장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진출지역을 단계별로 확대**

- 지역별 정보·전략조사 및 상표권위생·통관 등의 가이드북 제공

* 진출지역 : ('10) 북미, 아시아 → ('12) 유럽, 호주 → ('14) 중동, 러시아

○ **해외 인지도가 높은 단품 위주의 상품개발 등 지원 강화**

* 5대 전략메뉴 : 비빔밥, 불고기, 갈비, 잡채, 전

○ **한식과 식문화에 대한 R&D 지원 및 국제문화유산 등재 참여**

- 고 조리서, 북한전통음식, 식생활 풍속서 등 약 900권 DB화

- 한식의 현지 적응성 제고를 위한 메뉴 개발 및 기능성 연구 확대

- 비빔밥 등 한식과 식문화의 국제문화유산 등재 (문화재청 협조)

○ **해외한식당협의체를 확대('11 : 9개소 → '17 : 20), 해외 거점으로 활용**

- 국내업체와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 및 식재료 직거래 참여

- 한식메뉴·서비스 등 경영 컨설팅과 조리교육, 표준 메뉴판 제공 등 지원

□ **국내외 한식 홍보강화 및 한식 세계화 사업성과 지표개발**

○ **마드리드퓨전 주빈국 참가(1월)를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전파하고, 한류(K-pop 등)를 활용한 음식·문화 동반 진출**

* 마드리드 퓨전('12.1.24~26) : '02년 호세 카를로스 카펠(스페인)이 창립한 전세계 요리사들의 행사로 밀라노, 뉴욕 등 요리 트렌드를 리드

○ **한식세계화 성과지수 개발(3월)로 성과평가 및 사업개선 추진**

- 국내외·국가간 한식인지도 비교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점검

2. 활력창출 · 생활안정

1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가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업 육성

◇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촉진으로 농산업의 부가가치 확대

□ 지역의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발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특화작목 재배·가공, 마케팅, 유통 등 융복합 산업화 지원

* 충북 보은(황토대추 명품화) : R&D지원, 가공제품업체 집적(제약·차·기능성식품·생활용품 등)으로 제품개발 활성화 및 수출 확대('09 : 1,428백만원 → '10 : 2,554)

○ 포괄보조사업 지원체계('10년 도입)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모델' 개발·보급(11월)

-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 '농어촌 산업박람회' 개최(6월)로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확보

* 박람회 전 지자체별 유통품평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및 유통업체 기호에 맞는 스타상품 발굴, 농어촌기업과 유통업체간 계약체결 유도

□ 농어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12월)

○ 향토산업 육성사업(완료75, 진행58)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향토산업 육성 추진성과('07~'11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10월)

○ 향토자원 및 농어촌기업과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방안 마련

* 기존 농공단지 가동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개·보수는 지속 지원

나 마을단위 공동 경영체 육성

◇ 마을단위 공동 사업 활성화로 농어촌 일자리·소득창출

○ 마을단위 경영체 : ('11) 1,400개 → ('13) 3,000 → ('15) 5,000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업체(54개소) 선정, 제품·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등 활동비 지원(개소당 25백만원)

○ 역량강화 교육·워크숍·컨설팅 지원 및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6월) 등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조직, 인재육성 등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 종합계획' 수립(10월)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실화 및 성공사례 확산

○ 공동체 유형별(자원관리·질서유지·경영개선) 구분관리 및 활동 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급(등급별 50~300백만원)

* 참여 공동체 총조사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마련 연구(2~10월)

○ 가공·유통·관광 등 공동체 사업 다각화로 어촌소득 증대

*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5개 분야(수산물가공·어촌관광·경영·유통·내수면) 컨설팅 지원(50개소) 및 우수-신규 공동체간 멘토링 지원

○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10월)

□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지 이용의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 농기계 공동이용 및 공동농작업(농지 단지화, 공동방제, 품종·재배 방법 통일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 고소득 작목 재배 등 경쟁력제고 도모

* 공동방제를 통해 10a당 쌀 생산비(농약비·유류비) 4,605원(10.4%) 절감

* '15년까지 500개의 들녘별경영체를 육성 추진('09~'11년까지 113개소 육성)

다 농어촌 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 지역별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편리·위생·안전성 등 농어촌 관광의 서비스 질 제고

- 다수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거점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마을단위 관광 인프라의 한계 극복
 - 관광자원이 풍부한 거점지역에 특산물, 향토음식, 전통문화, 자연·생태자원, 경관 등을 활용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 한방약초공원(산청군), 과일 테마공원(영동군) 등 12개 지구 신규 조성
 - 방앗간, 마을서원, 폐교 등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농어촌 문화 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9월)
 - 시범사업 지구(6개소)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4월)
-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농어촌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농어촌관광사업등급제 세부시행방안 마련(10월)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예정(7월)
 - 등급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농어촌 관광사업자의 자체적인 수준 향상 노력 유도
 - 농어촌 관광체험마을 주민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교육·컨설팅 지원(48개소, 1억원)

□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및 내·외국인 대상 적극적 마케팅 추진

- 매년 20개소(Rural-20)씩 '14년까지 대표명소 100개소 발굴
 - 관광자원의 의미·역사·가치 등 스토리가 있는 홍보·마케팅 추진
- 마을단위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10월)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마을 홍보 및 도농교류 활성화
 - *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지원(10억원, 축제당 20~60백만원)
- 테마별*로 '가고 싶은 농어촌 마을' 100선 제작·배포(6월)
 - * 농어촌 체험 마을, 워크숍·MT하기 좋은 마을, 외국인도 가보고 싶은 마을
- 스마트폰용 웰촌사이트(welchon.com) 애플리케이션 개발(10월)로 농어촌 관광 관련 실시간 정보 및 콘텐츠 제공

□ 농어업·농어촌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농어촌 체험기회 확대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1사1촌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3월)
 - 1사1촌 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대응, 초·중등 학생의 농어촌의 가치 습득 및 체험 활성화를 위한 팜스쿨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
 - * 팜스쿨 확대 : ('11) 20개교 → ('12) 30(개소당 10백만원 지원)
 -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9월)
 - 농어촌 유학센터에 교육자재 구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을 지원(2억원)하고, 사전 체험을 위한 예비 유학과정 신규 도입

라 우리 농어촌 운동

- ◇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13년 색깔 있는 마을 3천개 육성, 농어촌 리더 10만 육성, 2만 도·농연대 구성)
- 추진기구 구성, 재능기부자 확보 등 본격적인 운동 추진

- '우리 농어촌 운동'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 (중앙) '국민 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7월)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
 -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삶의질향상특별법' 개정(12월)
 - (지역) 농어촌 현장포럼('11.11월 현재, 11개 구성)을 통해 마을별 발전과제 발굴, 지역별 추진방향 설정 등의 기능 수행
 - 농어촌 마을의 유·무형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농어촌 현장포럼을 지원하는 현장활동가 육성
 - * 시·군 당 3인 이상의 현장 활동가(420명 수준)를 선정하여 교육 등 추진
- '12년에는 재능기부자 3만명을 확보('11.11월 현재 1만명)하여 농어촌에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발전 및 활력창출 지원
-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국민 참여운동* 및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우리 농어촌 운동'의 시너지 효과 제고
 -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농촌희망가꾸기운동(농협), 어촌사랑운동(수협) 등
- '색깔 있는 마을' 육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지원 연계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3월)

2 인력 육성·유입·지원 체계화

가 정예인력 육성

◇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 갈 신규인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

□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편

○ 농식품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12월)

* 농어업법인, 농기계·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6월)

- 농수산고 창업·취업 비중 확대를 위해 첨단 실습장·장비 지원

* 학교와 연계한 현장실습장 확대(64개소 → 75)

- 선도경영체의 멘토링 지원 대상 확대 : ('11) 10개교 → ('12) 16

- 농수산고 전문교사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현장 연수 실시

○ 농어업분야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영어 정착과정 운영(11개교)

○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한국농수산대 신규학과* 신설 추진

* 신규학과 예시 : 말산업, 어업학과, 임업학과, 농어촌 관광학과 등

□ 농어업계 학생,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편

○ 농고·농대 창업상담사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신설 등 창업지원 기능 강화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경영 위주에서 **현장 실습중심**으로 개편(10월~)
 -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한도 확대**(기재부 협의)
 - 농산지, 어선 / 2억원 → 농어업시설 포함 / 5억원
- **창업농 등 젊은 인력에 시설·수출 자금 및 농지매입·임대 집중 지원**
 - * 30대 이하 농업인 농지 지원면적 비율 : ('10) 9% → ('12) 16%(2,500ha)

□ **농어촌 지역개발·마을발전을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 양성**

- **도농교류·농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마을리더 및 주민, 마을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인적역량 강화교육 실시**
 - * 교육과정(예) : 마을공동체 운영, 마을발전계획 수립, 갈등관리, 리더십 등
- **농어촌 지역개발 및 마을사업 관련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6월)**

□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농식품 교육체계 개편**

- **교육기관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 *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심의·조정하는 농어촌교육심의회(위원장:장관) 설치
- **교육기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모니터링·컨설팅, 교육운영 표준지침 제정(4월), 우수교육 기관 인증(12월) 추진**
- **농어업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농어업인 교육이력 종합관리를 위한 농어업인력포털 구축(10월)**
 - * 기존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을 확대 개편

나 고소득 농어업 경영체 육성

◇ 새로운 시장 창출, 경영능력 제고,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핵심 경영체 10만 육성

○ 매출액 1억원 이상 경영체 : ('10) 3만명 → ('13) 6 → ('15) 10

□ 해외 조사, 국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신규품목 발굴·육성

○ 망고, 아보카도 등 온난화에 적응 가능한 新소득 작물 도입

* 아보카도, 용과, 석류, 올리브 등 아열대성 작목 선발(누계) : ('12) 18 → ('20) 25

* 고온 적응성 넙치·전복·미역 등 신품종 개발(누계) : ('12) 2 → ('20) 9

○ 품목별 재배방법·재배조건 등에 관한 지침서 작성·보급

* 사례) 새싹채소, 쌈배추, 블루베리, 콜라비, 미니 맛사지 오이

○ 첨단 종묘 배양장 설치, 양식장 적지 조사 등 신규 품목에 대한 사업화 모델 개발·보급

* 서해 5도 해삼삼 특화단지 사업 모델 개발(10월)

□ 동식물 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소득 증대 기여

○ 농림수산자원에서 기능성 신물질 및 의약소재 개발

* 혈압조절(홍국쌀), 뇌경막·치주막(누에실크), 여드름 치료(봉독)

○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및 산업화 소재 상품화

* 화석연료 대체 연료(해조류, 포플러), 화장품(쌀 전분), 생분해성 봉투(왕겨)

○ 고부가가치 10대 바이오 소재 프로젝트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중)

* 동·식물 미생물 활용, 천연 방부제·항생제 대체제, 바이오 향료 등 개발

□ 수출 확대 및 고소득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 '14년까지 20대 전략품목의 수출유도와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현장실습교육장과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연계하여 수출 전략 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과정 운영

○ 시설현대화단지, 브랜드경영체 등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자생적 학습조직 100개소 육성

□ 농어업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창업·전업·시설현대화 농어업인 등을 중심으로 핵심 경영체(강소농) 선발·육성(매년 20천호)

- 경영체 경영진단(1~3월) 결과에 따라 영농기술·가공·마케팅 등 기능별 맞춤형 컨설팅 및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정부 컨설팅지원단 지역담당관(167명)

* 품목별 매뉴얼(80품목) 및 농업경영교재(10종) 발간 및 보급

○ 경영체 자산 및 위험관리를 위한 1:1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

- 농협의 농업금융컨설팅과 연계하여 농장경영진단, 경영계획 수립, 투자계획의 경제성 분석 및 자금운영계획 수립

- 농어업 경영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신보 고액 보증심사시스템 개발(7월)

○ 경영혁신, 판매, 해외시장 개척, 농지거래, 시설현대화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별 전담자 지정·운영

다 귀농·귀촌 활성화

- ◇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운영

□ 도시민 유치·교육·자금지원 등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민 농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도시민 농어촌체험 사업, 빈집 임대사업, 용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등

* 지원대상 시군 : ('11) 25개 시군 → ('12p) 27

- 권역별(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등)·직업별(제대 군인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과정 : ('11) 16개 기관 / 18개 과정 → ('12) 20 / 25

- 귀촌인의 성공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영어자금 지원

- 농지구입, 시설건립, 양식장구입, 어선구입, 주택신축 등 초기 영농·영어기반 마련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융자규모 600억원)

* 선도농업인 실습장에서 영농 실습비(840백만원) 신규 지원

□ 귀농·귀촌 관련 정보·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도시민에 귀농·귀촌 관련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9월)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지원 정책, 부동산 정보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 귀농·귀촌 관련 농식품부, 지자체, 유관기관 사이트 통합·관리
 - * '11년에 구축한 '농어촌 빈집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지·농지·교육, 자금 등 도시민 주요 관심정보 추가 제공
-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관심단계에서 정착까지 단계별·맞춤형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시·군 추천을 받아 성공한 귀농·귀촌인을 현장 멘토로 활용하는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본격 운영
 - * 교육과정 : ('11) 1개 과정, 30명(시범사업) → ('12) 2개 과정(120명 내외)
- 종합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귀농·귀촌 프로그램 제작·방송(1~3월)
 -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6월), 우수사례집 제작·배포(12월)
- 귀농·귀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농어촌 주택 공급**
 - 도시의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 입주 착수
 - * 5지구 70세대 : 단양 100세대, 고창 100, 장수 100, 장성 200, 화순 200
 - 시범사업('09~'12)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본사업 추진여부 검토
 - 소규모 마을도 신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 제도개선** 추진(현행 : 20세대 이상 → 개선 : 10세대 이상)
 - '12년에 전원마을 등 신규마을 15개 지구 신규 조성 추진
 - * '04~'11년간 126지구 추진(완료 5, 건축중 42, 기반정비 34, 준비 45)

3 농어촌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가 농어촌 삶의 질 개선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교육·의료·복지·문화·교통 등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삶의 질 계획' 내실화 추진

○ 농어촌 공공서비스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준의 항목 및 목표치 수정·보완(10월)

- 농어촌 현실 및 관련사업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서비스기준 달성도 제고 방안 마련

○ 농어촌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11년도 개선 대상과제 부처·지자체별 추진현황 점검(4~10월) 및 개선과제 발굴(11월)

- 농어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담당자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를 위한 농어촌영향평가 매뉴얼 보완(6월)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 등 사무국 기능 강화

- 전문지원기관에서 삶의 질 계획 주요 정책과제의 심층평가,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 등 실시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성화 및 사무국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삶의 질 향상 계획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10월)
- **농어촌 복지·교육·의료·도로·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공모제 및 분야별 토론회** 개최(7월)
-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 농어촌 생활편의 증진 및 친환경 주거여건 조성

-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제도개선
 - 재원 조성 방법 : 국비(80%) + 지방비(20%) → 국비 (100%)
 - 지원 대상 주택규모 확대 : 100m² → 150
- 농어촌의 특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한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주택 표준모델 개발·보급**(4~11월)
 - * 농어촌 주택과 건축양식 발굴을 위한 '한국 농어촌 건축 대전' 개최(10월)
- 농어촌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빈집 6.5천동(100억원) 정비**
- 환경부와 연계하여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철거 추진**
 - * 농어촌 주택(2천동), 염전 소금창고(3천개소), 정부양곡 보관창고(20개소)
-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농어촌집고쳐주기사업**' 확대
 - * 추진 계획 : ('11) 301가구 → ('12p) 375
- 체계적인 어촌 개발을 위한 **권역별 어촌종합개발 추진**
 - * '94~'11년까지 180개 개발 완료, '12년 25개(신규 2, 계속 23) 사업 추진

나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고령농어업인, 다문화가족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강화

□ 고령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농지연금제 및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확대

- 농지연금제 인지도 제고 및 조기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맞춤형 홍보 강화

* 지원규모 : ('11) 농지연금 72억원, 경영이양직불 623억원 → ('12) 190, 659

○ 고령농어업인,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1 : 480개소 → '12 : 930)

○ 질병·사고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10일), 고령·장애·기초생활수급·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12일) 지속

□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및 의료서비스 제공확대를 위한 사회보험지원 강화

○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미가입자 발굴 및 이장회의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 강화

*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11) 870억원(219천명) → ('12) 924(230천명)

○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득·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 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

*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 ('11) 1,544억원 → ('12) 1,626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연차별로 소규모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 지급

* 보육시설 확충(10개소, 9억원), 보육교사 특별수당(42천명, 266억원)

-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무이자 용자) 지원 확대

* 장학금 지원액(인원) : ('11) 92억원 (3,984명) → ('12) 177 (13,870)

- 방송대, 사이버대 진학생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을 원격대학까지 확대

□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농어촌 정착 지원 강화**

- 지역농협을 활용, 정착초기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 기초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여성대학' 운영(500명)

- 한국 국적 취득 준비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500명)

* 교육 수료시 국적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면제 혜택

- 결혼이민여성을 정착단계에 따라 기초 영농교육(500명), 멘토와 연계한 1:1 맞춤형 영농교육(600명) 등으로 구분 실시

-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 수료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모국방문' 지원(200호)

-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정착지원과정' 운영(1,200명)

다 체계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 '先 계획·後 개발' 원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어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체계 구축

○ 농어촌 개발 관련 시·군 단위 의무계획*을 '(가칭)농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통합(농어촌정비법* 개정, 12월)

*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산어촌 종합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농어촌 경관관리 계획, 농어촌산업 육성 계획, 정주권개발 계획 등

- 농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모델을 개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및 참여 의향이 있는 시·군과 공동연구 추진(2~12월)

○ 마을·권역 단위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농어촌 정비계획제도* 도입방안 마련(10월)

* 신규개발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제도(국토계획법)를 보완하여 농어촌 지역 개발에 적합한 정비 중심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 마을 정비구역을 농어촌 정비구역으로 확대·개편하고, 유형별 농어촌정비계획 수립 지침 마련(10월)

- 농어촌정비계획은 지역개발·산업화 등을 포괄하여 수립하고, 해당 구역에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10월)

○ 지역주민 간 협약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농어촌 지역의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 도입방안 마련(12월)

- 농어촌 경관 개선·보전을 위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 추진
 - '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착수하는 일부 시·군 대상으로 **경관계획 수립 시범사업** 도입
 -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세부지침 마련·시달(5월)
 - * 농어촌 마을의 경관 관리 의욕 제고를 위해 우수 마을 선발·홍보 및 '농어촌 경관 사진전' 개최(5~10월)
 - 농어촌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 시범 운용
- 농어업·농어촌 문화보전·계승 및 지역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가칭)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추진
 - 농어업 유산 범위, 지정 기준·절차, 사후 관리·활용 방안 등 **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방안** 마련(3월)
 - 지자체(시·군)에서 신청한 향토자원에 대해 **전문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7월)
 - 농어업 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농산어촌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정주여건의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금 운영 내실화** 추진
 - 포괄보조금사업의 효과 제고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 1개소 이상 **집행점검** 실시(6~9월)
 - 농산어촌개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TV 기획홍보** 실시(7월)

4 투자 활성화

가 농식품모태펀드 확대

◇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투자조합의 확대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지원

□ 농식품투자조합 펀드조성 및 투자촉진 활동 강화

- '12년에 5개, 1,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투자조합 추가 결성
(누계 : 총 16개 투자조합, 3,300억원)
- 사업성,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림축산업, 식품산업 등 집중 투자
 - * '12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수립(1월),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3월),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선정(4월) 및 투자조합 결성(7월 이후)
- 투자조합 결성 2년 내에 결성액의 40% 이상 투자달성 추진
 - 투자설명회 공동운영 등을 위한 지자체와 투자협력 MOU 체결(5월)
 - 투자로드쇼(5월) 및 지역별 순회 투자설명회(9~10월)

□ 농식품경영체 교육·컨설팅 등 경영지원 기능 강화

- 우수 농식품경영체 발굴·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범사업 실시(4월)
 - * 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 사업 모집공고 후 10개 경영체 선정·지원
- '농식품 투자아카데미*' 과정 개설(6월)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 * 투자관리전문기관 주관 연 2회(주말 4주, 32시간) 교육 실시

나 어항·어촌 인프라 구축

◇ 어항기능 다양화, 어촌관광활성화로 어촌경제 활력증진

□ 수산업과 해양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어항개발

- 수산물 생산 및 관광·레저 기능 등을 겸비한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4개항) 추진(209억원)

* '04~'13년까지 13개항 추진 중('11년까지 8개항, '12년 3개항 완공)

- 이용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 및 정비사업 지속 추진

* '12년 국가어항 29개항 1,436억원(기본사업 9개항, 정비사업 20개항)

□ 어촌·어항을 연계한 맞춤형 어촌관광개발모델 개발

- 어항주변을 관광시설로 정비하는 어촌·어항복합공간(7개소) 및 어촌형관광단지(11개소) 조성

□ 2단계('12~'14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기존 어촌체험마을의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 '12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8개소 추진(28억원)

* '01년부터 전국 141개 '어촌체험마을' 조성중('11년까지 107개소 완료)

-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기 운영실태 평가(성공·발전가능·미흡마을)를 통해 부실마을 퇴출 등 관리 강화

* 105개 마을 중 1차('10.8) 7개 마을 퇴출, 2차('11.8) 8개 마을 퇴출

다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

◇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 수립 및 간척지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 개선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간척지 실태조사(4~9월) 및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 수립(12월)
 - 대규모 농어업회사(영산강지구) 육성에 필요한 전기시설(18천kw, 48억원)을 설치하고, 제염대책 및 기반시설 지원방안 강구(9월)
 - '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화옹지구, 15ha)을 완료하고, 농식품 수출전문 시범단지로 지정·운영
 - * '11년 기반시설 완료, 유리온실(10ha) 조성 완료('12.11월)

- 새만금 지역 내부개발로 농업용지 조성(8,570ha) 추진
 - 농업용지조성 5공구 1,513ha(대규모농어업회사법인 용지 700ha 포함) 기반조성공사 착수('12.9월, '15년 완료)
 - 잔여지역은 '13년 기본계획 수립, '15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추진

- 쌀 수급조절을 위해 타작물 재배 유도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임대정책 차별화
 -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 구역별 차별화된 작물재배
 - 자율영농구역 : 임차인 경합시 타작물 신청자 우선계약 폐지
 - 타작물영농구역 : 임차인 경합시 타작물 신청자 우선계약
 - 타작물 임대기간은 5년, 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수도작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14년 재검토

3. 소득안정 · 위험관리

1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가 직불제 확충 및 내실화

◇ 직불제 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농어가 소득지원 강화

- (신규도입) 밭농업 및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 (제도개선) 조건불리, 경관보전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 (밭농업직불제)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식량확보를 위해 도입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지·증가가 필요한 품목 대상
-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으로 쌀 직불금(평균 70만원/ha)보다 낮은 수준 지원
- '밭농업 직불제' 신규 도입을 위해 관련규정 마련 및 직불금 집행·관리 등 이행점검체계 구축(5월)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정·규칙 개정
- 작물별 재배시기를 고려하여 연 2~3회 재배여부를 현장점검하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실시

□ (수산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도입

-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조건불리지역 도서내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상연습('10~'12년)을 지속하면서 밭농업 직불제 도입 등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방향 재검토
 - 3차 도상연습(5~12월) 확대 실시 (2차 19개 + 15개 내외, 44개 읍·면, 1만호)
 - * '11년 도상연습(19개 품목) : 쌀, 한우, 콩, 고추, 마늘, 사과, 보리, 감자 등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역('12~'16년) 재선정
 - * 대상 법정리 : ('11년) 3,137개, 100천ha → ('12년) 약 3,541개, 109천ha
- (경관보전직불제) 실질적인 경관개선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체계 개선(1월)
 - 경관효과를 고려, 경관 전문가가 사업대상지를 사전심사 선정
 - 직불금 지급방식 단일화(2회 → 1), 경관작물 재배 이행조건 강화(주기적 점검을 통해 작물재배 증빙자료 구비) 등
 - * 준경관 작물 중 피종시와 개화시 2회로 나누어 집행하는 직불금을 개화시 일시 지급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추진
 - 유기·무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단가를 50% 수준 인상
 - * 논 : (유기) 392천원/ha → 600, (무농약) 307천원/ha → 400
 - * 밭 : (유기) 794천원/ha → 1,200, (무농약) 674천원/ha → 1,000
 - 유기인증 직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나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지원 강화

◇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인 재해공제 지원확대 등 재해 대비 위험관리 내실화로 농어가 경영안정 강화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시행지역·보장재해 확대

○ 대상품목('11 : 50개 → '12 : 61)을 확대하고, 일부 시범품목(7개)의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본사업, '11 : 26개 → '12 : 33)

* '12년 대상품목(61개) :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

* 전국확대 추가 품목(잠정, 7개) :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토끼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해상어류에서 내수면어종(뱀장어, 송어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12월)

○ 특정재해(태풍·우박·집중호우·동상해) 보장에서 연차적으로 모든 재해(설해·일조량·조수해 등)를 포함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검토(과수 5개 품목)

* ('13) 뽕은감 → ('14) 단감 → ('15) 사과, 배, 감귤

□ 농어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 확대 및 보상수준 다양화

* 사망시 공제금 : ('11) 농업인 50~70백만원/수산인 25~45백만원 → ('12) 50~80/25~60

□ 어업인 재해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높은 사고율로 실손보상특약 가입이 제한('06.2)되는 선외기(船外機)의 어선보험 실손보상특약 가입 허용 추진(2월)

○ 어선원보험 직업재활급여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9월)

다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활성화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간 연계 강화로 농업인 편의성 제고 및 농기계 이용 효율화 도모

- 농기계 임대사업(정부)을 확대하여 **밭작물** 생산 노동력 절감
 - **밭작물용 임대사업소를 25개소 추가 설치**(‘11년까지 220개소)
 - * 밭 농작업 임대사업 비중 : (‘11) 18% → (‘12) 25 → (‘15) 50
 -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소를 5개소 신규 지원**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자급률 제고(‘17년까지 38개 주산지 전체 지원)
 - * 고추·마늘 임대사업소(누계) : (‘12) 5개소 → (‘15) 20 → (‘17) 38

- 농기계 은행사업(농협)은 영세·고령농의 논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
 - 경운·이앙·수확 중심의 현 체제에서 **육묘·방제·벗짚결속** 등을 추가하여 **연중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
 - * 농작업 대행면적 : (‘11) 130천ha(벼 재배면적의 15%) → (‘12) 170(20)
 - 농작업을 직접 대행하는 **직영조합**을 확대하여 **영세·고령농가** 등 **취약농가**와 **산간지** 등 **한계농지** 위주로 농작업 대행 추진
 - * 직영조합(누계) : (‘11) 70개소 → (‘12) 120 → (‘15) 200

- **지자체 임대사업과 농협 은행사업의 연계 강화**로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 **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 운영으로 정보공유 및 예약·배달서비스 제공
 - * 현재는 논·밭 농기계를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희망 농기계의 임대 가능여부 확인 및 임대 예약 가능

2 동물 질병방역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

가 구제역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접종, 일제소독·예찰, 국경 검역 강화 및 유사시 신속 초동대응 체계 구축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5~6월, 11~12월) 및 새로 태어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수시접종을 차질없이 실시
 - 3종 혼합백신(O+A+Asia1형) 공급(연간 35백만두) 및 자가접종
 - 소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 동원 접종 지원(159천호, 연간 130억원)
 -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지자체장을 포함한 농가별 백신담당 공무원 실명제 운영(29천명), 월 1회 이상 농장방문 점검
 - 혈청검사 확대에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 ('11) 31천마리 → ('12) 87
 - 전국 백신 접종상황 점검·독려 및 취약지역 일제검사
- 일제소독·예찰활동 실시 및 유사시 초동대응체계 확립
 - 매주 수요일 농가·축산작업장 등 일제소독 및 방역본부 전화 예찰요원(500명)을 활용, 모든 농가 예찰활동 실시(월 2회 이상, 63억원)
 - 소규모 농가(129천호)에 대해 농협 소독전담반(400명)이 연중 소독(152억원)
 - 연 2회(6월, 10월)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및 상시 방역기구 운영
 - 위험기간 중 모든 방역기관에 상황실 운영 및 시·군별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13천명)' 편성·운영

-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연계,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도입('12년)
 - 가축전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시 축산관련차량 등의 농장 출입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역학 추적에 활용
 - * 미등록시 또는 무선인식장치 미장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범국가적 디지털 가축방역체계(KAHIS) 구축('12.10월)으로 예방·예찰 과학화와 가축질병 진단·통제기능 강화
-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민·관 가축방역기관간 가축전염병 발생 등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공유·처리 시스템 구축
 -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 가축질병 예방·예찰·진단·종합통제·사후관리 및 유전자변이분석, 시에측시물레이션 등 가능

- 축산관계자 신고·소독대상 확대 등 국경검역 강화
 - 대상확대 : 축산인(86천명)→축산관계자(608천명), 국민(필요시)
 - * 축산관계자 : 축산인,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사료판매업자, 원유수집·운반자 등
 - 구제역 유입경로별 차단검역 철저(위험노선 탐지견 집중 투입 등)

- 지자체 및 농가의 자율 방역체계 확립 및 방역의식 고취
 - 방역미흡 지자체 불이익 조치 및 지자체 매몰보상금 20% 분담
 -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 구제역 발생시 보상금 최고 80% 감액
 - 백신 미실시 농가 적발, 과태료 처분 및 집중관리
 - 농가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백신비용 일부 부담
 - ('11) 무상 → ('12) 전업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 50% 자부담

나 AI 방역 및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

- ◇ 상시 방역체제로 AI 재발 방지 및 초동대응 강화
- ◇ 방역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선진화된 수산생물질병방역시스템 정착

□ (AI) 농가예찰·소독활동 강화 및 농가 방역의식 고취

- 재발위험이 높은 36개 시·군의 사육농가 예찰 확대, 철새 도래지 점검 및 주변 농가·도로 소독 강화(특별대책기간 : '11.10~'12.4월)
 - * 예찰 : 매주 1회 전화 → 3일, 월 1회 임상시험 → 2회 ** 소독 : 주 1회 → 2
 - * 야생조류 포획검사 : 2천수 → 2.7, 분변검사 : 25천점 → 30
- 주기적·선제적인 농가 방역수칙 교육·홍보 추진
 - * (생산자단체, 농협 등) 반기별 순회 교육 및 특별대책 기간 중 월 1회 이상 교육, (지자체) 하절기(5~9월) 중 관련자 대상 워크숍 개최, 권역별 집합교육 등
- 발생시 조기 근절을 위한 초동방역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
 - 특별대책기간 이전 지자체, 방역기관 등 가상 방역훈련(CPX) 실시(10월)

□ (수산생물) 종합적인 질병관리체계 구축 및 방역 인프라 확충

- 질병관리 대상을 수산동물에서 수산생물로 확대(‘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 '11.7월)
- 양식 주산지별 전문 방역센터 확대 설치·운영 및 질병진단·실험장비 확보(전자현미경 등 12종, 30억원)
 - * ('10) 2개소(동해, 서해) → ('11) 1(중앙) → ('12) 2(남동해, 제주)
-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확대('11 : 13억원 → '12 : 14)

다 자연재해 사전대응 강화

- ◇ 내재해형 농어업시설 보급 확대, 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 강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영농·영어기반 확충
- ◇ 산사태 예측정보 강화 및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피해 최소화

□ 내재해형 농업시설 지원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

- 폭설, 강풍, 호우 등에 대비한 내재해형 시설보급 확대
 - * 내재해형 원예·축사시설 지원 : ('11) 1,692억원 → ('12) 5,499
- 여름(태풍·호우), 겨울철(폭설) 자연재해 예방·신속복구 추진
 - * 농작물·시설 관리요령 지도·홍보, 재해상황실 운영, 응급복구, 재해복구비 지원 등

□ 집중 호우 등 최근 강우패턴 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 수리 시설 보수·보강 및 지진 대책 추진

-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및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을 위해 716개 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 24천ha('12준공 4.2) 및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농촌용수개발 34천ha('12준공 2.1) 시행
- 최근 강우 패턴분석과 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조사결과(3월)를 반영, '중장기 수리시설 보수·보강계획' 수립(6월)
 - * 저수지, 양·배수장 및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조제 등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
- 내진 특등급 이상 규모 저수지 15개소 '지진계측기' 설치 완료(12월)
 - * 지진계측기 설치(2천만톤 이상) : ('10년까지) 3개소 → ('11) 4 → ('12) 8
- 집중호우, 가뭄 등에 대비, 둑 높이기 대상 저수지(113개소)에 자동수위 계측기 설치

□ 해수면 상승과 태풍 강도 증가에 따른 어항시설 안전 강화

- 어항시설의 안전성 평가결과, 취약시설에 대해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추진('14~'20)

* 안전성 평가 어항(총 81개항) : ('10) 13개항 → ('11) 51 → ('12) 17

□ 산사태 예측정보 강화 및 위험지 등을 생활권 중심개편

-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보급 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를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개편(12월)

*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 : ('11) 3개소(인제·평창·봉화) → ('12) 전국 확대

- 사방댐(695개)과 계류보전사업(416km) 등 사방사업을 주택·건물 등 주거지역 인근 산사태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

*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매수·교환 및 수용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산사태 정보체계 구축 및 취약지 지정관리 등 종합적인 산사태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선제적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현장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 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기간 연장(120일→150), 산불감시원의 봄철 집중 고용(70%→80) 등 예방활동 강화

- 산불진화 능력 제고를 위한 영상전송 시스템 시범운영('12년 2대)

- 기계화 진화장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광역산불진화단 운영(6개, 2~5월)

-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은 전국권역 지원

3

FTA/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가 FTA협상 대응

◇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FTA 전략추진으로
농수산업의 민감성 보호를 통한 개방부담 완화

- FTA 상대국별 농어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개방수준을 조절하되, 우리 농수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의 기회로 활용
 - (미국) 관련법률 개정 및 보완대책 추진 등 이행준비에 만전
 - (호주·콜롬비아) 주요 품목(쇠고기 등)의 양허는 협상의 이익 균형 등을 고려하되, 최종 타결 가능성에도 대비
 - * 쇠고기, 낙농품 등에 대하여, 한·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 중
 - (중국) 농어업 등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체계 구축
 - 품목별로 영향 추정 및 분야별 제도분석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하되,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농식품의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 *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액(317억불)중 중국이 16.1% 차지('10년, 51억불)
 - 공동연구가 완료 또는 진행중인 아시아 국가(한·중·일, 베트남, 인니)와의 FTA 협상 개시 및 캐나다, 터키 등과의 본격 협상 대비
 - 다각적 협력 강화를 통해 신규 시장 확대 및 자원 거점 확보
- 농어민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 통해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

나 FTA 보완대책 후속조치

◇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비준·발효에 대응하여 FTA 국내보완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FTA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법령 정비

- 피해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한 'FTA특별법' 하위법령 정비(3월)
 - 품목별 지급한도 설정 :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
-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축산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등 세제 지원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관계부처 협의)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

□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FTA이행 지원센터' 운영(2월~, 10억원)

- 지원센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중 지정(1월)
 - FTA협정과 관련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상담·안내
 - FTA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분석, 업무 수행

□ 지자체,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FTA 보완대책 홍보 지속

- 농수산물식품연수원 교육 과정 신설, 지역 설명회 개최 등

다 DDA협상 대응

◇ 2012년 새로운 작업방향에 따른 논의에 대비, 주요쟁점별 입장 재검토 및 양허방향에 대비

- DDA 협상이 주요국간 입장차이로 교착상태이나 '12년에는 새로운 작업방향 설정을 통해 협상이 재개·활성화될 전망
 - 제8차 WTO 각료회의('11.12월)계기에 마련된 향후 작업방향 및 협상일정에 따른 농업·수산업 협상 진전 예상
- 향후 새로운 DDA 세부원칙 논의 대응을 위해 주요쟁점별 우리 입장을 재검토하고, 협상타결 후 단계도 철저히 대비
 - 논의방향에 따른 품목별 우선순위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양허방향에 대해 지속적 검토·대비
 - 공조그룹(G33, G10)과의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 논의 대응
- 특히, 수산보조금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응
 - 금지보조금 최소화를 위해 일본, EU 등 입장유사국과의 공조하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
 - 향후 협상타결에 대비,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추진

4. 안전식품 · 안정공급

1 안전 농식품 공급

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 GAP · HACCP 등 사전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사능 · 중금속 등 잠재적 위해요소와 수입식품 감시 강화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추진

- 농협 공동선별출하회 등 생산자조직을 **GAP인증조직**으로 육성
 - 생산자조직에 대해 GAP인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병행
 - * GAP참여농가 : ('10) 34,421농가 → ('11) 36천 농가 → ('12) 40
- 농가 부담경감 및 GAP인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품목별 GAP인증심사기준**' 마련('농산물우수관리규정' 개정, '12년 하반기)

□ 축산물의 모든 유통단계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확대

- 브랜드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장~판매 모든 과정의 **일괄 HACCP 적용체제 구축**('12년 10개 시·군 축산브랜드 대상)
 - 시·군별 브랜드 경영체를 활용한 HACCP 적용 축산물 육성 및 모든 단계 HACCP 적용제품의 차별화된 표시제 도입
- 농장·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HACCP 표준 모델**' 개발·보급(12월)

□ 새로운 위해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과학적 위험평가 및 관리 강화

○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위험평가 기능의 통합·조정

- '농식품 위험평가 작업반'을 구성, 각 단계별 위해요소의 예측 및 조기 대응 체제 구축(6월)

○ 내장을 함께 섭취하는 두족류(낙지 등) 및 갑각류(꽃게 등)에 대한 중금속 위험평가 연구 및 기준 설정 검토(12월)

- 주요 품종*(10개)에 대한 중금속(9종) 모니터링 연구 추진(6월)

* 대상 : 오징어, 낙지, 문어, 꼴뚜기, 주꾸미, 대게, 홍게, 꽃게, 대하, 보리새우

○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 구축·운영

- 일본 및 태평양 연안국가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속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 방사능 분석장비(36대) 및 인력(8명) 추가 확보('12년)

□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입위험 분석체계 확립

○ 수출국의 위생·관리시스템 평가를 위한 법적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12월)

- * (현행) 수입위험평가지, 가축질병 및 위생제도 평가 병행 실시 → (개선) 가축질병 위험평가 이외에 상대국 위생관리 시스템 평가 체계 마련

○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약정 체결 확대, 2중 검사체계 구축(12월)

- * ('11) 5개국(태국·중국·인니·베트남·러시아) 6개 약정 → ('12) 6개국(대만), 7개 약정

○ 대미 굴 수출을 위해 FDA와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 갱신(6월)

나 취약분야 위생관리 강화

◇ 도축장·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관심분야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체계 개편

□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및 기준 강화

○ 오염원 제거에 중점을 둔 도축장 설비 및 위생 관리기준 정비

- 시설·장비 등의 위생관리 기준 및 생고기·부산물에 대한 검사·위생관리 지침 보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월)

○ 위생규정 위반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11월)

* 허가취소(1년 내 4회 → 3회) 및 과태료 상향 조정(300~500만원 → 500~700만원) 등

□ 폐광산·산업단지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 집중 관리

○ 관계부처(환경·지경부)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금속 오염 정보 공유를 위한 GIS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12월)

○ 폐광산(반경 2km → 6) 및 기타오염우려지역(산업단지, 매립장 등)에 대한 농지·농산물 중금속 조사 강화(‘11 : 4,800건 → ‘12 : 5,600)

□ 신규 위해요소 및 소비자 관심분야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잔류농약·항생제 중심의 조사(‘10년 전체조사물량의 93.5%)에서 방사능 핵종·병원성 미생물 등 신규 유해물질 조사 확대

* ‘12년 방사능 조사(400건→1,500), 유해미생물 조사(500건→1,000건 이상) 단계적 확대

○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학교급식, 인증농식품(친환경, GAP, HACCP)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

다 소비자 참여 및 소통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 조성

□ '농식품안전 6자 협력 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 소통 강화

* 소비자·생산자·전문가(학회)·식품업계·언론·정부

○ 현장방문, 협력사업 등 이해관계자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매분기)

○ 정책대상별 맞춤형 식품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건강식단 및 유해안전정보 등 제작(연2회)

* 실시간 교류를 위한 SNS 및 스마트 매체 활용 교류 서비스 개발(3월)

□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의 단계적 개편 지속 추진

○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계획 수립(2월), 지정 심사 매뉴얼 마련(8월) 등 인증기관 지정·관리기준 국제화(ISO 등) 및 사후관리 강화

○ 인증 농식품 및 공통 표지(logo)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단체·생산자단체·대형유통업체 등과 공동 홍보 추진

□ 소비자를 위한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음식점 원산지표시 기재 시, 글자크기 및 표시 위치 등 표준화(6월)

* 글자 크기 : (현행)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 → (개선) 음식명 크기와 동일

○ 대중적 수요가 높은 가공품(커피류, 차류 등)의 원산지 표시 확대 추진(농수산물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10월)

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 친환경 농업·축산업·어업의 생산 기반조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 개별농가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2년 : 신규 8개소/누계 42) 등으로 규모화
 -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지원 및 기술지원단 운영
 - 환경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단지 내 양분총량을 관리
 -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
-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11 : 250만톤 → '12 : 270)하고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을 축소('11 : 67만톤 → '12 : 50)하여 지력증진 도모
 - * '12년 화학비료 사용 목표량은 218kg/ha으로 '10년(232kg/ha) 대비 6% 감축
 - 겨울철 유희농경지 녹비작물 재배 확대('11 : 103천ha → '12 : 115)
 - 친환경 실천의지와 필요성이 높은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 등에 친환경비료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증대
 - * 친환경비료 품질향상을 위해 퇴비 품질등급제도 운영을 내실화
- 국내 최초로 준공('12.8월) 예정인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경기 광주)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상반기)으로 유통 활성화 도모
 -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토록 운영체계 마련
 - * 전남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신규 건립 추진('12~'15년, 289억원)

□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합동, **친환경농산물 유통모니터링** 지속
 - 인증기관별 인증실태, 사후관리실태, 인증시판품 등을 평가 분석
- **재포장취급자 의무인증제** 도입('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부정유통 개연성이 많은 재포장업체, 인터넷 판매업체 등 집중 점검·단속
 - * 품관원에 20개 단속반(지원별 1~3개)을 편성, 취약시기 테마단속
-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인증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소비 활성화**

-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농가 확대 및 지급단가 조정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12년 연구용역)
 - * 지급단가(현) : (한우) 유기 170천원/마리, 무항생제 65, (돼지) 유기 16, 무항생제 6, 지급기간: 3년
- **체험형 교육·홍보 강화**로 인지도 제고 및 친환경축산물 시장 확대

□ **친환경·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어장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 저감을 위한 **친환경어구 보급**
 - 기존 나일론 어구를 바닷물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로 전환 ('12년 30억원, 350척)
 - 규격부표(고밀도부표) 보급(1백만개) 및 굴패각 자원화(12.5만톤) 지원
- **수산물이력추적제 확대**를 통해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 * 수산물이력추적제 참여업체 : ('10) 1,100개소 → ('11) 1,230 → ('12) 1,400

마 녹색 식생활 교육

◇ '녹색식생활' 운동 2년차를 맞아 인식확산을 넘어 전국민 생활화 정착을 위한 참여 확대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민간 주도 녹색식생활 운동 확산
 - 시·도, 시·군 지자체별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구성 확대('11 : 16개 시도/10개 시군 → '12 : 16/20) 및 활성화 사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및 농어촌 우수 체험공간 지정 확대
 - * 교육기관·체험공간 선정을 희망하는 학교·단체, 농어가·마을을 대상으로 지정추진('11년도 지정현황 : 교육기관 22개소, 체험공간 72)
 - 학교·가정 내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지원
 - 방과후 교실(90개교), 농어촌 체험(25천명), 연구학교(40개교)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가정식생활수첩 보급(12월, 100만부)
- '녹색 식생활' 범국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제2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7월) 및 지역단위 박람회 개최
 - 광역시·제주도 등 7개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시군 단위 확대 검토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식단 개발·보급 및 홍보강화
 - * 일본 '녹색등 달기 운동' 등 해외 '로컬푸드 운동' 선진 사례 벤치마킹
 -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활용, 녹색식생활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4월)

2

협동조합 개혁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

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

◇ 농협중앙회를 1중앙화2지주회사(농협경제·금융지주) 체제로 전환(3.2일)

○ '20년까지 경제지주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 책임판매

* 조합 출하대비 중앙회 판매비중 : ('11) 10% → ('12) 14 → ('20) 54

□ 경제부문을 전국단위 판매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구조 정착

○ 농협의 유통·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등 인프라 확충

- '12년 청과도매물류센터 건립(안성센터 기계·설비 설치), 양곡유통센터 착공(안성),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착공(부천) 등 추진

* 투자계획(총 3조 5,899억원) : ('12) 7,791 → ('13~'16) 23,525 → ('17~'20) 4,583

○ 산지의 공선출하회 등 생산자 조직화(쌀 10만호, 원예 10, 축산 1)

○ 경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연차별 사업이관('17년 완료)

- 현행 경제자회사(13개)를 경제지주회사로 통합(3.2일) 하고, 도·소매, 농업용 자재 등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은 5년 내 경제지주로 이관

○ 경제지주-조합간 계열화를 통해 품목별 전국단위 유통시스템 구축

- 사업 완전이관 이전 농협중앙회내 경제조직은 지도·지원기능을 통합·효율화하여 원예·양곡·축산 등 품목별 전문판매조직 체제로 전환

* 쌀 판매회사(조합-중앙회 공동출자), 원예도매전담조직, 축산마케팅조직 등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일선조합 지원사업 개선
 -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방안을 제정('12.3월)하여 일선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되던 방식을 조합 판매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지원체계 변경
 -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경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 이관 일정에 따라 경제자본금으로 단계적 이관(5년 이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등을 통한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 촉진
 - 법인 설립은 산지여건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12년 11개 설립)
 - * ('12) 11개소 → ('13) 14 → ('14) 19 → ('15) 12 → ('16) 19
 - 중앙회 인력 및 자금지원(2,868억원 지분출자)으로 사업기반 마련

- 경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농협 경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평가(연 1회 이상)
 - 농식품부장관 직속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 구성·운영(3월~)
 - * 농업인단체 2명, 유통전문가 3, 농식품부 공무원 1, 중앙회 직원 및 조합장 5, 기타 4
 - 평가결과를 농협중앙회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반영 및 경영 지도 등에 필요한 조치 추진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합판매사업 확대 등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12월)

나 수협 경영개선 및 경제사업 활성화

◇ 수협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및 경제사업활성화 본격 추진

-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경영혁신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토대 마련
 - 바젤Ⅲ* 시행에 대비, 중앙회 자립경영 기반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6월)
 - * 바젤Ⅲ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적 은행 감독기준(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임
 - 일선수협 재무상태 집중 개선을 위해 경영개선목표 차등 부여(8월) 및 부실예방시스템 구축(12월)

- 협동조합 판매기능 강화 및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협 경제사업활성화 세부실천 계획' 마련(5월)
 - (중앙회) 자재 공동구매사업 및 전국단위 판매역할 담당
 - 주요품목 매취사업을 확대하고 가격안정기능 강화방안 마련
 - * 수협 매취사업 규모 : ('11) 12만톤 → ('12) 15만톤
 - (일선수협) 제값받고 팔아주는 판매 기능강화를 위한 유통 기반 구축·정비 및 상품화 능력 제고 촉진
 - 중앙회와 연계, 일선수협 수산물연합판매 사업 시범 추진

- 어촌계를 선진적 공동체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10월)
 - 생산조직에 특화된 사업개발, 어촌계 운영방식 개선 등

다 물가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비용 감축 및 직거래 등 유통경로 다양화·선진화

【농산물】

□ (관측) 조사기반 정비 및 관측 정확도 평가

-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측표본 및 모니터 재설계 추진
 - 2010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조사표본수 등 조정
 - * 시군별 경작면적 규모 증감 및 재배품목 구성비를 고려하여 조사표본 개선
- 관측 운영시스템 및 관측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실시
 - 표본 및 모니터의 응답 충실도, 관측 오차 및 만족도 등 분석
 - 평가결과에 따라 미진 항목 보완, 부실표본·모니터 교체 등 실시

□ (수급안정 시스템) 농협 계약재배 확대 및 수급조절 능력 확충

- 지역농협은 농가와 계약하여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중앙회는 판매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방식을 도입
 - 배추·무에 대해 고정가격에 의한 다년계약(3년) 방식을 시범 도입
 - * 계약규모 : ('10) 생산량의 8% → ('11) 12 → ('12) 20
- 수급의 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에 대한 재배면적과 작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념류의 국내산 비축 확대
 - * 국내산 비축율('11→'12, %) : (고추) 0 → 2, (마늘) 1 → 2

- (도매시장)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 도매유통 투명성·효율성 제고
 - 유통주체간 대금정산조직 신설(6월) 및 정가수의매매 조기 정착 유도
 - 전국 공영도매시장(33개)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3~6월)
 - 가락시장 2단계 현대화사업('12 : 549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

- (직거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직거래 활성화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aT)의 단체급식 식재료 사업 확대
 - 학교급식 외의 영역으로 B2B(어린이집, 교정시설 등) 확대
 - *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 ('10) 1,755억원 → ('11) 6,255 → ('12) 7,150
 - 규모화된 산지공급자 및 대량구매가 가능한 소비지 공동구매조직을 발굴하여 사전 예약거래 중개시스템 구축
 - *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적정가격으로 사전 예약에 의한 거래방식 정착 유도
 -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 장터 개설('11 : 8개소 → '12 : 10)

-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추천방식 등을 수급안정과 연계 운용
 - 할당관세 적용물품이 수급상 필요한 시기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3개월, 6개월 등)
 - 수급안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추천물량을 차등 배정(유제품 등)

【축산물】

□ (유통구조) 도축·가공·유통·판매의 일관유통 체계 구축

○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 통합경영체(대형Packer) 집중 육성 및 직거래 확충

- 대형 Packer를 통해 브랜드 경영체간 과당경쟁 피해 축소 및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행사에 효과적 대응

○ 축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부천, '12~'15), 농협 안심축산이 이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판매기능 확대

* 안심축산 시장점유율 : ('11) 한우 8%/돼지 0.5% → ('12) 20/7 → ('15) 50/18

□ (도축산업)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한 유통구조 합리화

○ '도축·가공·유통'의 연계가 가능한 거점 도축장을 선정·중점 지원

- 거점 도축장을 중심으로 운영자금, 도축시설 개·보수 등 정책사업 지원을 집중하고, 위생수준 및 경영관리 상태 등을 지속 평가

○ 통합 도축장 지원방식 개선*으로 도축장 구조조정 가속화 ('11 : 83개소 → '12 : 77 → '15 : 36)

* 현행 : 4개 이상 통·폐합시 지원 → 개선 : 도축 물량 고려

□ (육가공산업) 제품·기술개발 등을 통한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 휴대 등 편의성 강화제품 개발

○ 축산분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미래축산포럼'을 구성 ('12.1), 축산물 가공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 5개 분과위 : 생산성, 친환경, 식품가공, 질병방역, 신성장동력

【수산물】

□ (인프라) 수협과 연계, 산지-소비지 유통 및 물류기반 강화

- 거점 위판장과 연계, 집적·상품개발·마케팅 기능을 강화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육성('12 : 2개소 신규)
 - 자동선별기·파레트·지게차 보급 등 산지 물류자동화 확대
 - 위판장 등 수산물유통시설 위생관리기준 마련·보급(12월)
- 노량진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12~'15년 2,024억원)를 통해 입고에서 출고까지 저온물류설비 구축
 - 소비지 수산물유통 거점으로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추진 검토
 - *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후 예비타당성 등 검토
- 산지·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물류 효율화, 거래제도 개선, 가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수산물유통선진화방안' 마련(9월)

□ (수급) 비축 및 할당관세 운영을 통한 수급안정 기능 강화

- 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대상품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급격한 가격상승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오징어, 명태등 4개 주요어종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비축운용을 위해 조기, 삼치 등 대체품목 운영
 - * 수산물 비축율 : ('10) 소비량의 0.4% 수준 → ('11) 0.8 → ('12) 1 → ('15) 5
- 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 수입 할당관세 운영
 - * '12년 상반기에 고등어(1만톤) 수입 할당관세 추진

3

안정적인 식량공급

가 쌀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개선

- ◇ 쌀 소비량 감소추세에 맞추어 적정 생산 및 쌀 소비홍보를 통한 소비감소 추세 완화로 수급안정 도모
- ◇ '매취방식'에서 '수탁방식'으로 쌀 유통체계 개선 추진

□ 논 4만ha에 타작물 재배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동시 도모

○ '12년도 벼 재배면적은 금년(85만ha)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증가요인 :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종료(대상 논 6천ha), 간척지 조성(1.1천ha)

* 감소요인 : 연간 농지전용 면적(7~10천ha)

○ 타작물 재배 대상 논에 조사료, 두류(콩·팥 등) 등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이 재배되도록 유도

- 조사료 수확비 지원 확대, 생산특구 지정 등을 통해 '14년까지 사료작물 생산량을 2배로 증대('10 : 1,597천톤 → '14 : 3,138)

* 하계 사일리지 제조비용 확대 지원(3만원/톤→4만원/톤), 대단지 우량농지를 조사료 생산특구로 지정(5년간 50개소)

□ 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고품질 쌀 가공제품 개발, 식생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쌀 소비감소 추세 완화

*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치 : ('00~'09년) 2.2kg → ('09~'11) 1.2

○ (밥쌀) 소비자가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포장표시에 등급('11.11월)과 단백질 함량('12.11월)을 포함

- (가공품) **쌀밀가루(쌀함량 10%) 공급 확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로 쌀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제고**
 - * 쌀 가공업체수 : ('10) 735개 → ('11) 811 → ('12p) 850
- (교육·홍보) **합리적 식생활교육 강화,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프로젝트' 등 소비자 지향의 다양한 쌀 소비확산 운동 전개**
 - * 초등학생에게 쌀 관련 보조교재('11년 보급)를 활용한 식습관 교육 실시, 쌀 애니메이션(프랭키와 친구들) 제작·방영(3억원),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 **매년 수확기 농가와 산지유통업체간 쌀값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위해 벼 수탁거래 활성화 추진**
 - '12년 RPC 벼 매입자금의 25% 이상('11 : 20%)을 수탁매입 의무화
 - '19년까지 출하 벼 전량 수탁매입을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 추진
 - 수탁거래의 필요성 확산을 위해 **벼수탁거래 가이드북('11.10월, 20만부 보급)을 활용, '12년초부터 농업인·RPC·농협 등에 교육 실시**
- **농협사업구조 개편과 연계, 농협중앙회 주도의 대형 쌀 유통회사를 설립, 쌀을 제값에 팔아줄 수 있는 체계 구축**
 - 1단계로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간 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로 쌀 유통회사 설립('13년말)
 - 지역조합 50개 이상 참여, '20년까지 연 100만톤 판매능력 확보
 - * 자체 가공판매 50만톤(수도권 10, 지방 40), 위탁판매 50만톤
 - **산지농협과 쌀 유통회사 간에 전문화된 분업체계 구축**
 - (산지농협) 생산관리·수집·가공, (쌀 유통회사) 브랜드화·가공판매

나 쌀 가공산업 활성화

◇ '12년 가공용 쌀 소비를 40만톤까지 확대('08 : 22만톤 → '15 : 60)

- 쌀가루 생산능력과 공급대상 확대, 가공용 쌀 원료 안정조달 체계 구축, 가공기술 R&D 지원 강화

□ 쌀가루 생산 및 공급체계 현대화

○ 공장형 쌀가루 생산능력 확충으로 위생·안전성 확보, 쌀 가공식품 품질향상 도모

- 영세 자가제분 위주에서 공장형 대량 생산과 공급체계로 전환 유도

* '11년에 연간 쌀가루 소비량은 약 20여만톤 이상이나, 쌀가루 전문 제분 업체 63개소에서 5만톤 수준의 쌀가루 생산

- 쌀 가공업체의 쌀가루 생산시설 확충 지원('12년 500억원, 3%)

○ 쌀가루 혼합 밀가루(쌀밀가루) 공급체계를 확충하여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및 물가안정 기여('11 : 800톤 → '12 : 1만톤 → '15 : 10)

- 쌀밀가루 제분공장과 음식점 간 직송체계를 구축, 밀가루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공급(20kg당 밀가루 22~25천원, 쌀밀가루 16천원)

- 수도권, 음식점 위주('11년)였던 쌀밀가루 공급대상을 '12년에는 전국 대형마트까지 확대

- 쌀가루 혼합 비율 확대, 가공 용도별 맞춤형 제품 개발 및 다양한 소포장 제품 보급 등을 통해 시장에 조기 정착

* (쌀가루 혼합비율) 10% → 20, (제품 포장단위) 20kg + 1kg, 3kg, 5kg

- 쌀 가공업체가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자체 원료조달 능력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 쌀 가공업체의 다수확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 확대
 - * 가공용 쌀 계약재배 면적 : ('11) 1.6천ha → ('12) 5 → ('15p) 30
 - 생산·가공·유통주체가 참여하여 계약재배 방식으로 추진
 - ha당 1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다수확 품종 개발·보급 추진
 - 전용재배단지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정부 재고쌀을 가공용 원료로 저가에 공급('07년산 기준 밥쌀용 : 920원/kg, 가공용 : 355원/kg)

- 쌀 가공식품 품질혁신 및 신규수요 창출 등을 위한 R&D 집중 추진
 - 신제품개발·제품가공·신소재·품질제고 등 5대 가공분야의 55개 핵심기술 개발에 '11~'15년까지 700억원 투자
 - * '12년에는 30개 기술개발에 60억원 투자('11년 26개 기술, 52억원)
 - 쌀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R&D 수행체계 구축
 - * 쌀 가공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쌀 가공기술 연구협의회 구성·운영
 - 기관별로 분산 추진 중인 연구개발을 종합 조정, 효과 극대화
 - 전체 쌀 가공기술에 대한 로드맵 수립, 종합 관리체계 구축

- 쌀 가공식품 수요 확대를 위해 전시홍보·마케팅 적극 전개
 - '12년부터 쌀가공식품 전시관을 개설(농협 쌀박물관 내)·운영
 - 쌀 가공식품이 학교 등 단체급식에 납품되도록 적극 추진
 - 업체 공동 설명회 및 시식회 개최, 가공식품 급식메뉴얼 제작·배포 등
 - 쌀 가공산업 전시회(10월), 쌀떡볶이 페스티벌(5월) 등 체험·전시행사 개최

다 식량자급률 제고

◇ '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11.7월 상향조정)와 신규 설정한 '2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한 품목별 자급률 제고 대책 추진

* 곡물 25%→30, 밀 1→10, 채소 85→86, 축산물 71→71.4, 과실 66→80, 조식료 86→90

□ 품목별 맞춤형 대책 추진을 통한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

○ (밀) 국산 밀 생산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12 : 4개소) 및 수요창출을 통해 안정성장 기반 조성

- 생산량의 35%까지 저장능력 확충('11 : 12개소 → '15 : 58)

- 국산밀의 우수성,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 확대 도모

○ (채소류) 마늘 우량종구 갱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보온커튼·지열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12신규) 60ha → ('17) 3,600

* 에너지 절감시설(누계) : ('11) 2,700ha → ('12) 4,065 → ('17) 10,050(64%)

○ (과실류) 품종갱신, 비가림·방풍·방조시설 설치 등 생산시설 현대화 면적을 '17년 37.8천ha까지 확대

○ (축산물) 축사시설현대화, 방역 등을 통해 적정 사육규모 유지

- 쇠고기 : 과잉 한우 사육두수 감축 유도(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한우 암소 도태 확대 등)

- 돼지고기 : 살처분 사육두수 회복(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

○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 신규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11.12월)

-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업생산 잠재력 극대화

* 인공어초(4천ha)·바다목장(150ha) 조성 및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1억마리)

□ 수입 사료곡물을 대체하는 국산조사료 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0년 대비 '14년에 양질 사료작물을 2배 증산

○ 조사료 생산특구(10개소, 5천ha),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5개소) 조성 등을 통해 사료작물 생산면적 52%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 : ('10) 244천ha → ('11) 260 → ('12) 330 → ('14) 370(52% ↑)

* 사료작물 생산량 : ('10) 1,597천톤 → ('12) 2,522 → ('14) 3,138(97% ↑)

○ '14년까지 배합사료 대비 조사료 급여비율을 확대하여 수입 사료곡물 비중 축소 및 사료비 절감 도모

* 소 두당 사료급여량중 조사료 비율 : ('10) 45% → ('14p) 55%

□ 겨울철 유희 논에 밀, 보리,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

○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수불량 논 배수개선을 실시하여 농지 범용화 및 밭작물 재배기반 확충

* 배수불량 논 232천ha 배수개선 추진('11년까지 153.4천ha → '12년 4.2천ha)

○ '15년까지 추가로 유희농지 164천ha에 밀·조사료·녹비작물 등 재배 추진, 겨울철 논 재배면적을 581천ha로 확대

* '10년 버 재배 논 892천ha 중 겨울철 재배농지는 417천ha(47%)에 불과

□ 식량자급률 달성 정도와 자급률 제고대책 추진 상황 지속 점검·보완

○ 매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 식량자급률 달성 상황을 점검·평가(6월 점검 실시)

○ 점검·평가를 통해 파악한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시행

라 해외농림업개발 활성화

- ◇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금융·제도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농업개발 면적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 ◇ 인니·파라과이 등 8개국에 25천ha 해외조림 투자

-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면적을 2배 이상 확대('11 : 37천ha → '12 : 80*)
하고 확보 곡물의 반입물량 확대 * 수집·유통 물량의 환산면적 포함
- 동남아·동유럽 등에는 대규모 농장 개발, 미국 등 생산·유통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에는 유통망 구축에 초점
 - 동남아 : 필리핀(MIC 사업 본격 추진), 인니(MIC 사업 타당성 연구), 캄보디아 등 기타국가 MIC 진출 추진
 - 미국 : aT 컨소시엄을 통해 산지 EL 인수합병 및 수출 EL 1기 확보
 - * 미국 곡물유통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 우크라이나, 연해주 등의 곡물 유통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여건 조사 및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 기타 : 우크라이나·러시아·호주 등 민간기업 대규모 농장개발 지원
- 해외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용자조건을 석유·광물 등 수준으로 개선(3년 거치 7년→ 5년 거치 10년)
-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2월), 투자타당성 조사·교육훈련·정보수집 등 지원체계 구축
- 해외농업 진출기업과 식품·사료 등 실수요자 단체를 연계, 국내반입의 확대 유도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재정비
 - 농장개발과 유통망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여 **‘20년까지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수입량의 40%(643만톤) 확보**
 - * 민간기업(138만톤, 38만ha) 및 민·관 합작 곡물유통회사(505만톤)
 - 농장개발 및 가공·유통 등 **전·후방 연관산업 동반 진출**
 - 농진청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는 현지형 종자·기술을 개발하고, 농식품부 ODA 사업 등으로 보급 및 교육 훈련 체계 구축

-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곡물정보 시스템** 구축·활용 및 **비상 쌀 비축**을 통하여 식량위기에 대응
 - G20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곡물시장 변동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식량위기 발생시 **신속대응포럼(RRF**)**을 통해 대응
 - * 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 ** RRF(Rapid Response Forum): 식량위기사 관계국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대응방안 논의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APTERR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국회비준을 통해 아세안+3국간 비상시 식량안보 도모
 - * 13개국이 총 787천톤(한국 150천톤)을 약정, 비상시 이를 판매, 장기차관 또는 무상지원

- **해외조림지역**을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여 진출지역 다변화(8개국 25천ha)
 - 인니에 양묘·조림·가공 등 목재 펠릿 연료 공급 일관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조림** 추진 * (‘12) 대상지 선정·기본계획 수립(2만ha)
 - 남미 조림투자 거점 마련을 위한 **파라과이 신규조림** 실시
 - * (‘12) 1천ha → (‘15까지) 5 → (‘20까지) 10

마 농림분야 협력사업 확대

◇ 농림분야 협력으로 개도국 식량·산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국내 농식품 관련 기술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ODA 국별협력전략(CPS : CountryPartnership Strategy)에 따라 농림 분야 개발수요가 높고 진출기업과 연계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

* 국제농업협력사업 : ('11) 10개국(100억원) → ('12) 12개국(105억원)

○ 필리핀 농촌개발 지원,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 등 해외농림업개발과 전략적으로 연계(5개 사업, 20억원)

○ 인니·카메룬 벼농사 기계화 단지 조성 지원, 캄보디아 쌀산업 일관체계 구축 등 농산업 해외진출과 연계(4개 사업, 23억원)

○ DR 콩고·모잠비크 등 아프리카와의 에너지자원 외교를 영농 기술 전수 등 ODA로 측면 지원(4개 사업, 23억원)

□ 국제기구와 함께 식량안보, 가축질병 등 현안에 공동대응

○ FAO 등과 공동으로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 추진(2개 사업, 10억원)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FAO 구제역 통제 프로그램 도입 지원

○ 빌게이츠 재단과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농업용수 개발' 지원을 위한 수자원 지도화(mapping)사업 추진(7억원)

□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식량문제 해결 지원 및 수입 농·축산물 위생여건 향상 도모

- 아시아 개도국 대상 **방역·식품안전·종자기술** 등 역량강화(100명)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15개국 설치)** 개발 기술(씨감자 생산, 옥수수 신품종 등) 전수를 위한 **대형 시범단지 조성**(캄보디아 등 5개국)
-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아프리카 식량증산** 등 농업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한 **다자간 기술 협력 강화**

*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협약체(AFACI) : ('11) 14사업 → ('12) 18

*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KAFACI) : ('11) 18사업 → ('12) 20

□ 제10차 UN 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11.10월) 시 채택된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준비

*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축, 동북아 황사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 **아프리카·아시아 사막화 방지 및 식생복원 지원**

- 건조지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토지황폐화 방지 및 식생복원 사업, 한국의 산림녹화기술 및 녹색성장 경험 전수

* UNCCD, UNEP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지역 조림사업 추진('12년 5억원)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 국내 설치('12년), ASEAN 등 회원국 조립 및 역량강화 지원**

* 제1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11.11.18, 인니)

- 아세안 국가에 황폐 산림복구, 기술전수 및 역량강화(20억원)

* ('11) 아세안 9개국 → ('12) 아세안,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확대

- 인니 산림자원 조사 및 아세안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축('10억원)

* 산림에서 감축한 CO₂ 배출량에 대해서 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이 가능할 때 CO₂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바 수산자원 외교강화 및 협력 증진

◇ 국제수산 협상 역량 강화 및 ODA 확대를 통한 해외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 확보

□ 국제수산 협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 정비·보완

- 협상 인력·조직 보완을 위해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산협상 거버넌스 체제* 구축(3월)

* 대학, 연구기관, 업계와 함께 협상 전문인력 풀 확충 및 공동 대응 체계 마련

- 협상 대응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3월)

□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이용을 위한 전략 다변화

- 우리 어선의 조업을 직접 규제하는 국제수산규범*은 초기 논의단계부터 적극 참여·대응하는 등 규제수준 완화에 총력

* UN, FAO 등을 중심으로 최근 조업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의 규제(공해 저층 어업 관리, 부수어획 통제 등)의 신설이 계속 논의되는 추세

- 불법어업(IUU) 방지, 국제옵서버 확충 등 이행이 불가피한 국제규제는 적극 수용하여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

□ ODA 사업을 자원확보 및 연안국 경제발전의 상생형 구조로 개편

- 주요 연안국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 확대('11 : 10억원 → '12 : 16)

- 기존의 단순 물자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원(受援)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6월)
- (일본) 우리 어선의 입어규모·조업조건 개선 및 민간협력 강화
- 규제강화 예상 업종에 대한 국내 감척사업을 확대하여 입어 규모 적정화('11 : 870척 → '12p : 850)
 - 조업 금지수역·기간·어구 등 입어 규제 완화에 협상력 집중
 - 어업협의회 등 민간 창구를 통한 동해 중간수역의 자율적 자원관리 및 조업질서 기조 유지
- (중국) 중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 및 EEZ 입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등량·등척 지속 추진
- 불법 중국어선의 강력한 단속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측에 자국어선의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 촉구
 - 중대위반 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에 대한 3년간 입어자격 취소 등(9월)
 - 서해 자원 보존을 위한 과학적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추진(12월)
 -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방안 마련 및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공동 치어방류 실시 등 자원조성
- (러시아) 투자·협력 강화로 명태 등 어획쿼터의 안정적 확보
- 러시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력 및 극동 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호적 입어환경 조성
 - 러시아산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계류에 대한 '원산지 증명제도 시행(4월)
 - '한·러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6월)

4 기후변화 대응

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품종·기술개발 등 적응 역량강화

□ 단기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대응체계 구축

○ '농업관측기동반' 운영 및 농업 기상정보 제공 대상 품목 확대

* 농업기상정보 제공 품목 : ('12) 2개 → ('15) 5 → ('20) 10

○ 이상기상 대응 농수산물 재배 매뉴얼 개발·보급('12년 115품목)

□ 중장기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응역량강화

○ 온난화에 따른 작물 생산예측 및 기술개발(품종개발, 병해충 방제기술, 재배기술)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 내서성 배추·무 품종개발 : ('11) 0개 → ('12) 2 → ('20) 4

* 아보카도, 용과, 석류, 올리브 등 아열대성 소득 작목 선발(누계) : ('11) 15개 → ('12) 18 → ('20) 25

* 고온적응성 넉치, 전복, 미역 등 품종 개발(누계) : ('11) 0개 → ('12) 2 → ('20) 9

□ 기후변화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가칭)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14년부터 설치·운영예정)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12)

* 식량 생산예측, 주산지별 단기 국지성 기상예보, 실시간 작황관측 등

○ 농어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 사업간 연계방안 마련 검토

* 온실가스 감축활동(물걸러대기 등)을 직불제 지급요건으로 포함 등

나 탄소감축 역량 강화

◇ 저탄소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 및 흡수원 확대를 통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식품분야 '12년 온실가스 배출량 24천tCO₂ 감축

- '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26개)의 감축 이행중간점검(6~7월)
 - * '12년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 목표 설정(9.30) 및 이행계획서 작성·제출(12.31)
- 관리대상 식품업체들에게의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최적가용 기술 분석 및 보급 추진(10월)
- 중소 식품기업에게 인벤토리구축·명세서·이행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실시(3~6월, 5개 업체)

□ '탄소상쇄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범 도입(3월)

- (탄소상쇄사업) 탄소배출권 거래제('15년 시행)에 대비,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분(Offset)을 크레딧화하기 위한 검·인증체계 구축
 - * '12년 : 저탄소 녹색마을, 지열히트펌프 설치 농가 등을 대상으로 2건 실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마크 부여('12 : 쌀, 상추 등 5개 품목에 대해 10건 인증)

□ 조림 및 숲가꾸기, 바다숲·도시숲 조성 등 탄소 흡수 녹색공간 확충

- 한계농지 등 유휴 토지에 신규 조림 확대(1천ha) 및 숲가꾸기(25만ha)를 추진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제고
 - * '탄소흡수원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12년 하반기)
- 바다숲 840ha(159억원), 도시숲 264ha(528억원) 신규 조성

다 농어업분야 에너지 절감

◇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1 : 가온시설면적의 17% → ’12 : 25) 등을 통한 비용 절감

□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등 효율적 에너지 이용

- 중·소규모 온실에 다접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11년까지 1,880ha → ’12 : 850ha 추가)
- 노후어선 저효율 기관·장비 교체(’11 : 323척 → ’12 : 473)
및 연근해어선 감척사업(’11 : 684척 → ’12 : 624) 추진
- 시설내 국소 냉난방 기술, 농기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
오징어 채낚기용 LED 집어시스템 개발 등 R&D 추진
- 유류 사용이 많은 농가 보유 농기계 중심으로 시간계측기 부착
확대(’11 : 14천대 → ’12 : 18)로 실 사용량 확인시스템 구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농가별 영농규모를 반영한 면세유 공급

□ 온실가스 감축 및 유류사용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대규모·자동화 온실 지열난방 보급(’11년까지 460ha → ’12 : 155ha 추가)
 - * 지열난방은 경유 대비 17천만원/ha비용 절감(유가 100\$, 파프리카 기준)
- 중·소규모 온실(150ha) 및 농가주택(3천호)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 바이오부문 최초 인증제 도입으로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 * 민·관 합동으로 난방기 설치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분기별)

IV. 과제별 추진일정

[1] 체질개선 · 위험관리

1. 농수산물 생산 시스템 선진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시설원예현대화 및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연중
	▪ 수산물 정부비축	연중
1분기	▪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	1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제도개선	2월
	▪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대상자 선정	2월
	▪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2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3월
	▪ 축산업 허가제 시행을 위한 교육운영기관 지정	3월
	▪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3월
2분기	▪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4월
	▪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연차평가	5월
	▪ 수의사 처방전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6월
3분기	▪ 시설원예현대화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상황 점검	8월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 착공	8월
	▪ 수산물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	9월
4분기	▪ 농장식별번호 없는 돼지 판매·도축금지	10월
	▪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시설 착공	10~11월
	▪ 과수생산시설현대화(FTA기금)사업 전문가 워크숍	11월
	▪ 수산물 유통시설 위생관리기준 마련·보급	12월
	▪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행근거 마련	12월

2. R&D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추진	연중
	▪ 생명자원 통합정보서비스(BRIS) 제공	연중
	▪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추진	연중
1분기	▪ 우수기술사업화자금(저리·장기 융자금) 지원 공고	3월
	▪ 양잠산물종합단지 1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1~3월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사업대상자선정 공고	1~3월
2분기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사업대상자 선정	4월
	▪ 도시농업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시행	5월
	▪ 제1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4~6월
3분기	▪ 사업별 연구개발 micro road map 작성	7월
	▪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7~8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	9월
4분기	▪ 농림수산물식품 산업별 기술수준 분석조사	11월
	▪ Golden Seed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단 구성	12월
	▪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업체 선정	12월
	▪ 낚시종합 정보 홈페이지 구축	12월

3. 수산업 체질개선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자원관리형 감척전환을 위한 도상연습 실시	연중
	▪ 연근해 수산자원의 잠재생산력 조사	연중
	▪ 양식용 인공종묘생산기술 개발	연중
	▪ 해외신어장 조사 실시	연중
	▪ 노후원양어선 대체건조 사업추진	연중
1분기	▪ 어장관리해역 지정 및 어장환경 조사 강화 방안 마련	2월
	▪ 10대 전략품목별 연구 클러스터 구성	2월
	▪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집행지침 시달	3월
2분기	▪ 빌딩형 양식 등 복합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5월
	▪ 연근해어선 감척시행 도상계획안 마련	6월
	▪ 연근해 허가정수 재조정	6월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6월
3분기	▪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7월
	▪ 울진 시범바다목장 체험관 및 낚시터 준공식	9월
	▪ 배합사료 공장 착공	9월
4분기	▪ 연근해어업 어선톤수 조정(안) 마련	10월
	▪ 감척 대상어선의 감정평가 및 지원금 지급	12월
	▪ 국가어도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12월
	▪ 수산자원 조사·평가 체계 마련	12월

4.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한국외식 경기지수 조사·발표	분기별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	연중
	▪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연중
	▪ 농공상 융합형 기업육성	연중
	▪ 해외한식당 협의체 확대	연중
1분기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운영	1월
	▪ 마드리드 푸전 주빈국 참가	1월
	▪ 수출농산물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6월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1~6월
	▪ 수출지원 로드맵 작성	1~6월
	▪ 수출전문 물류업체 선정	1~6월
	▪ 식품기업지원관련 종합 안내서 발간	3월
	▪ 품목별 수출선도조직과 휘모리 통합	3월
	▪ 한식세계화 성과지수 개발	3월
2분기	▪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4월
	▪ 술 품질인증제	5월
	▪ 숙성명주 프로젝트	5월
	▪ 천일염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6월

	실천과제	세부일정
3분기	▪ 김치산업 종합계획 수립	7월
	▪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선정	7~12월
	▪ 식품소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8월
	▪ 식품업체-대형유통업체간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9월
	▪ 식품인력 양성종합계획 마련	9월
	▪ 식품 R&D 중장기 계획 보완	9월
4분기	▪ 외식 프랜차이즈 평가	10월
	▪ 김치 품평회	11월
	▪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12월

[2] 활력창출 · 생활안정

1.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어촌 재능기부 활성화 추진	연중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실태조사 및 내실화 연구용역	2~10월
1분기	▪ 1사1촌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	3월
2분기	▪ 농어촌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성과평가	4월
	▪ 농어촌 산업 박람회 개최	6월
	▪ '우리 농어촌 운동'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추진위원회 구성	7월
3분기	▪ 농어촌 공동체회사 컨설팅	7~12월
	▪ 농어촌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9월
4분기	▪ 농어촌관광사업등급제 세부시행방안 마련	10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종합계획 수립	10월
	▪ 마을단위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10월
	▪ 중장기 농어촌 산업 발전 방안 마련	12월

2. 인력 육성 · 유입 · 지원 체계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중
	▪ 귀촌인의 성공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영어자금 지원	연중
2분기	▪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성과 평가	6월
	▪ 농어촌 지역 및 마을개발 실무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운영	6월
	▪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6월
3분기	▪ 농신보 고액보증 심사 시스템 개발	7월
	▪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 재편	9월
4분기	▪ 농어업 인력 포탈 구축	10월
	▪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12월

3. 농어촌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연중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빈집 정비	연중
	▪ 결혼이민여성 정착단계별 영농교육 실시	연중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연중
	▪ 친환경·저에너지 주택 표준모델 개발·보급	4~11월
1분기	▪ 농어촌 유산제도 도입방안 마련	3월
2분기	▪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세부지침 마련·시달	5월
	▪ 농어촌 영향평가 매뉴얼 보완	6월
3분기	▪ 포괄보조사업 내실화를 위한 시·도별 집행점검	6~9월
	▪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공모 및 분야별 토론회	7월
	▪ 농산어촌개발 우수사례 TV기획홍보	7월
	▪ 농어촌 경관 사진전 개최	10월
4분기	▪ 농어촌 정비 계획제도 도입방안 마련	10월
	▪ 한국 농어촌 건축 대전 개최	10월
	▪ 삶의 질 향상 계획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10월
	▪ 마을단위 토지이용 조정제도 도입방안 마련	12월

4. 투자 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및 조합결성	4~12월
	▪ 새만금 지구 방수제 공사	연중 ('10.7~'15.12)
	▪ 새만금지역 농업용지개발 기본설계 수립(5공구 제외)	연중
	▪ 어항·어촌 인프라 구축	연중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연중
1분기	▪ 2012년 간척농지임대 추진대책 시달	1~2월
2분기	▪ 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 사업 공고 및 선정	4~6월
	▪ 간척지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4~9월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5월
3분기	▪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7~8월
	▪ 새만금 지역 5공구 기반조성공사 착수	9월
	▪ 대규모 농어업회사 전기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지원 방안 마련	9월
	▪ 지역별 투자설명회	9~10월
4분기	▪ 화옹지구 첨단유리온실 조성 완료	11월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	10~12월

[3] 소득안정 · 위험관리

1.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기계 임대 · 은행사업 실시	연중
	▪ 논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 추진	연중
	▪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	연중
	▪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인 재해공제(농업인, 수산인) 판매 등 사업추진	연중
	▪ 어선원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중
1분기	▪ 어선보험 선외기 실손보상특약 가입허용	1월
	▪ 농어업인재해공제 보상수준 및 보장범위 확대 실시	1~2월
	▪ 어선원보험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2월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 지원체계 개선	1~2월
	▪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 선정(30개소)	1월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재선정	1~3월
	▪ 농기계임대사업 사업비 지원(150억원)	3월
2분기	▪ 직불제 관련법령 정비 추진	5월
	▪ 발농업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마련	5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정보시스템 구축	6월
	▪ 농기계 임대 · 은행사업 추진현황 점검	6월, 9월
	▪ 농가소득안정직불제 3차 도상연습 현장조사 등	5~11월
3분기	▪ 농작물재해보험 '12년도 추가 품목 시범사업 실시	7~10월
	▪ 어선원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	9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지급대상자 확정	9월
4분기	▪ '13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검토	11~12월
	▪ 어선보험 선체평가액 상향조정 추진	12월
	▪ 농가소득안정직불제 3차 도상연습 결과평가 및 추진방향 재검토	12월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운영(농기계)	12월
	▪ 농기계 임대 · 은행사업 추진실적 분석 · 평가	12월

2. 동물 질병방역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구제역 백신 수시 접종	연중
	▪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조사 및 피해복구 지원	1~12월
	▪ 수리시설 개보수(716개),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 배수 개선(4.2천ha), 농촌용수개발(2.1천ha) 추진 및 내진특 등급 이상 규모 저수지 15개소 지진계측기 설치 완료	1~12월
	▪ (산림청)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추진	1~12월
1분기	▪ 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조사	1~3월
	▪ (산림청) IT기반 영상전송시스템 신규도입 · 운영	2~5월
	▪ (산림청) 산불진화단 도입 · 운영	2~5월

	실천과제	세부일정
2분기	▪ 중장기 수리시설 보수·보강계획 수립	1~6월
	▪ (산림청) 산사태예측 정보시스템 고도화(용역 완료)	6월
	▪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5~6월
3분기	▪ 국가어항 외곽시설 설계과 검토 및 안전성 평가 추진 상황 점검	10월
4분기	▪ 구제역·AI 가상방역훈련(CPX)	10월
	▪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11~12월
	▪ 범국가적 디지털 가축방역체계(KAHIS) 구축	12월
	▪ 국가어항 외곽시설 설계과 검토 및 안전성 평가 추진 완료	12월
	▪ (산림청)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보급	12월

3. FTA/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한미, 한EU 등) FTA 피해 영향 조사 분석	3월~
	▪ FTA 협상참석 및 농수산 민감성 반영 등 쟁점별 대응	연중
	▪ DDA 농수산협상 대응	연중
	▪ WTO 농업위원회 참석	연중
1분기	▪ FTA 국내 보완대책 신규 교육과정 계획 수립(연수원)	2월
	▪ FTA이행지원센터 지정 및 설치	1~2월
	▪ '11년 한·EU FTA 피해영향 조사 분석 결과	3월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3월
4분기	▪ WTO TPR(무역정책검토) 대응	11월

[4] 안전식품·안정공급

1. 안전 농식품 공급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축수산물 안전성조사	연중
	▪ 수입산·국내산 농식품 방사능 검사	연중
	▪ 인증 농식품 및 공통 표지(logo) 홍보	연중
	▪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구성확대	연중
	▪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지원	연중
	▪ GAP인증조직 육성	4월~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친환경비료 지원)	1~12월
	▪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인증 및 행정처분 현황 등록	1~12월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2012년 수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	1~2월
	▪ 민간 인증기관 사후관리 계획 수립	2~3월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대상 사업 설명회	2월
	▪ 농식품안전 6자 협력 체계 구축	3월
2분기	▪ 녹색식생활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	4월
	▪ 축산물위생관리법률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4~5월
	▪ 2012년 하반기 수입수산물 특별관리 품목 선정	4~6월
	▪ 인증기관 지정·관리 관련 국제기준 조사·검토	4~6월
	▪ 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	4~6월
	▪ 농식품 위험평가 작업반(전문가) 구성·운영	5~6월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방안 마련	6월
	▪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 갱신	6월
3분기	▪ 제2회 녹색 식생활 교육박람회	7월
	▪ 두족류 및 갑각류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결과 보고	7~8월
	▪ 인증기관 지정 심사 매뉴얼 마련	7~8월
	▪ 축산물위생관리법률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및 법제처 제출	8월
	▪ 수출국의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제도 확립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매뉴얼안 마련)	9월
	▪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9월
	▪ 친환경축산 안전 직불제 지원 대상축종 확대, 축종별 지급단가·기간 상향 조정 추진	9월
4분기	▪ 축산물위생관리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0월
	▪ 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	10월
	▪ 모든단계 HACCP 적용제품의 차별화된 표시제 도입	10~11월
	▪ 도축장 설비 및 위생관리기준 정비	10~11월
	▪ 도축장 행정처분 기준강화	10~11월
	▪ 수출국의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제도 확립 (평가 기준 및 방법 매뉴얼안 의견수렴 및 확정)	11월
	▪ 한·대만 위생약정 체결	11~12월
	▪ '품목별 GAP인증심사기준' 마련	12월
	▪ 중금속 오염정보통합시스템 구축	12월
	▪ 농장·중소업소용 HACCP 표준모델 개발보급	12월
	▪ '13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평가·선정	12월
	▪ 친환경농산물 유통 모니터링 실시	12월
	▪ 재포장 취급자 의무인증제 도입	12월
	▪ 녹색식생활 가정식생활 수첩보급	12월

2.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직거래 중심의 유통체제 확립 등을 위한 유통·판매 시설 설치(청과도매물류센터, 양곡유통센터 등)	연중
	▪ 노지채소 계약재배 추진	연중
	▪ 공선출하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연중
	▪ 사이버거래소(aT) 사업 확대	연중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평가 및 점검	3월~
	▪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구성·운영	3월~
1분기	▪ 노지채소 계약재배 추진계획 수립	1월
	▪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경제, 금융)로 법인분리	3월
	▪ 중앙회내 경제부문은 지도·지원 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조직체계 재설계	3월
	▪ 유통지원자금 운용 및 조성방안 고시	3월
	▪ 지자체 직거래 장터 개장 추진	3~10월
2분기	▪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세부실천 계획 마련	5월
	▪ 수협중앙회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방안 마련	6월
	▪ 국내산 마늘 비축·수매 실시	6월
3분기	▪ 일선조합 경제사업 역할강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6~8월
	▪ 일선수협 경영개선목표 부여	8월
4분기	▪ 일선조합 경제사업 역할강화방안 마련	11월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규모화된 산지유통 조직 설립(11개소)	12월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에 중앙회 인력 지원 및 지분출자	12월
	▪ 일선수협 부실예방시스템 구축	12월

3. 안정적인 식량 공급(해외농림어업개발 포함)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쌀 밀가루 공급확대 및 R&D 추진 (공급대상을 전국의 음식점, 대형마트까지 확대)	1~12월
	▪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고쌀 공급	1~12월
	▪ 품목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건조·저장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축사시설 현대화 등)	1~12월
	▪ 펠리핀 MIC 사업 추진	1~12월
	▪ 농업부문 국별협력전략(CPS) 점검 및 피드백	1~12월
	▪ (농진청)KOPIA, AFACI 및 KAFACI 개도국 현지사업 추진	1~12월
	▪ 쌀 안정생산 방안 및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지침 시달	1월
1분기	▪ 쌀 가공식품 상설 전시관 개설	1월
	▪ “쌀 가공기술 연구협의회” 구성	1월
	▪ 해외농업개발 용자제도 개선	1월
	▪ 벼수탁거래 활성화 관련 농업인 대상 교육	1~2월
	▪ 쌀 가공기술 로드맵 수립	1~2월
	▪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2월
	▪ 초등학생 대상 “쌀 교과서” 인정도서 추진	3월
	▪ (산림청)창원이니셔티브 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2월

	실천과제	세부일정
2분기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자 접수	4월
	▪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자금 지원	4월
	▪ 가공용 쌀 계약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4월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통보	5월
	▪ 쌀 떡볶이, 쌀면 페스티벌 개최	5월
	▪ 국내 최초 쌀 애니메이션 방영(프랭키와 친구들)	5월
	▪ 식량자급률 점검단 구성 및 자급률 달성상황 점검	6월
	▪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	6월
	▪ 수출EL 지분참여 계약	6월
	▪ 인니 MIC 타당성 조사	4~12월
	▪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재정비	6월
	▪ (산림청)파라과이 조림(300ha) 착수	4월
	▪ (산림청)인니 바이오조림 시범사업(2만ha) 기본계획수립	6월
	3분기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행점검
▪ 쌀 대표브랜드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8월
▪ (농진청)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대형시범단지 조성 추진		7월
4분기	▪ 쌀 가공산업 전시회	10월
	▪ 쌀 포장표시 등급에 “단백질 함량” 표시 시행	11월
	▪ 국제농업협력사업 자체평가	11월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조금 지급	12월
	▪ 산지EL 확보(곡물기업 M&A)	12월
	▪ (농진청)AFACI 이동성 벼 병해충 방제 국제워크숍 개최	10월

4. 기후변화 대응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탄소상쇄사업 추진	1~12월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추진	1~12월
	▪ 농어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추진	1~12월
1분기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명세서 접수 및 검토	3월
2분기	▪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선정 및 공고	6월
	▪ 농업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6월
3분기	▪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 계획” 중간점검	7월
4분기	▪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10월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① 가축질병 대응 강화		
가. 가축질병 대응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 임상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5월)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7월) ○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수립(7월) ○ 축산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0월) ○ AI 발생우려 지역 농기담당자 지정·예찰(11월) 	완료
②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가. 수급불안 품목의 가격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농식품 물가안정대책 수립·시행(1월) ○ '11년 수급안정사업 개선방안 마련(1월) ○ 기상 급변기 별도 속보 발행 등 관측강화(3월) ○ 가격불안품목 중심 할당관세 추가적용(연중) 	완료
나. 유통방식 다양화 및 유통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대책 수립(1월) ○ 가락시장 하차 경매제 시범실시(4월) ○ 산지유통 선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7월) ○ 농업인 직거래장터 8개소 신설 (10월) 	완료
다.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대응매뉴얼 제작·배포(5월) ○ 불공정거래 대응 산지조직 교육(3~9월) ○ 산지조직의 대형업체 거래내역 점검(5~6월) ○ 소비자단체를 통한 대형업체 거래관행 점검(9-10월) 	완료
③ 쌀수급 안정 및 산업화 촉진		
가. 쌀 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4월) ○ 쌀등급표시 관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4월) ○ '11년 공공비축, 12년 정부양곡수급계획 수립(8월) ○ 쌀 사이버 거래소 구축방안 마련(8월) 	완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식량자급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방안 마련(3월) ○ 주요곡물 수급안정대책 수립(4월)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재고방안 마련(7월) 	완 료
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확정(1월)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현지점검(8월) ○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모델 발굴 추진(12월) ○ 농기계은행사업 확대 및 일관작업체계 구축(12월) 	완 료
④ 재해 등 기타위험관리 강화		
가. 농림어업 재해관리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5월) ○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개정고시(7월) ○ 농업재해대책법(일보부족, 야생동물) 개정(3월) ○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등 현장점검(10월) 	완 료
나. 재해예방 기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대비 농업용수 공급대책 수립·시달(2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농업기반시설 점검(4월) ○ 저수지 및 배수장 재해대비 비상훈련(5월) ○ 수리시설 피해복구 지원계획 수립·추진(9월) 	완 료
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 수립·시행(2월) ○ 어선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수립(5월) ○ 어선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 ○ 노후어선 대체 및 기관장비 현대화 추진(연중) 	완 료
⑤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위원회 구성 및 회의(4월) ○ 농림식품분야 기후변화 기본계획 확정(5월) ○ 유해생물 발생 방지 대응체계 구축 추진(연중) ○ 농림식품분야 기후변화 세부추진계획 확정(11월) ○ 재배지 변동 예측모형 분석(연중)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탄소감축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분야 '11년 관리업체 지정(1~7월) ○ 농식품분야 '11년 관리업체 목표설정(5~9월) ○ 농식품 온실가스 통계구축 보완계획 수립(6월) ○ 온실가스 배출 통계 통합DB 구축(12월) 	완 료
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대상자 선정(1월) ○ 지열난방 설비 지원대상자 사업설명회(4월)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농가 면세유 배정준 마련(11월) ○ 기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대상자 3개소 확정(11~12월) 	완 료
6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강화		
가. 친환경 농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자 선정(1월)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착공(4월) ○ 친환경비료 지원 및 맞춤형비료 교육·홍보(연중)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현장체험(연중) 	완 료
나. 학교·지역사회를 통한 녹색식생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협의체 구성(3월) ○ '11년 식습관교육 프로그램 시행학교 선정(3월) ○ 녹색식생활 교육박람회 개최(7월) ○ 학교급식 지원 선진화방안 마련(12월) 	완 료
다.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조사(3~4월) 및 GAP시설 확충 추진(9월) ○ 수산물 생산해역 등급설정, 지정 고시 개정(1~3월) ○ 위험평가 전문기술팀 구성 및 고시 제정(5~11월) ○ 재배환경내 유해물질 안전관리방향 수립(6월) ○ 검역검사본부 설립(6월) 	완 료
라. 소비자 권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등급표시방법 제도개선(3~7월)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개선·홍보강화(4~10월) ○ 농수산물 인증제도 통합(7월) ○ 인증제 통합로고 도입추진(12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7 농식품 R&D 개편		
가. R&D 투자 확대 및 총괄 기획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 R&D 단위사업 평가(1~4월) ○ 농림수산식품 R&D 공동기획단 발족(3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4,8,12월) ○ Golden Seed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9월) 	완 료
나. R&D 실용화·산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우수기술발굴사업 추진계획 수립(3월) ○ 농식품분야 R&D 성과활용 기본계획 수립(6월)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규사업단 선정(9월) ○ 연구대행전문조직(CRO) 선정(10월) 	완 료
8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확대		
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품질인증제 시행(1월)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3월)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시범운영(7월) ○ 식품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10월) 	완 료
나.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메뉴얼 보급(1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관리 개선방안 마련(2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6·12월) ○ KOREA FOOD EXPO 2011 개최(11월) 	완 료
다. 한식세계화 및 외식산업 발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제정(9월) ○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4개소 지정(10월) ○ 해외진출 거점도시에 대한 정보조사(10월~) ○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도입(12월) 	완 료
라. 농식품 수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홍보사업 재외공관(42개) 선정(2월) ○ '11년 농식품 수출확대 대책 수립(3월) ○ 농식품 수출전진기지 구축 기본계획 수립(6월) ○ 농식품 수출확대 대규모 수출상담회(6·11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9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및 해외 농림어업 개발		
가. 국제곡물 가격·수급 불안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방안 마련(3월) ○ 해외곡물자원 개발·확보전략 마련(4월) ○ 곡물유통회사 설립(4월/미국 시카고) ○ 주요곡물 수급안정대책 수립(5월) 	완 료
나. 국제 농림수산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2월) ○ 제2차 글로벌 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2월) ○ 농림수산분야 ODA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5월) ○ 솔로몬군도 어항개발사업 타당성조사(12월) 	완 료
다. 상생적 농림수산 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양참치위원회 콜롬보회의 참석(3월) ○ 필리핀 MIC 추진 MOU 체결(11월) ○ 한·일 어업공동위 실무회의(10월) ○ 한·중 수산 고위급회담 및 어업공동협의회 개최(10월) ○ 한·러 어업위 개최(11월) 	완 료
10 지속가능한 수산업육성		
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수산자원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1월) ○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1~2월) ○ 어장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6월) ○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11월) 	완 료
나. 양식산업 성장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뱀장어 완전양식연구단 구성·발족(1월) ○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추진단 사업보고회(3월) ○ 갯벌침굴 육성장 등 적지선정 매뉴얼 마련(9월) ○ 참다랑어 양식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12월) 	완 료
다.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완료(8월) ○ 해외어장 지원조사 2개소 완료(11월) ○ 원양산업총조사 실시(11월) ○ 해외수산투자정보시스템 구축(11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11 종자·생명산업 육성		
가. 종자산업 육성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2월)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대상지 선정(4월) ○ 종자육성사업 현장점검(10~11월) ○ 종자산업법 분리를 위한 개정안 국회제출(11월) 	완 료
나. 생명자원의 확보 및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DB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2월) ○ 곤충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4월) ○ DB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8월) ○ 생명산업대전 개최(10월) 	완 료
다. 도시농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업활성화 방안 녹색성장위 제출(6월) ○ 도시농업활성화 방안 보고대회 개최(6월) ○ 도시농업육성법 마련 및 국회제출(8월) ○ 도시농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추진(11월) 	완 료
12 FTA/DDA 협상 대응		
가. FTA 협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DDA 기자간담회 개최(2월) ○ FTA/ DDA 농수협상 포럼 추진계획 수립(2월) ○ 협상동향 설명회, 간담회 개최(연중) ○ 협상참석 및 농수산 민감성 등 쟁점별 대응(연중) 	완 료
나. FTA 대응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장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7월) ○ 항상제 시료첨가금지 관련 고시개정·시행(7월) ○ 가축분뇨법 개정 임야골프장 악비 살포 허용(7월) ○ FTA 국내보완대책 분기별 점검(연중) 	완 료
다. FTA 피해보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피해보전제도 개선(안) 의견 수렴(2~3월) ○ FTA 특별법 개정 관련 협의(5월) ○ FTA 농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6월) ○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 등 하위법령 개정(10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라. DDA 협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 협상 진행동향 지역포럼 등 홍보(연중) ○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작성 논의 대응(연중) ○ 농업협상, 수산보조금협상 참석 및 대응(연중) ○ 농업협상 세부원칙 QS 작성 등 논의 대응(연중) 	완 료
13 인력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가.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수립(1월) ○ 후계어업인 지원대상 확대(985명, 3월) ○ '11년 후계농업경영인 1,271명 선정(4월) ○ '11년 후계농업경영인 워크숍 개최(4월) 	완 료
나. 농어업 교육·컨설팅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CEO MBA교육 기본계획 수립(2월) ○ '11년 농업경영컨설팅 조직경영체 선정(4월) ○ '12년 농어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심사(11월) ○ 농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12월) 	완 료
다. 귀농(어)·귀촌 지원 대책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1월) ○ '11년 귀농교육기관(16개기관) 선정(2월) ○ 귀농·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점검(9월) ○ 귀농·귀촌 안내책자 마련 및 배부(10월) 	완 료
라.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리더 맞춤형 교육(20천명,연중) ○ 공직자 워크숍 및 시·군토론회 개최(7-8월) ○ 마을협의체 및 농어촌 현장포럼 결성(10월) ○ 농어촌대표자회의 및 농어촌마을대상 개최(12월) 	완 료
14 농어촌 사회 안정		
가.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고시(1월) ○ 농어촌영향평가 지침 관련기관 통보(3월) ○ 농어촌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6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10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양육비 지원제도 변경지침 통보(1월) ○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2월) ○ 경영이양직불 제도개선(2월) 및 홍보(연중)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연중) 	완 료
다. 농어촌 맞춤형 지역개발 및 주거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지구 선정(4월) ○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기반공사 착수(6월) ○ 한국농어촌 건축대전 개최(9월) ○ 마을종합개발사업 착수권역 중간평가(10월) 	완 료
15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가.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화생자원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 확정(1월) ○ 수산인안전공제 사업시행지침 시달(1월) ○ 조피볼락 양식보험 시범사업 실시(5월) ○ 농작물재해보험 '11년 추기품목 시범사업 추진(8월) 	완 료
16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		
가. 향토자원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 지경부간 MOU체결(2월) ○ 향토산업육성사업 '10년도 사업실적 평가(3월) ○ 향토산업육성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6~7월) ○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9월) 	완 료
나.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대표 관광명소 20개소 발굴(4월) ○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6월) ○ 체험마을 수준별 등급제 도입 제도 국회제출(8월) ○ 농어촌체험마을 전국 네트워크 구축(12월) 	완 료
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 제도개선 및 추진계획 마련(1월)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개설(2월)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대상 54개 선정(3월) ○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5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17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가.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통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6월)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발 및 테스트(12월) ○ 농가소득안정직불 2차 도상연습(5~12월) 	완 료
18 민간투자 활성화		
가. 농식품 모태펀드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모태펀드 '11년 운용계획 수립(1월)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로드쇼 개최(5월) ○ 농식품 투자조합(4개) 결성(7월) 	완 료
나. 새만금 등 간척지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자 지정 추진(7월) ○ 신시휴게시설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8월) ○ 방수제 공사 등 내부개발 기반조성공사 추진(12월) 	완 료
19 협동조합 선진화		
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조개편 자원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3월) ○ 조세감면건의서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5월~) ○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특례 협의(6월~) ○ 농협 자체 자본조달계획 마련 및 협의(7월~) 	추진중
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8월) ○ 농협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안 수립(12월) ○ 경제사업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12월) 	완 료
다. 수협 경영정상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마련(4월) ○ 수협 조직·인력 구조 개편안 마련(5월) ○ 부실 및 부실우려 조합 경영개선 조치(6~7월) 	완 료
20 조직역량 강화		
가.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기능 중심 조직개편안 마련(1월) ○ 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안 확정(5월) ○ 농식품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6월) 	완 료

[별첨 1]

2012년 주요업무계획

=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 =

2011. 12.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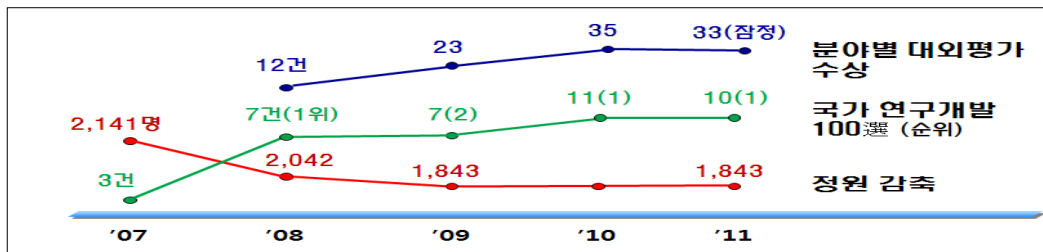
I. 실용정부 추진실적 평가	141
II. 2012년 핵심 추진과제	145
III. 2012년 주요 업무계획	146
1.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146
2. 농업인 위기관리 ▪ 생활안정	150
3. 농촌활력 ▪ 동반성장 기술보급	151
4. 국격제고 글로벌 기술협력	153
IV. 업무별 주요일정	154
<참고>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155

I. 실용정부 추진실적 평가

1. 성과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 5대 국정지표 구현을 위한 기관운영

- **(섬기는 정부 ; 조직·업무혁신)** 실용정부 출범 이후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과 업무방식 개선 등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조직 슬림화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보급 방식 전면 개편
 - * ('07) 9개 소속기관 / 2,141명 → ('08) 5 / 2,042 → ('09) 4(△5, 55.5%) / 1,843(△298, 13.9%)
 - * (연구개발) '15개 연구 어젠다' 설정 / (기술보급) '12개 지역특성화 유형' 도입
 - 현장소통 강화(방방곡곡 농촌사랑방 운영 : 55시군·14,000여명 특강, '11)
 - 연도별 대외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확대 등 조직 생산성 향상
 - * 정부업무 자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10, 총리실)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연속 1위 선정('08, '10, '11, 교육과학기술부)



- **(활기찬 시장경제 ; 미래준비·실용화)** 신성장동력 창출과 녹색 성장을 위한 R&D 영역 확대 및 현장 실용화기술 개발·보급
 - 누에고치 이용 '실크 인공고막' 개발('09), 장기 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생산(지노, 믿음이), 배추 1, 2번 염색체 해독('10)
 - 세계최초 '굳지 않는 떡' 제조 원천기술(103개 업체 기술이전) 및 열대 신소득 작물 재배기술 개발(23종)
 - 기능성 벼 등 총 694개 품종(식량 131, 원예 465 등) 육성

- 원예작물 품종 개발·보급을 위한 로열티대응연구단(6품목) 운영
 - * 로열티 대응 품종 육성('06~'11P): 316품종(딸기 16, 장미 99, 국화 99 등)
 - * 국산품종 보급률('05→'11P): 딸기(9%→68), 참다래(0→11), 장미(1→22), 국화(1→20)
- 가축 개량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 추진
 -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 ('07) 50.9% → ('08) 54.0 → ('09) 56.7 → ('10) 63.5
- **(능동적 복지; 强小農 육성)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 농촌 중산층 잠재 성장력 회복을 목표로 강소농 육성사업 본격 추진('11)**
 -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 육성을 목표('11: 15,280농가)
 - * 전문가·유관기관(농협, aT, 농어촌공사, 중기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인재대국; 과학기술 발전)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수준 제고**
 - 최근 3년간 연구성과 11,860건¹⁾의 조기 활용·보급을 추진
 -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09.10)
 - * 영농기술 활용률 : ('08) 83.9% → ('09) 90.1 → ('10) 92.1
 - 세계 최고 대비 78% 수준(세계 5위, '05: 69%)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술예측단 조사('10.12)
 - * 미국보다는 5.4년('05: 5.9) 늦고 중국에 비해 2.5년('05: 3.3) 앞섬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농업 청년리더 해외연수(367명 / '09~'11)
- **(성숙한 세계국가; 국격 제고) 상생적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 농업기술 공여를 통한 개도국 원조의 新협력모델 기반 구축
 -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15개국), 아시아/아프리카 대상 기술협력협의체(28개국)
 -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UN FAO 공인 '세계종자보존소' 지정('08)
 - * 국제유전자원협력훈련센터 지정('09) / 한반도 원산 토종자원 반환('07~'09) : 4,422점
 - 브라질의 아시아 농업협력연구센터(LABEX KOREA) 한국 유치('09)

1) 신제품 개발, 영농활용, 특허출원, 논문게재, 정책제안 등('08: 3,713건, '09: 3,841, '10: 4,306)

2. 반 성

- **(기술수요 대응 미흡)** 현장의 기술수요 충족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 및 식품 안전관리 등 분야별 대응 부족
 - 시설채소 등의 생산비 절감, 사료작물 자급 및 로열티 등
 - * 국내육성 사료작물 종자 자급률 : 청보리 36%, 사일리지옥수수 16, IRG 16
 - **발농사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율 제고 필요**
 - 환경보전 및 안전식품 수요에 부응한 **자원순환 친환경기술** 등
- **(농자재 관리 미흡)** 유통·안전·품질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부정유통방지체계 구축 등 **불량 농자재**의 효과적 관리 미흡
 - * 부정·불량 농약 적발현황 : ('08) 69건 → ('09) 91 → ('10) 87 → ('11) 139
 - 농업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사후검정체계** 확립 등 필요
- **(새로운 유형의 환경변화 대응 미흡)** 기후변화, 이상기상 상시화, 가축질병 등에 대해 사전 대응이 미흡
 - 한파, 동해, 일조량 부족, 낭충봉아부패병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질병** 발생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 미흡
 - * 이상기상 발생횟수('11) : 10회(이상기온 3, 강수 4, 일조 3)
 - 기상이변에 대한 **현장 연계 부족**으로 체계적 대응 미흡
 - 가축 전염병(구제역, AI) 대응을 위한 **종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요구
- **(마케팅·디자인 지도역량 부족)** 생산기술 중심의 지도사업 추진으로 가공기술, 유통·마케팅·농촌문화를 연계한 소득제고 지원 미흡
 - 마케팅, 디자인 등 지도역량 개발과 유관기관, 전문가 **활용** 필요
 - 개별 농가 역량 향상을 위한 **경영진단 분석** 등 **컨설팅** 요구

3. 향후 농업기술 개발·보급 방향

- **(시장개방 대응)** 한미 FTA 비준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 기술농업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및 수출농업 강화
 - 농가 「체질개선」, 「경영안정」, 「수출경쟁력」 확보에 역점
 - * 품목별 경쟁력 제고, 생산비 절감(에너지·사료비), 로열티 대응 기술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 준비
 - * 유전자원 활용, 농업생명공학, 신소재·신품종, 기능성 농산물 등 IBNT 융복합
- **(재해예방)** 농업분야 기후변화 및 재해(가축질병, 이상기상) 등 농업생산여건 악화 사전대응기술 개발 강화
 - 이상기상 및 온난화 대비 농작물 영향평가, 안정생산체계 강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 국가 주요종축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기술 강화 등 예방에 초점
 - 안정적 식량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유지기술 확보
 -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지도영역 확대)** 생산기술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 경영·유통·마케팅 접목 및 농촌어메니티 활용 등 지도사업 패러다임 전환
 - 한국형 농업발전 新모델 '강소농 경영체' 육성에 역량 집중
 - 향토자원 산업화기술 및 취약계층 활력 증진 프로그램 보급
 -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경영 혁신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 **(국제기술협력)** 대상국 확대 및 협력사업 규모화·내실화 강화
 - 기술공여를 통한 자원 공동개발 및 해외거점기반 확대
 -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대륙별 기술협력협의체(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 식량안보, 기후성장 등 국제현안 대응 국가·기구간 협력 강화

II. 2012년 핵심 추진과제

작지만 강한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



<p>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FTA 대응 ></p>	<p>농업인 위기관리 생활안정 < 안 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 농업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개발 ▶ 친환경기술 확산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 재난성 가축질병 대응 ▶ 농작물 재해관리체계 상시 가동 ▶ 농업인·농촌 삶의 질 향상
<p>농촌활력 동반성장 기술보급 < 동반성장·소통 ></p>	<p>국격제고 글로벌 기술협력 < 국 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强小農 경영체 육성 ▶ 농가소득 증대 지원 ▶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 ▶ 인력육성 및 현장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기술협력 거점 확대 ▶ 개도국 농업기술 공여 강화 ▶ 대외 기술협력 확대

창조적 조직 운영으로 농촌 중산층의 잠재 성장력 회복에 최선
= 동반성장·소통, 경쟁력 제고, 위기관리, 국격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실용정부 성과 내실화에 기여 =

Ⅲ. 2012년 주요 업무계획

1.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1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 품목별 우수품종, 상품성 향상, 수급안정 및 비용절감기술 개발로 소비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원

원예·특작 : 품종육성, 안정생산, 품질관리, 소비·수출 지원

- 재해 대응 과수품종 육성(8품종)과 우량종묘 보급 확대(5과종)
- 채소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수출용 양채류 품종 육성(4종)
- 수출용 화훼의 연중안정생산체계 강화, 소비자 선호 화훼 신품종 육성(5작목, 16품종)
- 약용작물 GAP 생산지침 확대(50작목), 수출버섯 품질관리기준 설정
- 원예시장 신수요 창출을 위한 생활원예 및 도시농업 확산
 - * 그린빌딩용 공기정화식물(100종) 및 인공지반 식재용 원예식물(110종) 선발

축산물 : 육질 고급화, 번식효율 개선, 생산비 절감

- 우수정액 생산용 씨수소 선발 확대(후보씨수소 60두, 보증씨수소 20두 이상) 및 한우암소검정사업단 운영 지원(54개소)
- 젖소 유질(乳質) 개선 및 유단백(乳蛋白) 향상 사양관리기술 개발
 - * 우유 중 유단백 향상 사양관리 기술(1종) 및 젖소 사양표준 개정발간(1종)
- 청 개발 씨돼지 보급(120두) 및 돼지개량네트워크(농식품부) 참여
- 복원 토종닭인 '우리맛닭'의 종계(5만수) 및 실용계(600만수) 보급
- 수출용 산란노계(産卵老鷄) 전용 사료 및 사양관리기술 개발
- 반려동물의 산업화 지원을 위해 승용마 및 반려견 연구

쌀 : 대체작물 도입, 용도별 품종 개발, 수출 지원

- 생산조정 지원을 위한 벼 대체작물 생산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 * 논 재배 발작물 품종 육성, 작부체계 개발, 현장실증(옥수수, 하우스 참깨)
- 용도별 품종개발(15종) 및 생산단지 조성(양조용, 쌀국수용 등), 가공식품 개발(쌀냉면, 쌀만두피, 쌀호두과자) 등 쌀 소비 다양화
- 우리 쌀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 * 건조, 도정, 유통 중 곰팡이 방지기술, 쌀 수출용 품종 '보람찬' 생산 매뉴얼 등

발작물 : 자급률 향상, 건강 기능성 구멍, 특산단지 조성

- 밀 가공 용도별 품종 다양화(면·빵·과자용) 및 생산단지 확대
 - * 원료밀 생산단지 조성 : ('11) 6개소, 1,000ha → ('12) 8, 1,200
- 콩·잡곡의 신품종 육성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성 구멍
 - * 수수(항당뇨, 항혈전), 들깨(두뇌발달), 참깨(항산화), 땅콩(심혈관질환 개선)
- 양파, 마늘 기계화 적용기술 개선 및 고랭지 배추 지대별 생산력 평가시스템 개발 등 안정생산 지원

비용절감 : 농업에너지 절약, 조사료 안정공급, 농자재 절감

- 온실 냉난방용 신재생에너지 및 LED光 이용 작물재배기술 개발
- 거대역새 활용 바이오매스타운 및 역새 재배단지 조성('11~'13)
 - * 시범단지(증식포) 조성 : 금강 용안·웅포지구(184ha / '11: 10, '12: 174)
- 가축분뇨 이용 자원순환 녹색기술 실증마을 준공('12.6월, 김제)
- 국산 조사료 품종 보급 확대(사료용 옥수수 논 재배 실증 : 5개소, 25ha)
- 화학비료·농약 대체를 위한 녹비작물, 미생물, 토착 천적의 이용기술 실용화 및 맞춤형 비료 시용에 따른 생물 생육효과 평가

2 성장동력 확충 농업녹색기술 개발

◇ 우리 농업을 최첨단 기술과 과학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분야 성장동력기술 개발

종자산업 육성 : 유전자원 활용 종자산업 육성 지원

- 농업유전자원 수집, 종자증식 및 특성조사 확대
- 로열티대응연구단(6품목)을 통한 국산품종 육성·보급 및 해외 출원(7개국, 96품종)·적응시험(6개국, 30품종) 등 로열티 확보 노력
- 보유 유전자원 일반분양 확대 : ('11) 15천점 → ('12) 20

신소재 개발 : 동식물 자원 활용 산업 신소재 개발

- 농산물의 기능성분을 활용한 식품소재 개발(고혈압 예방 '홍국쌀')
- 곤충 등 잠사양봉 유래물질 이용 의약소재 개발(뇌경막, 치주막)
- 농축산 부산물 활용한 기능성 산업화 신소재 추진
* 쌀 전분 → 화장품 소재, 왕겨·쌀겨 → 생분해성 제품(쓰레기 봉투, 계란용기)

생명공학 실용화 : 기초기반연구,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 농생물 유전체 해독 연구 등 생명공학분야 원천기술 확보
- 기능성 작물 및 바이오장기·신약 생산용 형질전환 돼지 개발
* 의약품 단백질 생산 쌀(1종), 면역거부반응 제어 복제미니돼지(1종)
- 국내 개발 GM작물 안전성 평가(3종) 및 평가 가이드라인 제작(2종)

첨단융합 / 식품 : 농업의 자동화·무인화 및 식품산업 지원 R&D

- 자동화·인공광기술 도입 빌딩형·수직형 식물공장 운영기술 정립
- 무인제초로봇, 비파괴 품질 판정장치 등 농작업 자동화연구
- 한식의 건강 기능성 확산, 전통발효식품 산업화(전통주 복원:3종)

3 친환경기술 확산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지속 가능한 생명농업 실천을 위한 자연 순환형 저투입 유기농업기술 확산 및 안전 농축산물·농자재 생산·관리기술 개발

친환경 기술 :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유용 미생물제 개발·보급

- 토양조사 및 양분관리기술 개발로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
 - * 토양조사 : 친환경지구(16지구), 토지변화 심화지역(이천)
-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표준 시비량 설정(3작물)
 - * ('10) 대추, 오미자 → ('11) 자두, 무화과 → ('12) 살구, 산수유, 팔
-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촉진용 유용 미생물제 개발
- 유기농기술 현장실증(7지역, 4작목) 및 교류 네트워크 확대(200농가)

농산물 안전 : 안전 농축산물 생산·관리기술 개발

-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 * 잔류농약 표준분석기술 개발(과실류, 엽채류), 약용작물 GAP지침서 보급(총 50종)
- 축산물 생산·공정 단계별 유해요소 진단 및 관리기술 개발
 - * 주요 식중독균(10종), 바이러스(5종)의 동시 진단·분석법 확립
- 작목군별 생산·수확 후 단계 유해요소 중점관리점(CCP) 설정
 - * ('12) 과실류 → ('13) 곡류 → ('14) 엽채류 → ('15) 과채류

농자재 관리 : 품질·안전 및 유통관리 강화

- 농자재 품질관리 : 농약(300점), 비료(600점), 친환경자재(100점)
- 친환경 농자재 민간품질인증기관 육성(북부·중부·남부 각 1개소)
- EU·미국 금지농약 중 미평가 농약 재평가 : 48종('14 완료예정)
- 정부지원 퇴비의 품질등급 평가 및 불량 농자재 유통관리 강화

2. 농업인 위기관리 · 생활안정

◇ 농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과 농업인·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

기후변화 : 이상기상 상시화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확충

- ※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 0.7℃ 상승(한국 6대도시 1.7℃로 세계 평균의 2배)
- 평가·조기경보기술 개발로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 농업생산기반 취약지도 작성(~'13), 농업기상정보 웹서비스(3회/월)
- 기상재해 적응 품종 개발 및 열대 신소득 작물 적응성 평가
- 탄소저감 재배기술 개발 및 돌발 병해충 관리

가축질병 : 구제역, AI 등 재난성 질병 및 동물복지 연구 강화

-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율 평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동) 및 주요 가축유전자원의 질병전파 위험요소 실태조사('12~'13)
- 살처분 대상가축 안전 처리 및 환경위해 저감기술 개발('11~'12)
- 사육환경 개선, 오염방지 친환경 축사시설 등 동물복지 연구
 - *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설정('12: 양돈, '13: 한우)

재해관리 : 재해관리체계 상시 가동으로 이상기상 피해 최소화

- 「영농종합상황실」 연중 운영으로 기상재해에 상시 대응
 - * (평시) 농작물 생육상황 등 조사, (기상특보시) 재해대책상황실 전환
- 농작물 재해예방 관리기술 정기 발표 등 기술정보 제공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업무 총괄(식물방역법 개정)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건강관리, 농촌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지원

- 농부중 예방 등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작업 재해경감기술 개발
 -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26개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141개소)
- 농촌노인·여성·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
 - * 농촌건강장수마을(163개소), 농촌여성교육, 다문화가족 자립방안 연구

3. 농촌활력 · 동반성장 기술보급

1 强小農 경영체 육성

◇ 10만 강소농 육성목표(~15) 달성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와 농촌 중산층 잠재성장력 회복에 노력

경영체 육성 : 육성대상 선정 · 경영진단 · 맞춤형 컨설팅

- 2012년 육성대상 2만 경영체를 선정, 경영진단 실시(1~3월)
 - * 육성대상 선정 : ('11) 15,280 경영체 → ('12) 20,000
- 진단결과에 따라 영농기술·가공·마케팅·창업지원 등 기능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드림컨설팅지원단·지역담당관(167명) 운영, 연구기관별 전문기술 지원 등
- 경영체 규모·기술수준·성장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병행
 - * 품목별 매뉴얼(80품목) 및 농업경영교재(10종) 발간 및 보급

성과 확산 : 경영혁신 모델농가 성공사례 확산

- 강소농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경영혁신 모델농가' 육성
 - 2011년 육성 대상(15,280개) 중 경영혁신성과 우수 경영체 800개소를 혁신모델로 육성, 전국적으로 성공사례 확산
 - * 15,280개 경영체 대상 농업소득 향상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2월)

사업기반 확충 : 강소농 육성 R&D, 유관기관 협력 확대

- 소규모 농가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접목연구 추진(40과제)
- 강소농 창업지원 농공상융합엑스포 개최(중기청·식약청 공동, 6월)
- 경영·마케팅 등 강소농 육성 전문가 풀 운영(3,621명)

2 농촌 활력화 기술보급 및 소통 확대

◇ 농촌자원의 소득화, 인력육성 등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생활을 위한 지도사업 추진과 현장과의 소통 확대

소득향상 : 지역별 농촌자원 특성화로 소득향상 지원

- 지역별 특성화 품목을 선정,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 지원
* ('11) 80시군(기존 30, 신규 50) → ('12) 77시군(기존 47, 신규 30)
- 농가단위의 농식품 가공·외식형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 농업인 창의적 손맛사업(21개소 / 총 156), 농가맛집(10개소 / 총 74)
-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접목한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 체험마을네트워크(69개소), 학교 교과과정 연계 '농촌교육농장' 조성(357농장)

신기술 보급 : 개발 신기술 보급 및 농업인 기술개발 지원

- 현장 수요가 많은 신기술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80종, 687개소)
* 분야별 : 시책추진(216개소), 소득기술(255), 친환경(125), 농촌생활(91)
- 최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탑 프로젝트」 추진
* 쌀(70,000ha), 과일(6품목, 1,600ha), 과채(5품목, 150ha), 잡곡(1,500ha)
- 맞춤형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농업인 기술개발 수행 지원(120과제)

인력육성 :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연구모임 활성화

- 농업인 경영규모·기술수준·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 농업인대학(136개소), 새해영농실용교육(300천명), 청 교육기관 운영(122과정)
-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지역의 벤치마킹 모델로 육성(146천명)

소통 확대 : 농업인·농촌 현장접점 소통 강화

- '방방곡곡 농촌사랑방'(청장), '영농현장 모니터단' 운영(186명)
- 영농현장 순회전담팀 '농촌현장지원단' 상시 운영

4. 국격제고 글로벌 기술협력

◇ 우리나라의 선진농업기술 및 지도사업 경험 전수 등 전략적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해외농업 기술개발 및 국격 제고

거점확보 : 개도국 중심 해외진출 발판 마련 및 인재 양성

- 기술지원, 개발 거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운영(15개국)
 - * 설치국과의 공동협력사업(19과제), 현지 대형 시범단지 조성(5개국)
- 해외농업개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청년리더 선발, 장단기 해외파견 실시(1~6개월, 250명)
- 외국인 기술훈련 확대로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 강화(350명)

기술공여 : 개도국 농업기술 공여를 위한 대륙별 협의체 주도

-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2) 협력사업(18사업)
 - * 기후변화 대응, 이동성 벼 병해충 방제 등 다자간 농업현안 해결사업 위주
 - * 총회개최(5월), 성과공유 기획회의(3회), AFACI 국제워크숍(10월)
-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3) 협력사업(20사업)
 - * 벼·옥수수·감자 등 육종·재배기술 및 가축 인공수정기술 전수(16개국) 등
 - * 「아프리카 농업기술이전센터」 구축, 프로그램 개발 추진(에티오피아, '12~)

대외협력 : 첨단기술 도입, 국제현안 대응 대외협력 강화

- 자원부국 및 농업녹색기술 강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 * 자원도입 : 페루(끼누아 작물 등), 러시아·브라질(농업유전자원 교환 등)
- 국제농업연구기관·기구와의 협력 강화(8기관, 상주연구원 11명)
 -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RM)과의 협력 등
- 농진청 - 브라질 농업연구청(EMBRAPA) 공동 워크숍 개최(4월)

2) AFACI :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09.11월 출범, 12개국 참여)

3) KAFACI :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10.7월 출범, 17개국 참여)

IV. 업무별 주요일정

	주요 세부업무	일정
1/4 분기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소농 육성농가 농업소득 조사	1~2월
	▪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1월
	▪ 농식품부 공동 녹색농업기술 수요조사	2월
	▪ 기후변화 등 국제농업쟁점 대응 보고회	2월
	▪ 아프리카 농업기술이전센터 설립 준비단 파견	2월
	▪ 실시간연구관리비시스템 시범운영	3월
	▪ 탑프로젝트 성공다짐 대회,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3월
2/4 분기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등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	4월
	▪ 브라질 농업연구청과 공동 워크숍, KOPIA 고위직 연수	4월
	▪ 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5월
	▪ AFACI 총회(2차), IRRI 및 CAAS와의 기획회의	5월
	▪ 한국 미래농업 기술 로드맵 발표	5월
	▪ 자원순환 녹색기술 실증마을 준공, 농공상 융합 엑스포 개최	6월
	▪ 전국생활개선회 로컬푸드대회, 농업(인)대학 프로그램 보급	6월
	▪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CGIAR 개편 대응 심포지엄	6월
하반기	▪ 연구개발 어젠다 과제제안요청서 작성, 진도관리, 결과평가	7~12월
	▪ 주요 작물 생육조사 결과 분석 및 자료 제공	6~10월
	▪ 2012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	8~12월
	▪ '13 신규 KOPIA센터 선정(5개국), AFACI·KAFACI 학술행사	9~10월
	▪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발간, 농업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9~10월
	▪ 탑프로젝트 품평회·전시·판매·홍보 행사	9~12월
	▪ 2012년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11~12월
	▪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12월
연 중	▪ 연구개발 어젠다 운영위원회, 연구사업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연중
	▪ 강소농 선정농가 맞춤형 컨설팅	연중
	▪ 돌발·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예찰·방제단 운영	연중
	▪ 「농촌현장지원단」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연중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① 친환경 기술 확산 및 농식품 안전성 향상		
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방제 「유기농 손쉽게 따라하기」 발간(4,000부) 및 교육(2회) ○ 액비부속도측정기 기술이전, 보급(10월) ○ 아시아 유기농업기술 국제 워크숍(9월) ○ 농산물 중 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독소 모니터링(620종) ○ 유해미생물 신속분석기술 개발(7일→5시간) ○ GAP 인증 기술 교육(178명) 	완 료
나. 농자재 안전관리 및 농작업 재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 품질등급 평가(105종) ○ 부정자재 단속(1,419개소, 위반 220건) ○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 개최(2회) ○ 농약 전문위원회(품목·안전성) 개최(4회) ○ 친환경 농자재(병해충 관리, 식물생육) 전문위원회 개최(4회) ○ 농작업 안전관리아이디어 공모(27건) ○ 농작업 재해예방 체험 프로그램 개발(5건) 	완 료
②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가. 식량 수급안정과 부가가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위기 대응팀 운영(1반, 5팀, 15명) ○ 「식량위기 대응 쌀의 역할 증대 심포지엄」 개최(5.12, 133명) ○ 쌀 생산 조정 벼 대체작목 재배기술 현장 실증(5작목, 23품종, 13개소) ○ 식량자급률 제고 작부체계 개발(9작목)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FTA 대응 로열티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컨설팅(48회) ○ 신품종 신기술 현장평가· 품평회(23회) ○ 수출용 국제기호성 우량 계통 선발(40종) ○ FTA 대응 신품종 우량 품종 및 계통 특성 조사(50종) ○ 직무육성심의회 우수계통 품종선발(60종) ○ 원예작물 로열티 지불실태 분석(10품목) 	완 료
다.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씨수소 선발(한우 8두) ○ 종계장, 종돈장, 인공수정센터 인증(5개소) ○ 축진듀록 농가보급(119두) ○ 항생제 저감 사육기술 농가교육(20명) ○ 전국사일리지 품질 경연대회(9월) ○ 자연치즈 콘테스트 개최(11월) 	완 료
③ 미래 대비 농식품산업 신성장동력 확충		
가. 유전자원 활용 종자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원 등록심의위원회 개최(4회) ○ 소량 저활력 유전자원 증식(30천점) ○ 약용·영양체식물 기능성 검정(500점) ○ 이용형질 특성평가(도열병 등 1,000점) ○ 로열티 확보 국산품종 해외출원(15종) ○ 육종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 종자분양(40건), 유전자검정(1,520점) 	완 료
나. 생물자원 기능성 신소재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바이오겔 생산기술 기술이전(2개소) - 인공피부(1종) 및 화장품(4종) 개발 ○ 잠상산물 신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 실크 뇌경막 및 치주막 소재(2종) - 누에 생실샘 색조용화장품 시제품(3종) ○ 봉독 함유 여드름 치료 시제품 제작(3종)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다. 생명공학 실용화 및 융복합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인삼 및 연근판별기술 특허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판별(국내특허), 연근판별(국제특허) ○ 벼 종자 활용 혈전용해 단백질 분리(4종) ○ 급성 위막성 대장염치료용 펩타이드 국제특허 출원 ○ 바이오장기 형질전환돼지 생산(2두) ○ 식물공장 연구동 개관(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형 유리온실(50㎡), 빌딩형(396㎡) 	완 료
라. 식품산업 및 발효가공 기술 실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성분표(8개정판) 발간 ○ 고문헌속 전통주 제조법 책자발간(1건) ○ 전통향토음식 조리서 발간(1종) ○ 발효미생물 활용 장류제조기술 개발(2종) ○ 맞춤형식품성분표 및 기능성 성분표 발간(2종) 	완 료
마. 농업에너지 절감 및 대체에너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공기 냉난방시스템 농가현장 설치 및 냉난방 성능분석(1개소) ○ 화력발전 폐열회수 시스템 냉·난방 성능시험(서귀포 망고재배 온실) ○ LED인공광 실증적용(20작물) ○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거대역새’ 증식 포장 조성(금강 용안지구, 10ha) 	완 료
④ 기후변화 대응 연구 강화		
가. 기후변화 평가·예측 및 감축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작물 작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마늘) ○ 작물 재배지 변동 지도 작성(7작목)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12종) ○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36종) ○ 한·육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탄 배출량(한우육성우 29.9kg/년)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및 위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온적응 내재해성 품종개발(5과종) ○ 아열대 유전자원 수집평가(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크라 기능성 차 제조기술(특허출원) 등 ○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개발(5종) ○ 돌발 병해충 예찰시스템 구축(9작물) 	완 료
5 강소농 육성으로 농촌 활력화		
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농 육성 대상농가 선정(15,280농가) ○ 유관기관 협력 MOU(4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청, aT,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 농가경영 실용화 시범사업 평가(135개소) ○ 강소농 성공모델 개발 보급(158개소) ○ 농업·농촌 현장의 소리 사례집발간 ○ 농촌현장 애로기술지원(12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숭아 낙과피해 원인 규명(속초, 7.18) 	완 료
나. 현장 맞춤형 특성화 기술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보급사업 추진(57종 84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농업인 교육(3건, 3,000명) ○ 고품질농산물 생산 탐프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24단지 1,500ha, 과실 6과종 96개소 2,500ha, 과채류 3품목 10개소 100ha ○ 현장애로해결 농업인개발과제 추진(120과제) ○ 쌀 분야 현장컨설팅 추진(6회, 105명) ○ 수출농산물 전문교육(4회, 1,133명) 	완 료
다. 농촌부존자원 활용 소득증대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80시군) ○ 농촌교육농장 조성(60개소) ○ 농가단위 농식품 소규모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맛사업 17개소, 농가맛집 14개소 ○ 교사 농촌 어메니티 체험연수(120명)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라. 농가경영 마케팅 및 지도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우수 경영체 대상농가 선정(200호) ○ 산학연협력단 운영(56개) ○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과제 발굴(20건) ○ 경영마케팅컨설턴트·코치양성교육(50명) ○ 멘토링 프로그램 성공사례 발굴(20건) 	완 료
⑥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을 통한 국격제고		
가. 다자간 농업기술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AFACI) 권역별과제 워크숍(4월, 13개국) ○ AFACI 국가별 과제담당자 회의(6월, 8개국) ○ AFACI 농촌개발과정 고위급 초청 연수(8.22~26, 10개국 20명) ○ 제1차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 총회(3월, 에티오피아 등 16개국) ○ 직무연수(43명) 및 국별과제 확정(15과제) ○ 아프리카 현지 가축개량 기술전파(7월, 12개국) 및 녹색혁명 경험 전수(12월 19개국) ○ KAFACI 고위급 정책 워크숍(11월) 	완 료
나. 해외 농업진출 기반 조성 및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 KOPIA 센터 설치 MOU 체결(1월) 및 센터 개소(4월) ○ 신규 KOPIA 센터 확정(4개국) ○ 외국인 초청 훈련(286명), 해외전문가 파견(20명) ○ 글로벌 농업 청년리더 파견(194명) 	완 료

[별첨 2]

2012년 업무계획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미래 희망이 되는 나라 =

2011. 12. 16.



순 서

I. 2011년 추진실적 평가	165
II. 2012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167
III. 주요 추진과제	169
1.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	169
2.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170
3.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관리	171
4. 산림재해 대응 체계 확립	172
5.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	173
6. 국제기구 설립 및 해외산림투자 확대	174
IV. 과제별 주요일정	175
<참고>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176

I. 2011년 추진실적 평가

□ 국제산림역량 강화로 국가위상 제고

-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 개최
 - 창원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사막화방지 주도국으로 역할 확대
 - * 161개국 정부대표, 80개국 장·차관 및 국회의원 등 6,500명 참석
-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기반 마련(11월)
- 양자협력회의(27개국)를 통해 녹색산림기술 수출기반 마련
-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 탄소배출권 선점 및 국제산림협력 확대를 위해 해외자원협력관 신설 추진

□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산림-강-도시 지역에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숲 조성
 - 개인 2만명, 119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105개소 123ha 조림
 - * 청소년, 소외계층 등이 참여한 ‘오천만 국민 내나무 갖기’ 캠페인 추진
- 개도국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REDD+) 종합대책 수립,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2개소) 등을 통해 Post-2012대비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해 탄소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
 - 목재자급률 제고 : ('08) 10.1% → ('10) 13.5% → ('11) 15%
 - 펄릿보일러 보급 : (기존) 농가 주택 → (확대) 공공·산업용 27개소

□ 산림의 미래비전 보고대회 개최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산림의 가치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3월)
 - * 후속조치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림청-한국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11월)

□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복지 증진

-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 도입(7월)으로 건강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숲가꾸기 사업지에 산채·약용식물을 재배하는 대단위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신규 15개소)
- 임산물재해보험 명문화 및 임산물재해복구비 단가 인상(11품목)
- 임업인의 복지 공간인 산림비전센터 매입 및 운영방안 마련(11월)

□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 강화

- DMZ 일원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산지관리특별법」 제정(4월)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을 통한 산림생물종 관리 기반 구축
- 적극적인 방제로 역대 최저 산림병해충 발생(전년대비 27% 감소)

□ 국민수요를 반영한 산림서비스 증진 및 녹색일자리 창출

- 산림치유 활성화와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 지리산둘레길(20만명), 장성편백 치유의 숲(13만명) 등에 국민 참여 증가
- 도시별 명품숲 추진협의체(51개 지자체 참여) 구성·운영, 국가 산림경관지역(100개소) 선정 등 도시-산림의 녹색 질 제고
- 숲가꾸기 등 13개 사업에서 녹색일자리 4만5천개 창출

□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로 인명·재산 피해 발생

- 산사태예측 정보(SMS) 전달체계, 위험지 지정관리, 생활권 주변 사방시설 등 종합적인 산사태 예방체계 미흡
- 동시다발 산불(3.30~4.1까지 38건)로 인해 가옥 16채 소실
* 산불계도를 위한 산림헬기 운행 중 사고로 산림공무원 2명 순직(5월)

II. 2012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1 | 여건 전망

□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 역할 증대

- 리우환경회의 이후 20년을 맞이하여 기후변화체제 개편 등 국제환경 이슈가 재조명
 -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녹색경제'를 주제로 6월 UN회의 개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해결 방안으로 개도국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REDD+)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경쟁 심화
 - *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련 지원(인니) : 노르웨이 5억불, 일본 2억불, 호주 3천만불
- 생물다양성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12.10월, 인도)에서 산림 생물 자원화 및 보전 방안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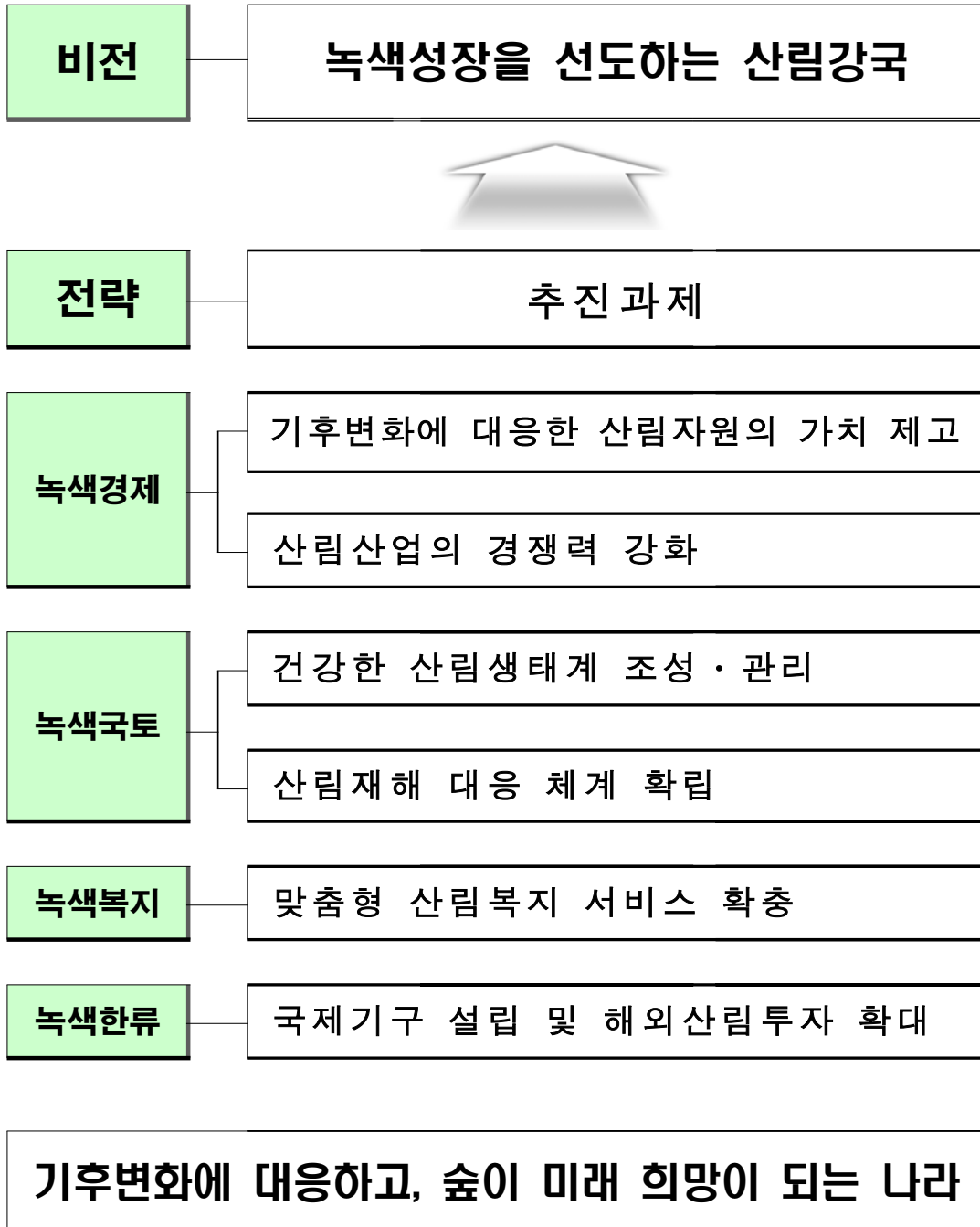
□ 국민들의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요구 지속

- 주 5일 수업 정착, 건강·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의 휴양·문화 공간을 통한 다양한 체험 문화가 확산
 - * 국민 10명중 4명이 월 1회 이상 등산에 참여('10년 한국갤럽)
-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취약계층, 청·장년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요구 지속

□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해 발생 증가

- 최근 대형화되는 산림재해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증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위협
 - * '11년 300일간 지속된 미국남부 산불은 140만ha 산림 피해 발생
- 집중호우 증가로 산림훼손 지역에 대한 산사태 피해 증가 우려

2 | 중점 추진방향



Ⅲ. 주요 추진과제

1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 산림환경 변화를 고려한 산림자원 육성

- 양묘에서 조림, 숲가꾸기 및 벌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산림자원 육성대책 수립**
 - 경제림 육성단지 재구분을 통해 목재생산과 임업소득향상 기반 구축
 - * 신설 임도(664km)를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하여 산림경영 효율성 제고
- 금강소나무 등 **지역별 중점 수종**을 육성하고, 4대강 주변 및 경관·재해방지 등 **환경개선 조림 추진**(총 17천ha, 41백만 그루)
 -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방지조림 비중 확대 : ('11) 3% → ('12) 14%

□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경관 가치 제고

- 인공림, 우량 천연림에 **숲가꾸기**를 집중(250천ha)하여 **우량목재 육성**
- 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및 도시숲에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환경 숲가꾸기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도로변, 가시권 지역 **덩굴류 제거**로 산림경관 개선(26천ha)

□ 기업의 산림활동 및 녹색기술 개발 확대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산림활동을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경감
 - 산림탄소상쇄 사업 확대 : (기존) 조림 → (확대)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 탄소배출권 확보 등 **녹색 R&D 확대** : ('11) 587억원 → ('12) 650억원
 - 기후변화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2 |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 임업인의 소득 증진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 한-미, 한-중 FTA에 대비하여 밤, 호두 등 민감품목을 중점 지원
 - * 임산물 수출 : ('10) 154백만\$ → ('11) 230백만\$ → ('12 목표) 250백만\$
- 산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도 운영
- 대단위산림복합단지(12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12개소), 임산물 종합유통센터(8개소) 등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확충
- 임업 기술개발, 품질관리, 통계 등을 임업인에게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임업진흥원 신설·운영(1월)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및 수출·입 관리를 위한 HSK코드 신설(1월)

□ 목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목재산업 육성

- 국산재 목재수급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산업 진흥 5개년 종합대책(2012~2016) 추진
 - * 체계적인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을 위한 목재 가공·유통 시설 확충(2개소)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목재펠릿을 연중·대량 소비할 수 있도록 수요 다변화
 - (기존) 농가주택, 주민편의시설 → (확대) 산업용, 지역 난방시설
 - * 산업용, 지역난방시설 펠릿소비량은 연 500~2,000톤/대(가정용 3~4톤/대)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펠릿보일러만 보급
- 국산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원자재로 제공
 -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 ('11) 130만^m → ('12) 150만^m
 - 목재생산성 향상을 위한 벌채 설계·감리제도 시범운영(400ha)

3**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관리****□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원화**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2013~2017) 수립
- 기후·권역별 국립수목원 조성으로 산림생물 종 다양성 확보
 -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착공('09~'14, 봉화), 국립세종수목원('12~'16, 세종시) 추진T/F팀 구성·운영, DMZ 자생식물원 조성('09~'13, 양구)
- 산림습원 등을 대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5천ha)
 - 소광리, 민북지역에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생태관리센터 신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산림생물종 서식지 관리 모델사업 추진

□ 백두대간, DMZ 일원 산림 관리 강화

- 백두대간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정맥관리방안 마련
- DMZ 일원 산지 보전·이용을 위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 설립
 -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4월)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 백두대간 마루금 연결 및 DMZ 일원 훼손지 생태적 복원

□ 산지의 보전·이용 체계 확립 및 국유림 관리 강화

-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 수립을 통해 산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입지 체계 구축
- 산지의 생태적인 이용과 경관 보존을 위한 산지제도 정비
 - 산림복지시설 입지,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지역에 대한 생태·환경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 마련
 - * 평창동계올림픽 중봉스키활강장의 자연친화적인 조성 및 산림복원 방안 마련
 - 백두대간 등 산림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송전탑 설치시 산림경관영향평가제도 시행
- 사유림 매수를 통한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11천ha)
- 장기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된 국유림 정리로 국민불편 해소

4 | 산림재해 대응 체계 확립

□ 산사태 방재 대책 현실화

-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보급 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를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개편(12월)
 - 토석류 위험지도 : ('11) 3개소(인제·평창·봉화) → ('12) 전국 확대
 - *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산사태 위험지 지정·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사방댐(695개)과 산림내 계곡정비사업(416km) 등 사방사업을 도시·생활권 지역에 집중
 - *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매수·교환 및 수용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

- (예방) 산불감시인력 2만5천명 운영, 소각금지기간 운영, 감시 카메라 장비 확충 및 우편집배원(14천명)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
- (진화) 진화헬기 143대(산림청 47대, 임차·유관기관 96대), 산불 전문진화대(1만명) 및 영상전송시스템 도입으로 조기진화 추진

□ 산림병해충 특별관리 및 생활권 수목피해 저감

- 리·동단위로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세부이력을 관리하고 계획수립에서 방제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 실시
 - 대면적 항공방제는 축소하고, 천적 등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 확대
 - 참나무시들음병 총력방제 : ('11) 55억원 → ('12) 87억원
-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기준 및 진단·진료 체계 구축
 -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 : ('11) 1천건 → ('12) 4천건
 - 지역별 수목진료를 지원하는 수목진단센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13개소)

5 |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

□ 산림휴양시설 확대 및 산림교육 강화

- 자연휴양림을 확충(21개소)하고,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 체험기회 제공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7월)과 연계하여 유아 숲체험원 확대 및 학교 내 산림교육 강화
- 등산관련 교육·체험 등 복합휴양공간인 산악박물관 착공(10월)

□ 숲을 치유와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

- 생활권 주변 산림에 치유의 숲 조성을 확대(8개소)하고, 장기체류형 산림치유공간인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착공(9월)
- 전문기관을 통해 양성된 산림치유지도사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 명산 둘레길 및 생활권 주변에 숲길 조성을 확대(360km)하고, 숲길체험지도사를 통해 쾌적한 산행문화 유도

□ 도심 생활권 녹색여가 공간 조성

- 도시숲(193개소), 가로수(468km), 학교숲(145개교) 조성을 확대하고, 도시주변 산림과 연계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 모범 도시숲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도시숲 관리 체계 확립
- 지역내 향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연계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숲가꾸기, 숲해설가, 숲길안내인 등 13개 사업에 4만4천명 고용
- 취약계층, 청·장년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일자리 제공
- 일자리 중 일부를 취업취약계층에 우선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
- 젊은 임업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 특성화고 설립(한국산림과학고)

6 | 국제기구 설립 및 해외산림투자 확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등 국제산림협력 강화

- (아세안) AFoCO 사무국 설치(4월, 서울) 및 제1차 총회 개최
 - 동아시아 중심의 산림협력 사업을 중앙아시아 등 제3국으로 확대(사업규모 : '11년 130만불 → '12년 200만불)
- (동북아시아) 몽골, 중국과 사막화 및 황사 방지 등을 위한 동북아 황사방지 네트워크 운영('12~'16, 700만불)
- (아프리카) 유엔환경계획과 건조지녹색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 황폐산림복원을 위한 산림녹화 기술 전파 및 시범사업 추진
- (북한)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종자확보 및 양묘장 지정·운영

□ 산업조림, REDD+ 등 해외투자 및 양자협력 확대

- 목재자원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해외조림 확대(25천ha)
 - 국내 목재산업 원자재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목 도입(10만m³)
 - 인니, 미얀마 등 아세안에서 개도국 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REDD+)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추진
 - * 산림탄소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상품 및 방법론 개발
- 탄소배출권 확보가 용이한 중남미, 산림녹화가 필요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양자협력국가 확대 : ('11) 12개국 → ('12) 20개국
 - * 신규체결 국가(안) :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디오피아, 베냉, 르완다 등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의장국 역할 이행

-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에서 UNCCD 총회 논의 과제 이행강화를 위한 UN 환경협약간 협력방안 제시
-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조치 이행을 통한 사막화 문제해결 선도

IV. 과제별 주요일정

실 천 과 제		일정
상반기	○ 한국임업진흥원 개원	1월
	○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추진T/F팀 구성	1월
	○ 생활권 수목방제 기준 제정	2월
	○ 별채 설계·감리제도 마련	2월
	○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의장단 회의 개최	2월
	○ 산림자원 육성대책 수립	3월
	○ 봄철 나무심기	3~4월
	○ 봄철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5월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	4월
	○ 산림비전센터 개관	4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 개소	4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착공식	4월
	○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착공식	4월
	○ 산사태정보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5월
	○ 동북아 DLDD 방지 국제포럼 개최	6월
	○ 2011년 수해피해 복구사업 완료	6월
	○ 자연환경 숲가꾸기 가이드라인 마련	6월
	○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 상황관리	5~10월
하반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7월
	○ 국유재산 특례 제도 운영	7월
	○ 도시숲 포럼 창설	8월
	○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8~10월
	○ 가을철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기간 운영	9~11월
	○ 사유림 경영 컨설팅 활성화 방안 마련	9월
	○ 산양삼 품질규격·등급기준·성분분석 마련	9월
	○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기공식	10월
	○ 산지관리기본계획 마련 및 부처협의	10월
	○ 백두대간 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	11월
	○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 및 전국 배부	11월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12월
	○ 임도 품질향상을 위한 표준시방서 마련	12월
	○ 민북지역산지관리단 구성	12월
	○ 가을철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1~12월

[참고]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input type="checkbox"/>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가.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나무심기 추진(3~4월) ○ 67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4월) ○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7~9월) 	정상추진
나.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숲가꾸기 발대식(1월) ○ 숲가꾸기 현장점검단 운영(6월) ○ 현장토론회 등 숲가꾸기 기간 행사(11월) 	정상추진
다.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경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림경관벨트 시범사업 추진(3월) ○ 덩굴류 제거 등 산림경관 정비(6~9월) 	정상추진
<input type="checkbox"/>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 국산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국산재 시대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수급계획 시달(2월) ○ 친환경 벌채제도 모니터링(4월) ○ 숲가꾸기 산물수집 130만㎥ 완료(12월) 	정상추진
나.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 시행(1월) ○ 목재펠릿 보일러 실태조사(9~10월) ○ 목재펠릿 보일러 인증제 도입(9월) 	정상추진
다.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양삼 품질표시 제도 도입(9월) ○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점검(12월) 	정상추진
<input type="checkbox"/> 생애주기 산림복지 실현		
가. 숲을 치유와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체류형 자연휴양림 시범운영 추진(4월) ○ 백두대간테라피 발전촉진지구 지정(12월) ○ 트레킹길 조성 278km 완료(12월) 	정상추진
나. 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복지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산림휴양단지 기본계획 수립(11월) ○ 도시숲·학교숲 338개소 조성(12월) 	정상추진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다. 산림서비스 등 녹색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1월) ○ 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4~5월) 	정상추진
<input type="checkbox"/>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가. 산림재해 유형별 저감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1~5.15, 11.1~12.15) ○ 여름철 풍수해 예방·복구대책 수립(5~10월)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6~8월) ○ 산사태 방재대책 수립(8월) 	정상추진
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추진(3월) ○ 민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제정(4월) ○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9월) ○ '11년 수목원·생태숲 조성 완료(11월) 	정상추진
다.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운영지침 및 매뉴얼 작성(6월)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시행(7월) ○ 대규모산지전용 허가기준(안) 마련(7월) 	정상추진
<input type="checkbox"/>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		
가.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및 자원외교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조림지 투자환경조사(5월) ○ 한·파라과이 우호림 준공(6월) ○ 러시아(6월), 캄보디아(8월) 해외산림투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해외조림지 현장 지도·점검(9월) 	정상추진
나. 국제산림협력을 주도 하여 국가위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막화방지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6월) ○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개소(7월) ○ UN총회 고위급 회담 참석(9월) ○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10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외교장관 서명(11월) 	정상추진

2. Presentation (PPT)



오늘 바쁘신 중에도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방문하여 주신 /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FTA를 넘어 선진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 보고 드리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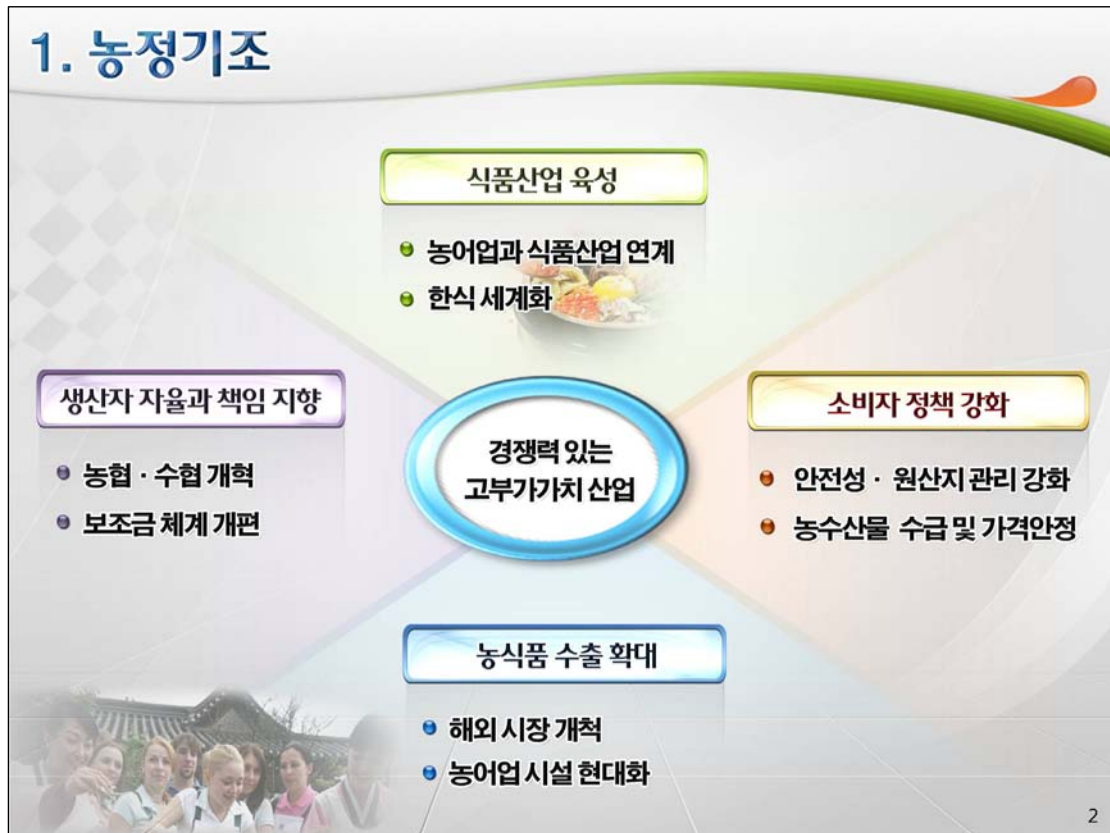


보고드릴 순서는 / 지난 4년간의 농정에 대한 평가와 /
2012년 핵심과제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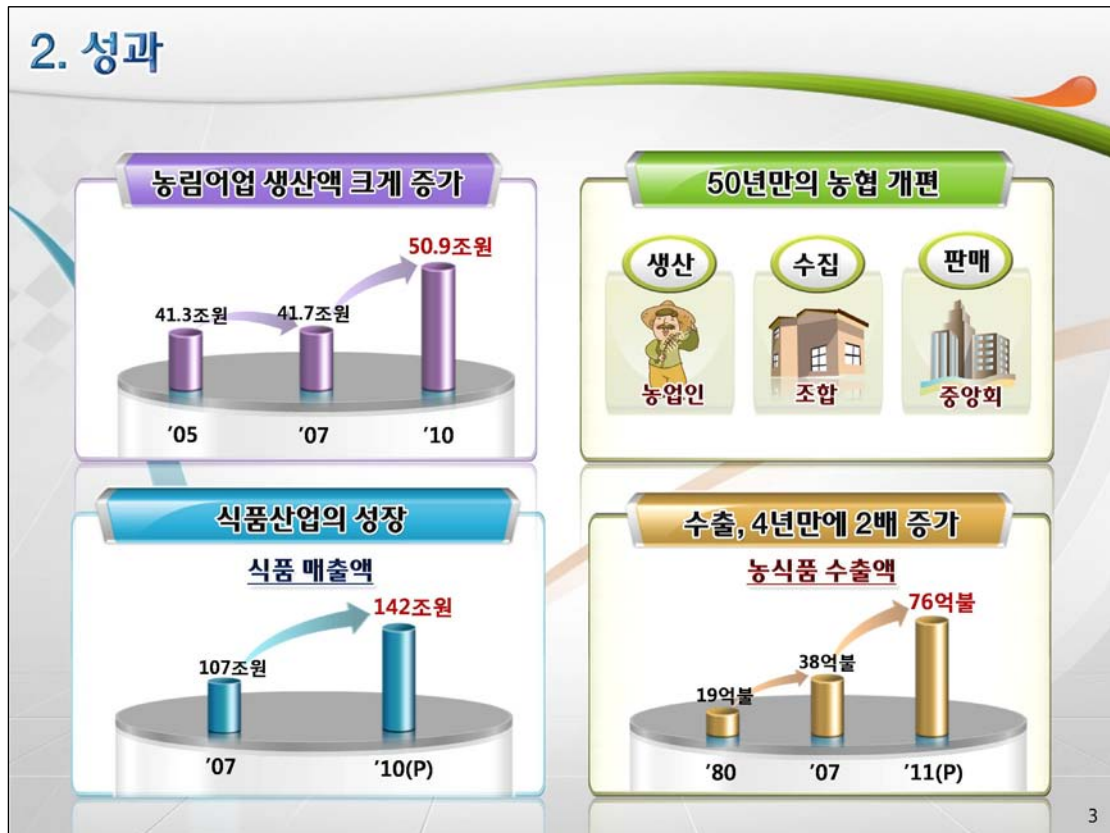
지난 4년간의 농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

1. 농정기조



지난 4년간의 농정 기조는 /
식품산업의 육성과 / 생산자 자율과 책임 지향적인 정책, / 소비자
중심의 정책 강화, / 그리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
농림수산식품산업을 /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

2. 성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후 정체되었던 농림어업 생산액은 / 2010년 50조 9천억 원으로 / 최근 4년간 2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50년 만에 /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 구축하였습니다.

식품산업 매출액은 / 142조원으로 33% 증가하였으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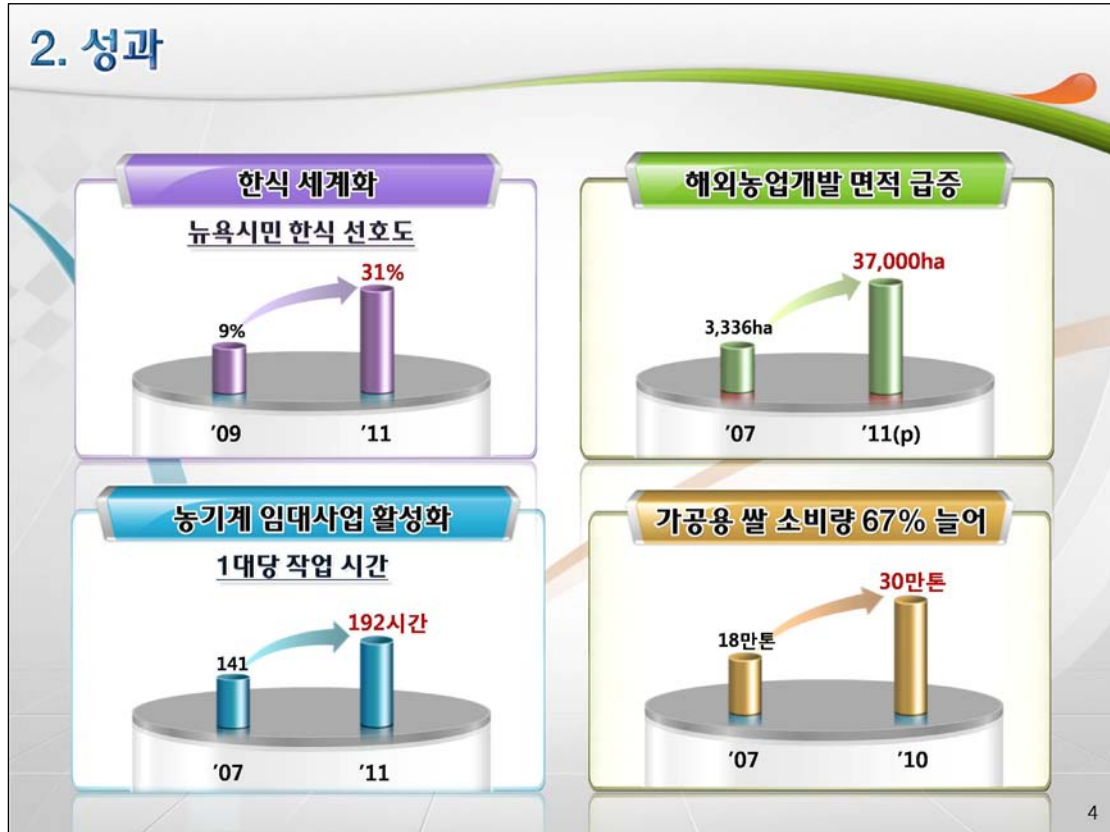
농식품 수출은 / 1980년 19억불을 달성한 이후 /

27년만에 두배인 38억불을 달성하였으나, /

38억불의 두배인 76억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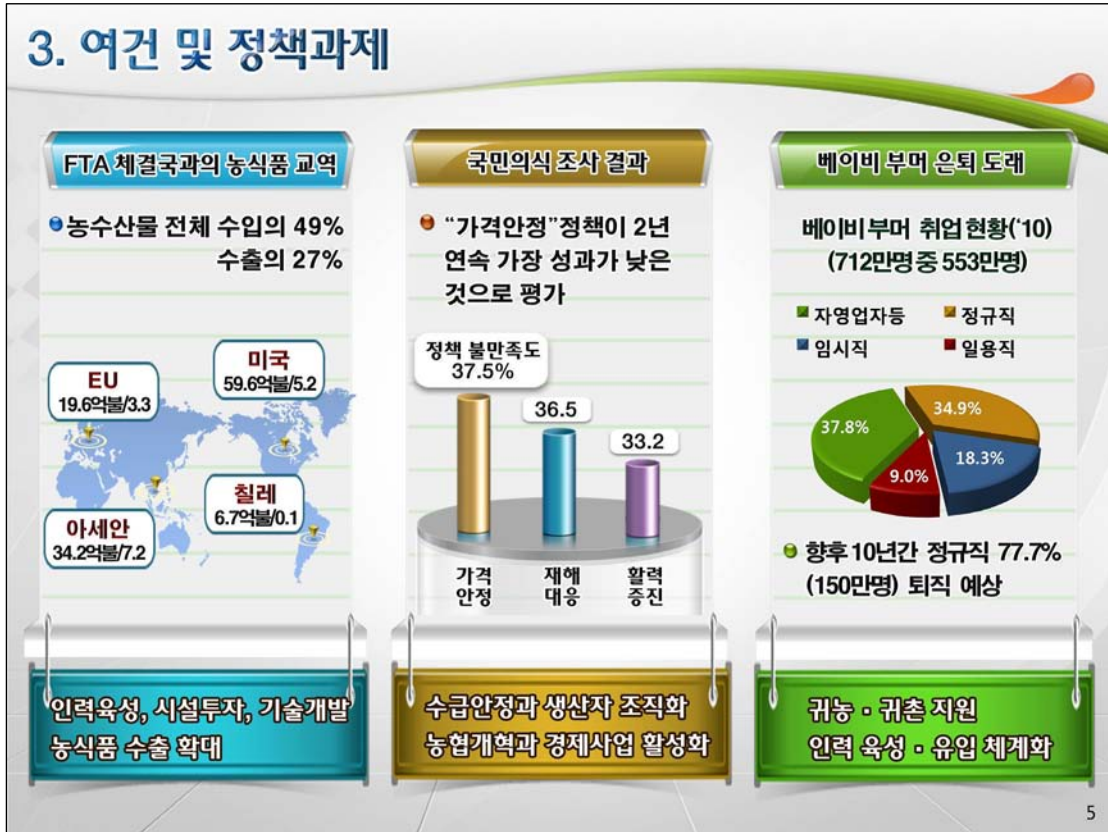
불과 4년만에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성과



이외에도, / 한식 세계화, / 해외농업개발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쌀가공산업 활성화 등의 / 성과가 있었습니다.

3. 여건 및 정책과제



그러나, 농정여건 변화에 따라 /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전체 수입액중 49%가 /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 인력육성과 시설투자 확대, / 기술개발과 농식품 수출확대가 시급합니다. / 국민의식조사 결과 /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 2년 연속 가장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또한 베이비 부머의 은퇴 등으로 / 귀농·귀촌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 농어업부문 인력의 육성 및 / 신규유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I 2012년 핵심 과제

- 1 FTA에 대응 농어업 경쟁력 확보**
- 2 농협개혁과 농수산물 수급안정**
- 3 귀농·귀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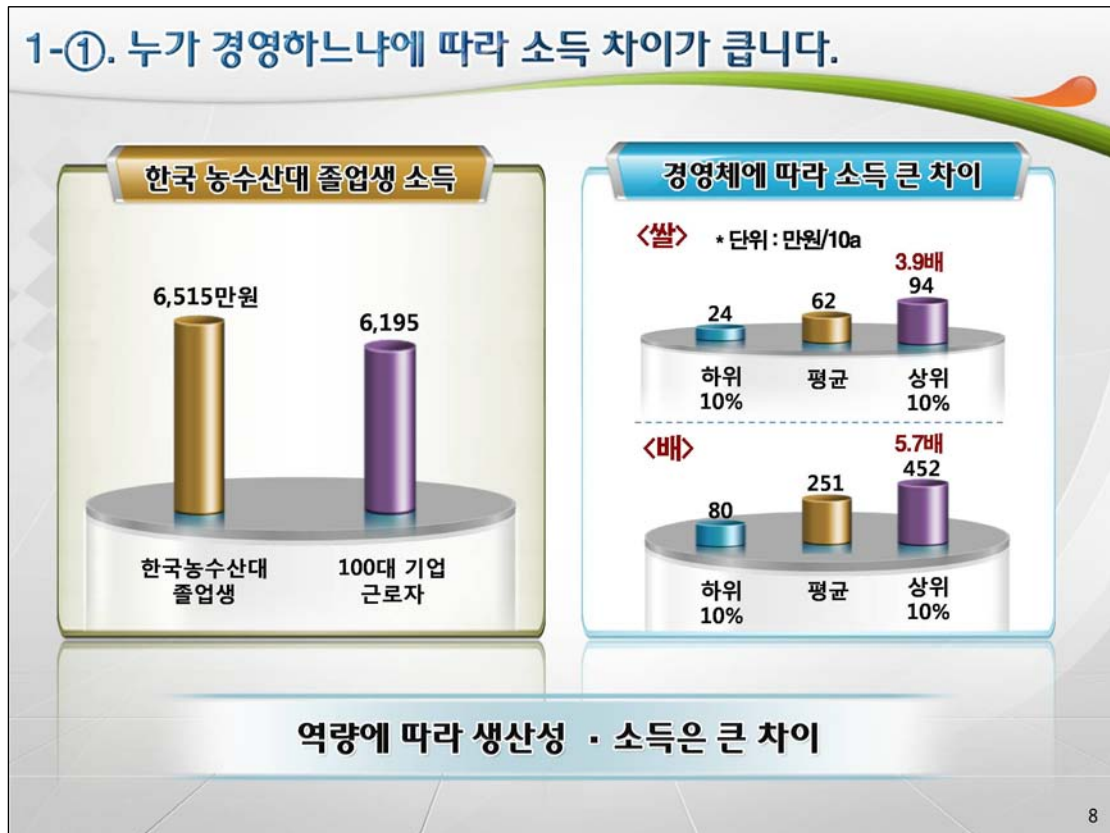
6

이러한 성과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 내년도에는 /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 / 농협개혁과 농수산물 수급안정, /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먼저 FTA에 대응한 / 농어업 경쟁력 확보 방안입니다.

1-①.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 소득 차이가 큼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 인적 자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 / 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전체의 평균 소득은 / 도시근로자 가구의 67%에 불과하지만 / 한국 농수산대 졸업생의 소득은 / 100대 기업 근로자 보다도 / 높습니다.

또한, 쌀의 경우 / 상위 10%와 하위 10% 경영체간 소득차가 / 3.9배이며, / 배의 경우는 / 5.7배로 더욱 격차가 큼니다.

1-①.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 이론 위주의 교과 과정을 현장 실습 위주로 개편
 - 현장 활용이 가능한 전문 교과과정 개발 및 실습 시설 지원(2개소)
 - 선도 농어업인의 겸임교사제 활성화

창업 지원

- 창업 활성화를 통해 젊은 농어업경영인 양성(매년 2,500명)
 - 국내시장 조사 등을 통한 신규품목 개발 및 성장산업 육성
 - 농어업계 학생 대상 1:1 전문가(선도농가, 교수 등) 멘토링 실시
 - 30대 이하에게 농지 매입 및 임대 우선 지원(2,500ha)

농어업인 교육

- 농어업인의 수준에 맞는 실습형 교육 강화
 - 선진기술 획득을 위한 네덜란드 PTC+형 실습교육장 확충('15 : 100개소)
 - 역량진단을 통한 평생 교육 및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12~)

9

세계와 경쟁하는 / 정예 농어업인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농어업계 학교 교육을 / 현장 실습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

창업 활성화를 통해 / 젊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 매년 2,500명씩
양성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교육도 / 농어업인의 수준에 맞는 /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①. 지역특색에 맞는 성장산업을 찾겠습니다.

말 산업

- 말사육 · 승마 산업 · 말고기 등 식품 개발, 홍보 전개
- 제주, 전북 장수
- 승마 선진국 프랑스 말 산업(경마제외) 규모 16조원

정원 산업

- 실내 정원 모델의 정립 및 전시회 개최
- 경기 고양, 충남 태안
- 미국 오레곤주의 정원산업 총 생산액 10조원 규모

곤충 산업

-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애완용 곤충, 약용 곤충을 중심으로 산업화 촉진
- 경북 예천, 전남 함평
- 일본의 애완용 곤충시장은 2조원 규모

관상어 산업

- 흰동가리돔 · 해마 등 해수관상어와 납자루 등 토속관상어 집중 육성
- 충북 진천, 제주
- 세계시장 23조원(FAO), 국내시장 2,300억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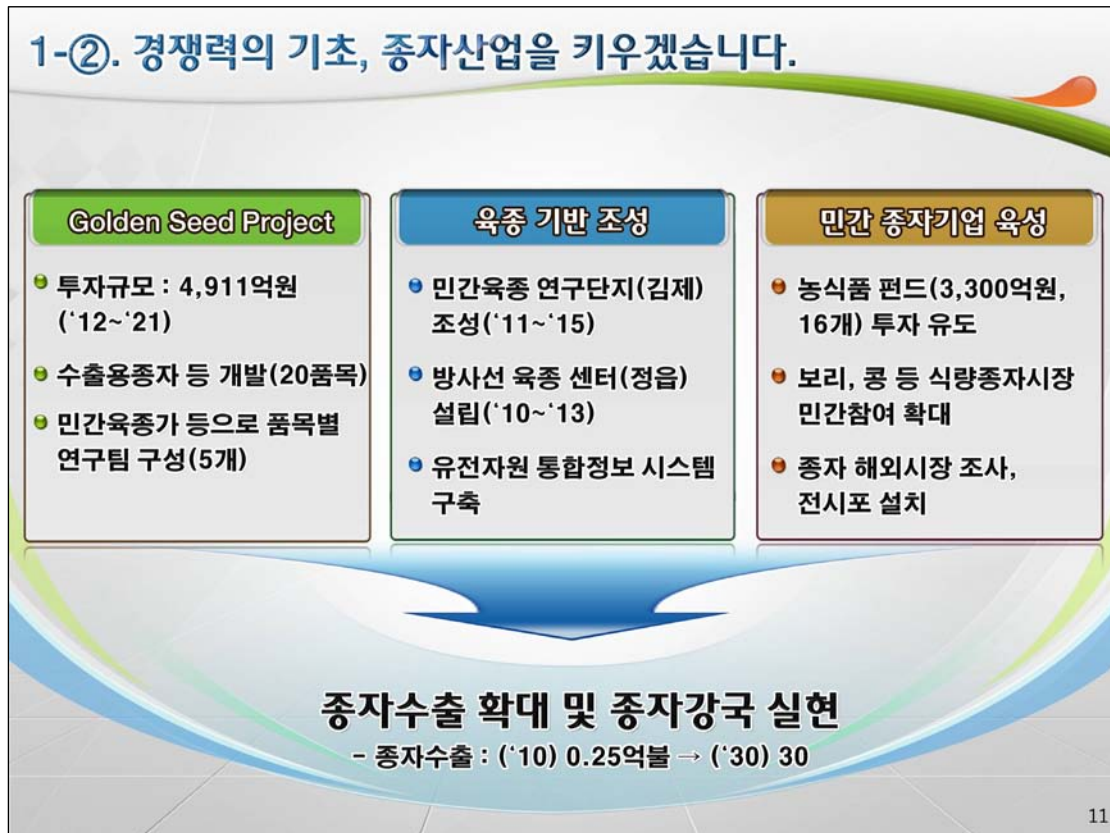
‘15년까지 매출액 1억이상 고소득 경영체 10만개 육성(11:31천호)

10

지역특색에 맞는 / 말산업, 정원산업, 곤충산업, 관상어산업 등 / 새로운 성장산업도 육성·발전시켜 /

2015년까지 / 매출액 1억원 이상의 고소득 경영체를 / 10만호 육성 하겠습니다.

1-②. 경쟁력의 기초, 종자산업을 키우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종자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원 규모의 / 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하고, /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과 함께 /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 방사선 육종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종자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 모태펀드를 활용하고, / 식량종자시장에의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 2030년까지 종자수출 30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1-②. R&D 투자를 확대하고, 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 R&D 투자규모 : ('10) 7,752억원 → ('11) 8,625 → ('12) 9,086

생 산

- 시설 현대화와 연계, 환경제어 등 첨단시스템 기술
-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질병 방제 기술

유 통 식 품

- 발효기술, 저탄소 가공기술 등 식품 핵심기술(18개)
- 나노기술 이용 코팅제 개발 등 농식품 품질유지 유통기술

실용화

- 우수실용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사업화 지원(1,000억원)
- 현장 애로 해결 현장지원단(30개) 구성·운영

12

R&D 투자를 확대하고 /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먼저, 생산성 증대를 위해 / 시설현대화와 연계하여 /
환경제어 관련 첨단기술과 /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질병의 방제기술 개발에 / 힘쓰겠습니다. /

유통·식품분야에서는 /

발효기술·저탄소 가공기술 등 18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

개발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

실용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③. 선진국 수준의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 MSY(Marketed-pigs per Sow per Year) : 어미돼지 1마리당 연간 출하 새끼돼지 수

첨단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질병·병충해 발생 최소화

현재 절실한 것은 농어업의 시설현대화입니다.

우리 농어업의 생산성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MSY는 / 덴마크의 60% 수준이며, /
 파프리카 평균 생산량은 / 네덜란드의 40% 수준입니다. /

참돔 생산량 또한 일본의 65% 수준으로 /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 시급한 상황입니다. /

1-③. 10년간 10조원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 경영체 시설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용자(이차보전)로 전환
- '12~'14년까지 3년간 5,243억원의 보조금을 감축, '15년부터 시설자금 전액 용자지원
- 농신보 제도 개선(보증한도 확대 등)으로 자금 접근성 개선

지원 방식

-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 지원규모 및 수혜자 대폭 확대
- 가족농 : 현행 지원방식(보조+용자), 법인 등 대규모 경영체 : 장기 저리 용자지원
- 경영능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전업 농어가 중심으로 지원, 악성부채 증가 방지

14

시설현대화를 위해 /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를 지원하겠습니다. /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 이차보전방식의 용자로 전환하겠습니다. /

농신보의 보증한도 확대 등 /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1-④.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내년도 최초로 /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를 위해 중국·일본·아세안 시장을 /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

중국시장에서는 / 고급매장과 연계하여 상류층 시장을 개척하고, /
서부내륙의 신시장 개척에도 / 힘을 쏟겠습니다. /

일본시장에서는 / 중소도시에 대한 판촉을 강화하고, /
식품 안전성에 대해 /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 베트남의 인삼, / 싱가포르의 말기 등 /
국가별 선호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1-④.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 예	수산양식 (10대 품목)	축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전략 품목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 기능성 제품 개발 - 파프리카 : 검역협상(중국) - 토마토 : 신규시장 개척 ● 온실 시설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전문생산단지 - 내재해형 시설보급 ●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겹보온 커튼, 지열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전략 품목 연구클러스터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참굴, 해삼, 광어, 전복, 참다랑어, 해조류 등 * 수출목표('20) : 100억불 ● 양식 면적 확대(4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해, 갯벌 양식 ● 신규 경영체 진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 양식장 임대차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료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필리핀등 농장개발(43천ha) - 국제적 곡물 기업 육성 * aT, 미국 현지기업인수(2012) ●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면적 : ('11) 260천ha → ('12) 330 ● 축사시설 현대화 본격 추진 ● 구제역·AI 재발 방지에 총력

16

다음으로, /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 추진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은 / 인삼·파프리카·토마토 등 /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

시설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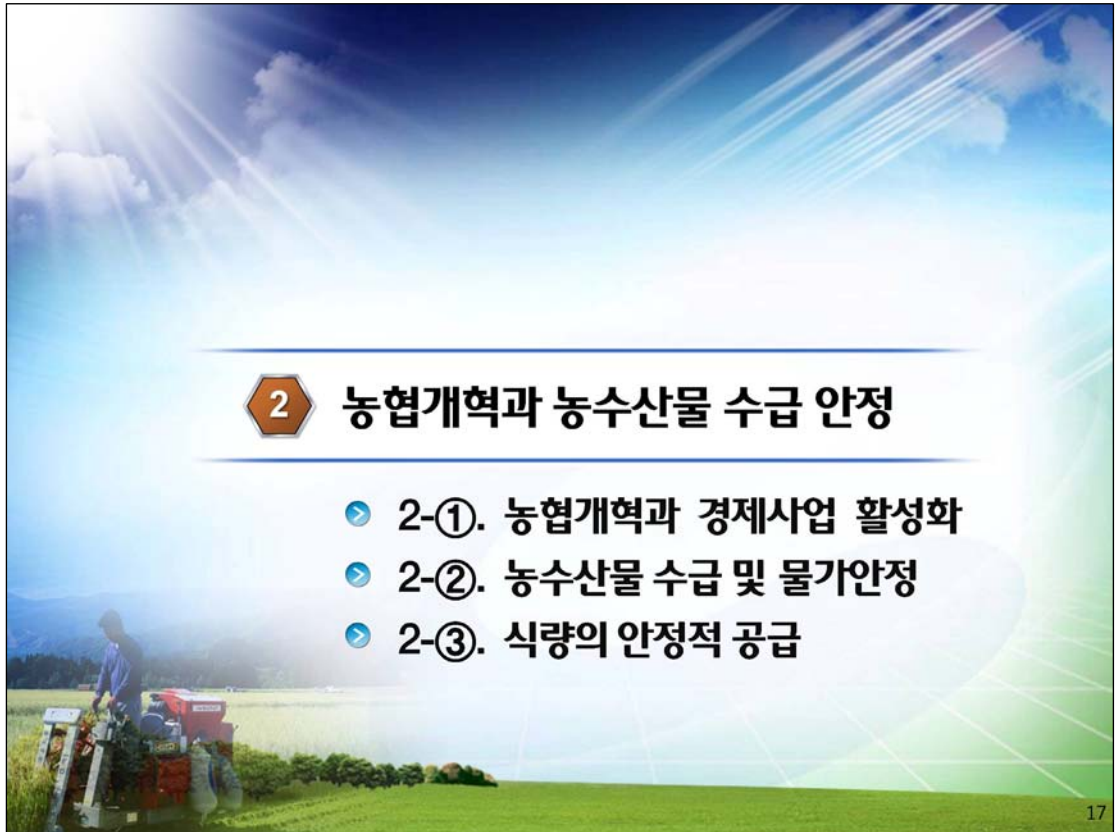
수산은 / 10대 전략 양식품목에 대해 연구클러스터를 가동하고, /

외해·갯벌 등 양식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 해외 농장개발 및 국제적 곡물기업 육성을 통한 /

해외사료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고, / 국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며, /

구제역·AI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정책과제인 / 농협개혁과 농수산물 수급안정에 관해 / 보고 드리겠습니다. /

2-①. 50년만의 농협개혁,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 가공·판매는 농협이 담당



- 농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하는 전문협동조합유통회사로 발전
 - 네덜란드 그리너리 협동조합, 뉴질랜드 제스프리 협동조합 사례 벤치마킹
 - * 수협의 판매역할 강화를 위해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세부실천계획' 수립·추진(5월)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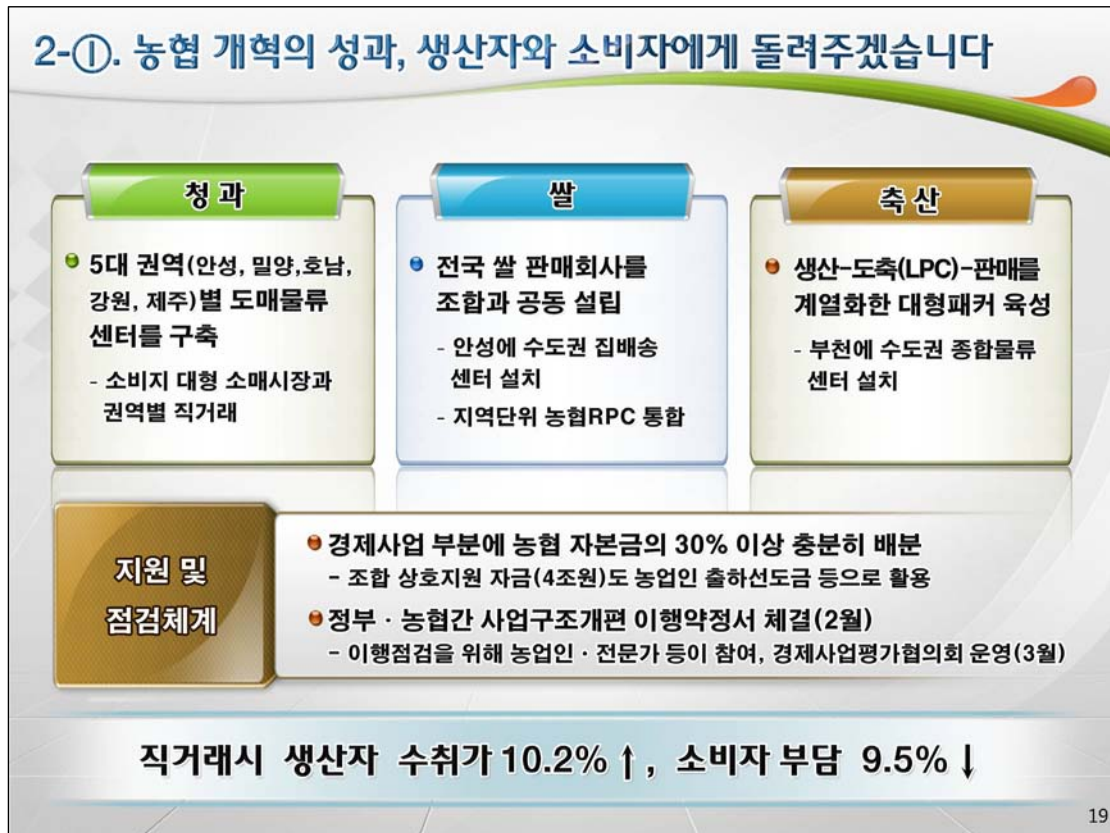
먼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 50년만의 농협개혁 과제입니다. /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 가공·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이 / 생산한 농산물의 /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팔아주는 /

전문 협동조합 유통회사로 /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2-①. 농협 개혁의 성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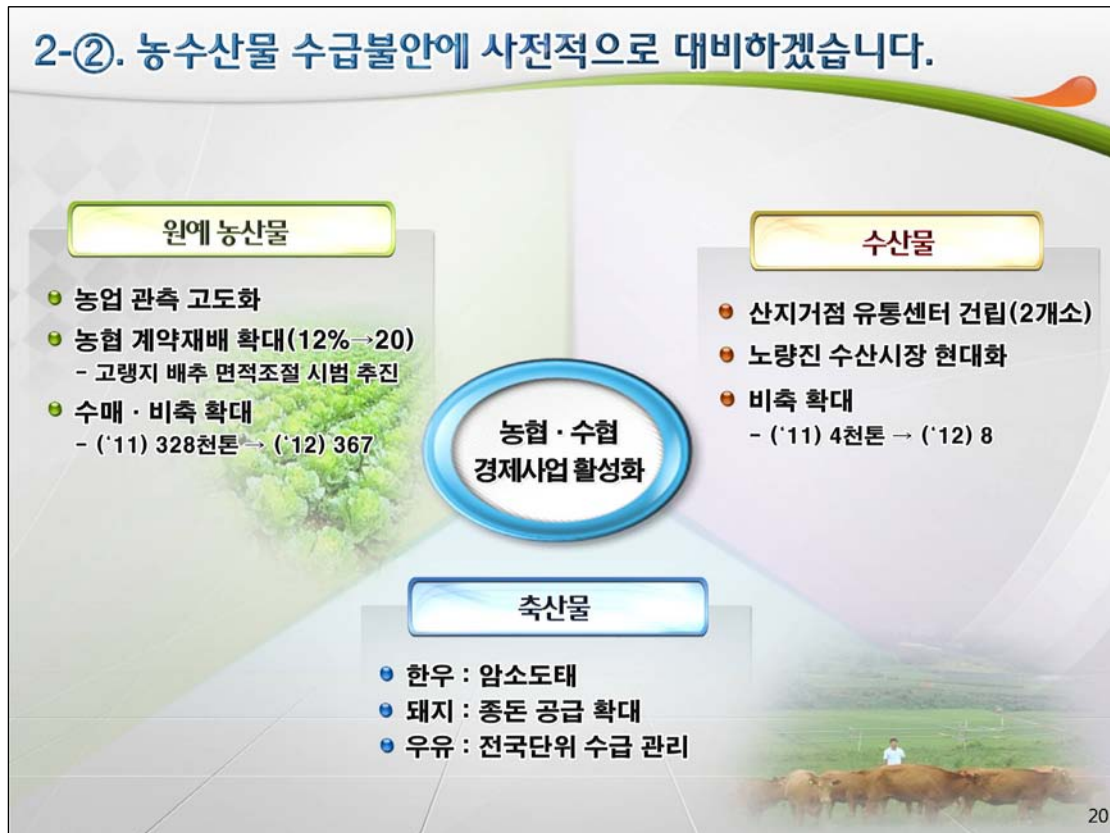


다음은 / 농협개혁의 성과를 /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우선 채소·과일 등 청과는 / 5대 권역별로 도매물류센터를 구축하고, /
 쌀은 / 조합과 중앙회가 / 공동으로 전국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
 축산물은 / 계열화된 대형패커를 육성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 농협 경제사업 부문에 /
 자본금의 30% 이상을 충분히 배분하고, /
 이행실적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

2-②.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원예 농산물은 /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
 고추·마늘 등 / 주요 품목의 비축물량을 늘려 /
 수급불안에 대비하겠습니다. /

수산물은 / 산지거점 유통센터 2개소를 설립하고, /
 비축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축산물은 / 공급과잉인 한우는 암소도태를 유도하고, /
 공급부족인 돼지는 / 종돈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
 우유는 / 전국단위로 /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2-③.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쌀

- 농가의 적기 출하유도, 탄력적인 정부쌀 방출 등을 통해 시장 안정
- 논 4만ha에 타작물 재배사업 탄력적 추진
- 매취방식에서 수탁방식으로 쌀 유통체계 개선('08 : 4.4% → '12 : 25)

밭작물

- 밭농업 직불제 도입(밭기반 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 겨울철 유향농지 활용(448천 ha)
- 배수불량 논 배수 개선(4천 ha)

기후변화 대응

- 재해·병충해 저항성 품종 개발(36종)
- 망고 등 아열대 신소득 작목 보급(15종)
-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기상, 병해충, 작황정보 전파)

21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쌀시장 안정을 위해 / 농가의 적기 출하를 유도하고 /
시장상황에 따라 / 정부쌀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밭작물은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
중장기 밭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 재해·병충해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고, /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등 / 국내 생산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③. 적극적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필리핀 등 해외개발 확대 (43천ha) ● 국제 곡물 조달체계 구축 - '12년 미국 현지기업 인수 ● 해외 진출 기업과 국내 수요 업체와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어장 개척(2개소) ● 해외수산시설 투자(2개소) ● 연안국에 대한 수산 ODA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조림(25천ha) 신규 추진 ● 산림협력국가 확대 (12개국→20) ●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AFoCO) 사무국 설치

해외농업개발 협회 설립·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촉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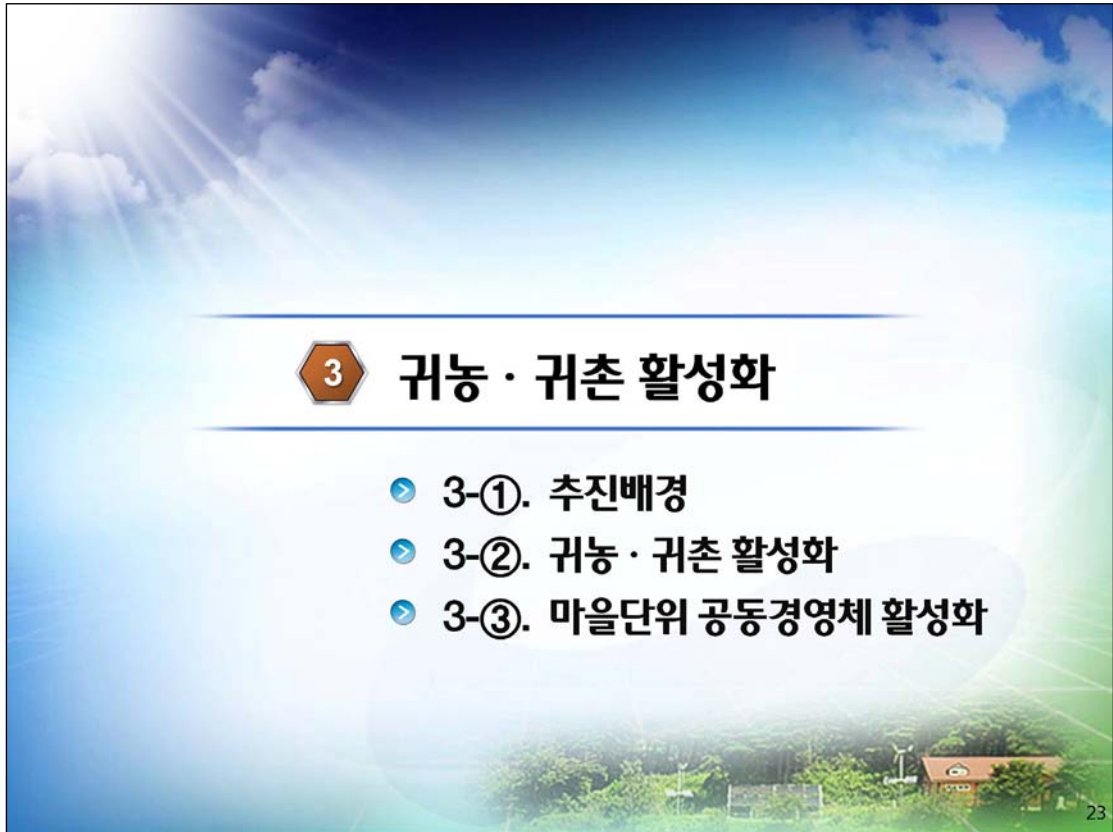
해외자원의 개발도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분야에서는 / 4만 3천ha의 해외 개발을 추진하고, /
국제적인 곡물조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어업은 / 대체어장 개척과 해외 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
수산자원이 풍부한 연안국에 대해 / ODA를 확대하겠습니다. /

해외 임업자원 개발을 위해 / 2만 5천ha의 신규 조림을 추진하고, /
올해 설립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사무국을 설치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협회를 설립하고, /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



세 번째 핵심 정책과제인 /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3-①. 농어촌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 본격화 및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

- 베이비 부머 : 55~63년생 712만명(전체 인구의 14.6%)
- 대도시 거주 베이비 부머의 66.3%가 농어촌 이주 희망(13.9%가 5~10년내 이주 계획)
 - * 귀농·귀촌 현황 : ('01) 880호 → ('05) 1,240 → ('10) 4,067 → ('11p) 5,500

도시민 귀촌에 의한 농어촌 활력 창출

- 강원 정선 개미들 마을 최법순(교사 출신, '01년 귀촌)
 - 초중고 학생 대상 수학여행 유치, 마을 주민들과 전통학습 체험장 등 추진
 - * 매출액 / 방문객 : ('07) 0.4억원 / 0.6천명 → ('11) 4.5 / 25
- 농어촌 재능기부 현황('11.11월 현재) : 1만명(지휘자 금난새, 건축가 윤충열 등)

도시 베이비부머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제공
농어촌은 신규 인력 유입으로 활력 창출

24

농어촌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712만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

대도시 베이비 부머의 /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 농어촌에 기부하고자 하는 /
사회봉사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귀농·귀촌은 / 도시은퇴자에게는 새로운 직장 and 삶터를 제공하고 /
농어촌에는 활력이 창출되는 등 /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도 부합합니다. /

3-②. 귀농·귀촌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연계, 맞춤형 종합정보 제공



25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②. 정착할 때 까지 돕겠습니다.

교육

- 귀농·귀촌 전문상담사 양성(120명)
- 귀농인 현장 실습 등 교육 실시(2,000명)

지원

- 농지·어선, 주택구입, 시설 건립 등 창업기반 마련(정부, 600억원)
- 주택수리비, 이주지원비, 창업보조금 등(지자체, 100억원)
-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홍보

- 언론사·민간·지자체가 참여하는 귀농·귀촌 페스티벌(6월)
- 언론 매체 활용, 귀농·귀촌 프로그램 방송 및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26

정착할 때까지 돕겠습니다.

귀농·귀촌 전문상담사 120명을 신규로 양성하고 /
현장 실습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정부는 농지와 주택 구입 등에 /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
지자체도 이주지원비 / 창업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페스티벌을 /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
성공사례도 확산 하겠습니다. /

3-③. 마을 단위 공동경영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5년까지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5,000개 육성
- 농어촌 재능기부, 귀농·귀촌 운동과 연계 추진 -

공동 영농(어)형

- 소규모·고령농 농지를 단지화, 공동경영 추진
 - 쌀 들녘별경영체 육성(55개)
 - 농기계 임대(30개소)우선지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

유통·가공형

-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8개소) 설치
 - * 예 : 양파(무안), 도라지(강화)
오미자(문경), 꽃감(상주)
-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과 합작투자 활성화

농어촌 관광형

- 여행코스개발 및 마케팅 강화
 - * 워크샵 하기 좋은 농촌 마을
- 농어촌 관광 등급제 도입
- 팜스쿨 30개 조성

27

2015년까지 /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 /
5천개를 육성하겠습니다.

공동영농·영어형은 / 소규모 농지를 단지화하여 / 공동경영하고, /
유통·가공형은 /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형은, / 여행코스 개발, /
농어촌 관광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농어촌체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2012년에는
농림수산식품 관련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고
FTA의 파고를 넘어 선진농어업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
 ◦ 총괄 기능
 ◦ 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

농진청·산림청
 ◦ 전문교육훈련
 ◦ 맞춤형 기술지원

농협·수협
 ◦ 정책 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 농수산물 판매지원

유통공사/농어촌공사
 ◦ 해외시장 개척·정보제공
 ◦ 영농규모화·시설 현대화

농림수산식품부

28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체계를 /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종합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
 고소득 경영체와 특색있는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
 농림수산식품 관련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
 FTA의 파고를 넘어 / 선진농어업을 실현하는데 /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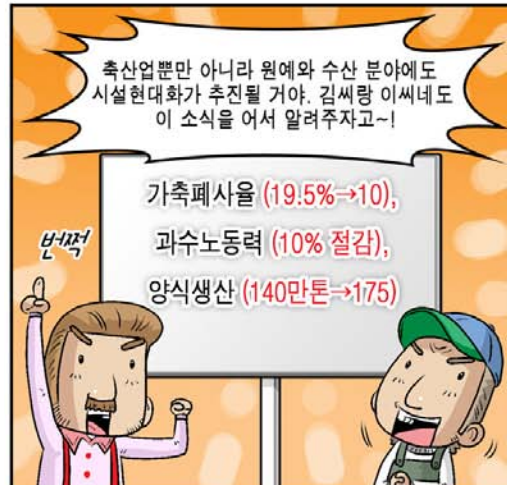
3. 만화로 보는 업무계획

2012 농어업

1. 귀농귀촌 활성화



2012 농어업
2. 농어업
시설현대화



2012 농어업

3. R&D 지원 및 성장동력 확충



2012 농어업
4. 농식품 수출확대



농식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2012년에는 정말 제대로 마음먹은 것 같아. 벼섯농사 짓는 형님네도 요즘 수출물량 맞추느라 정신이 없단데~

- 전략품목별 수출촉진단 운영
-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 수출선도조직 육성

카와와

자자~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물량이 많이 밀렸어요~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농어업도 점점 더 커지겠지? 역시, 농어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당신에게 시집은 내 선견지명은 틀리지 않았어~ 호호~

이 사람이~ 하하~

호호~ 여보. 정말 올해는 인삼 수출이 많이 늘어났네 보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국 동부연안 쪽으로 판로를 열어줬잖아. 인삼뿐만 아니라 김이랑 유자차도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

2012

이봐~ 김씨~ 바빠 죽겠는데 안에서 뭐하는 거야~ 빨리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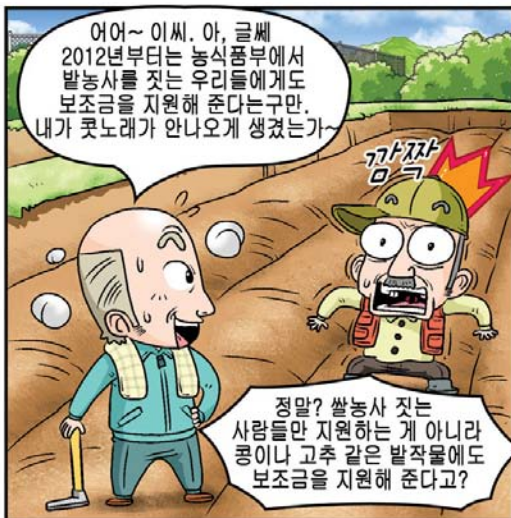
네네~ 갑니다요~

마구

가자

2012 농어업
5. 농수산물
수급안정





2012 농어업
7. 농어촌
삶의 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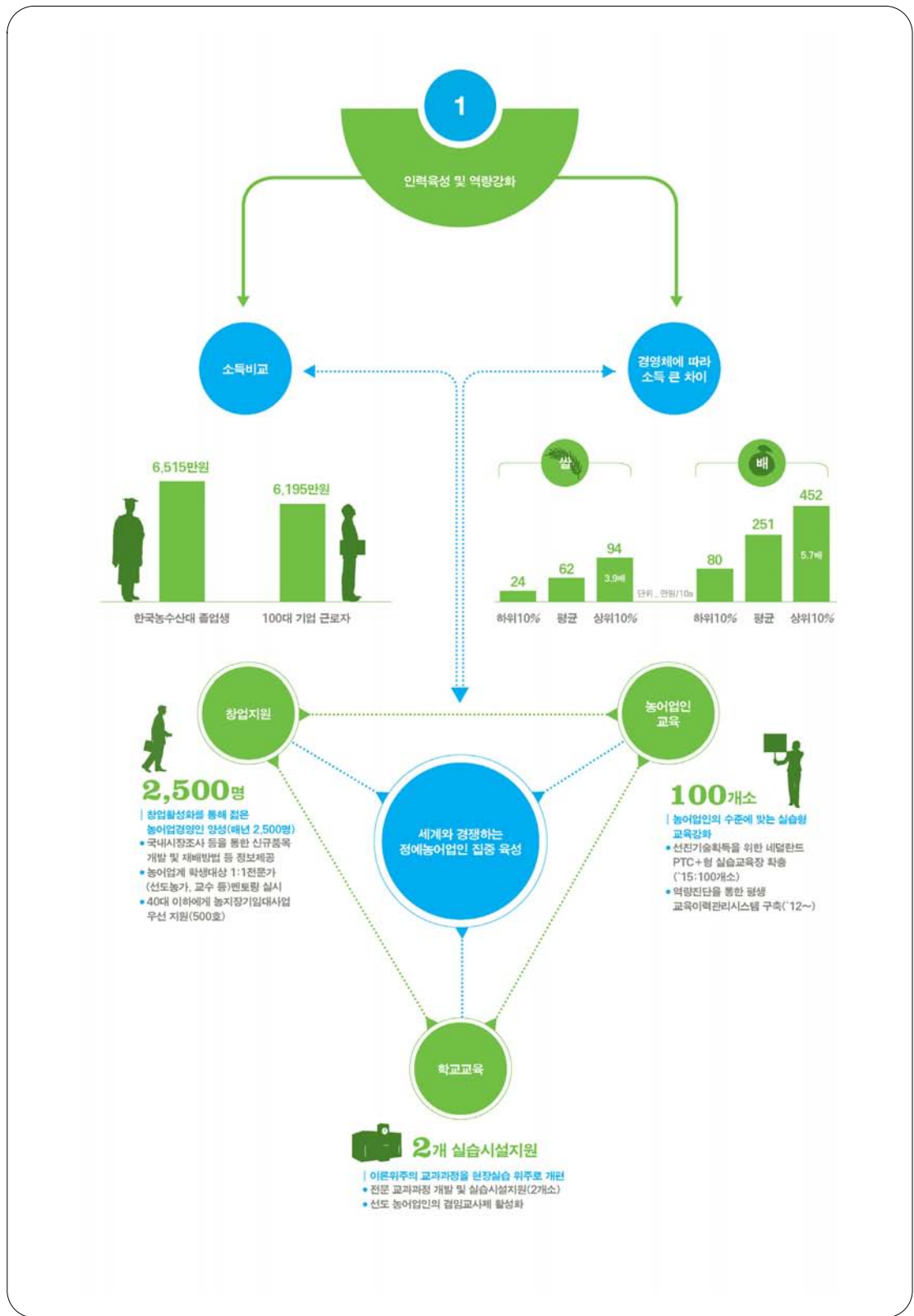
2012 농어업
8. 10대 양식
전략품목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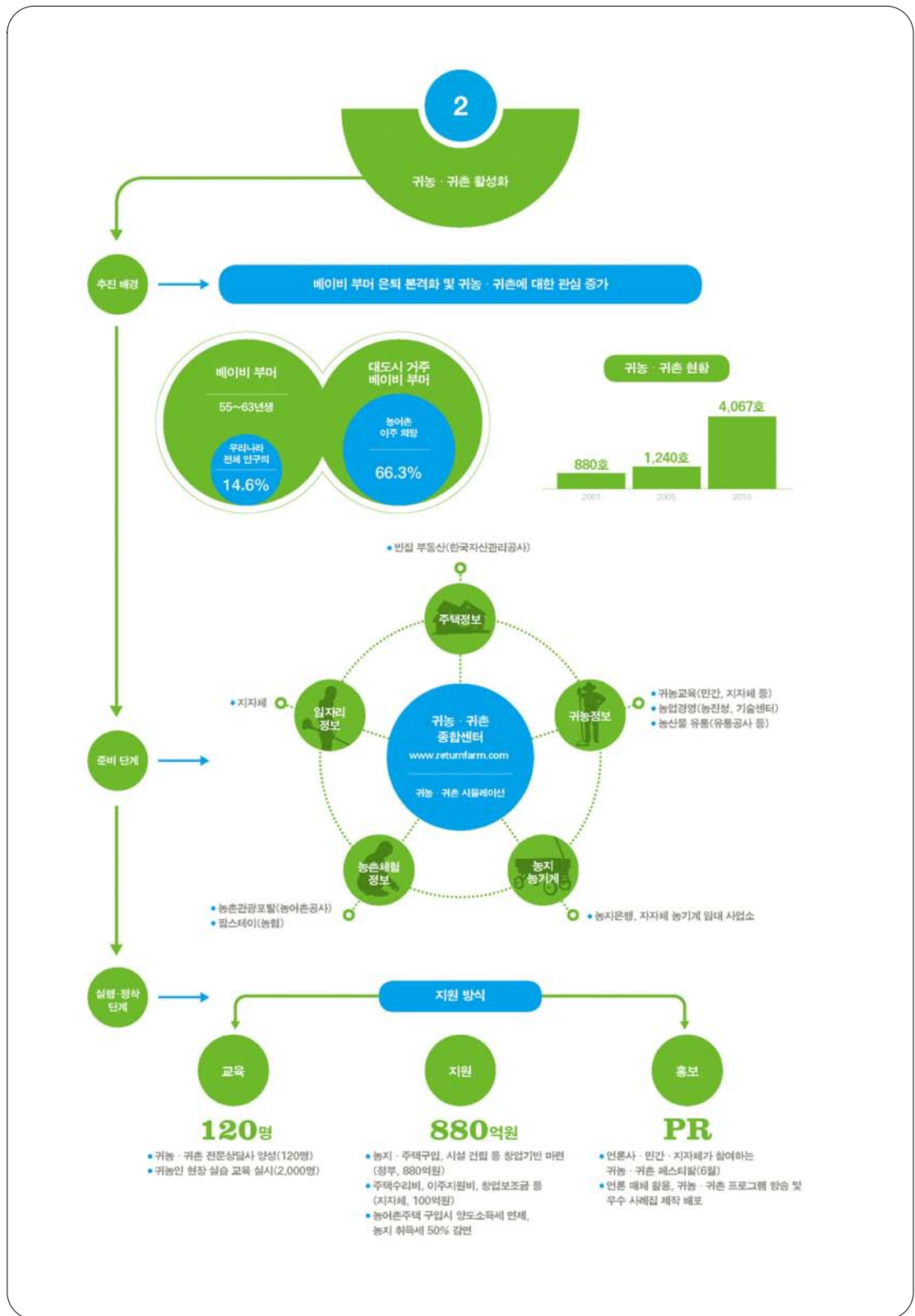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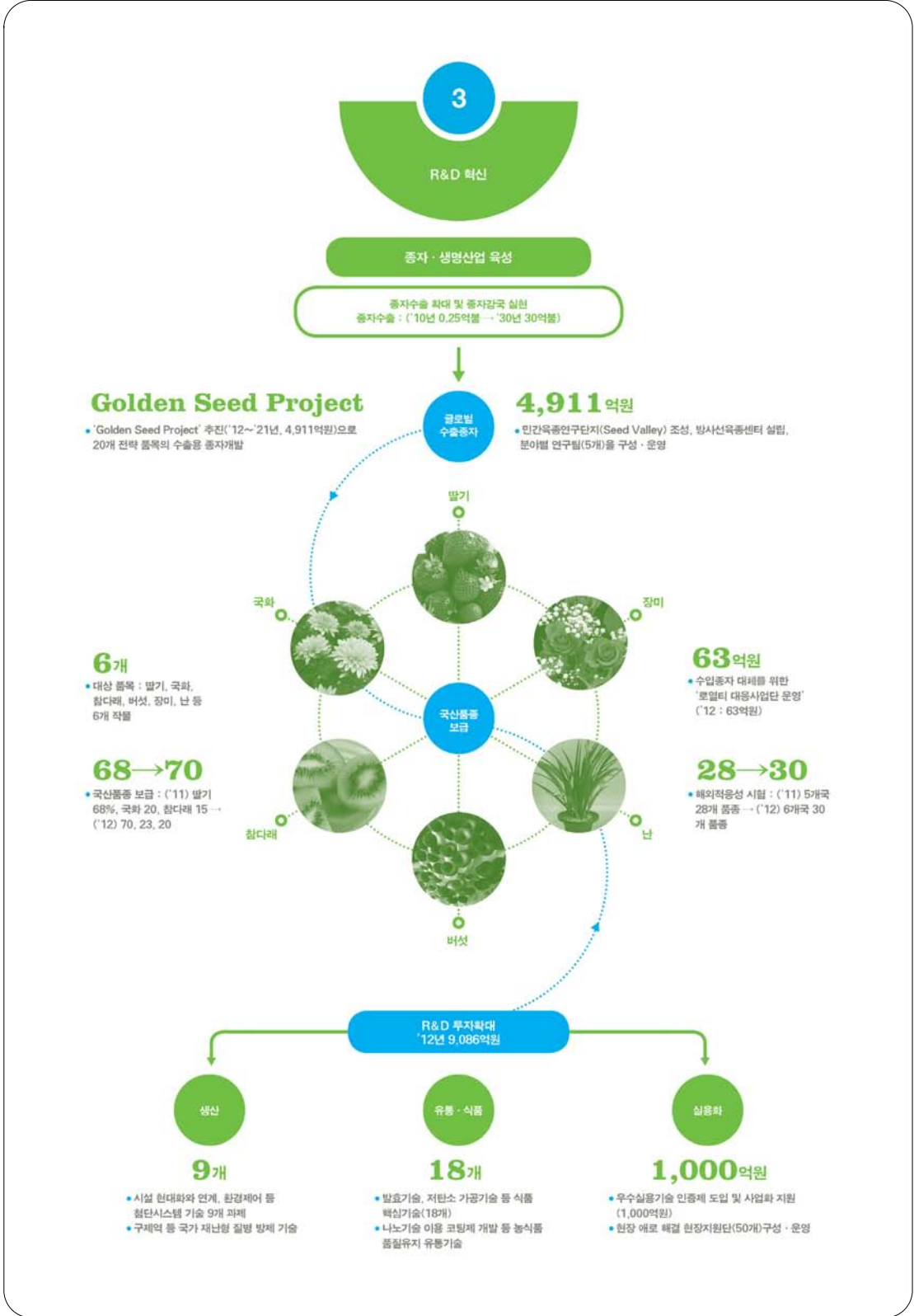
2012 농어업
9.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4.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4

시설 현대화

필요성

낙후된 시설은 생산성 저하, 질병 발생 빈도 증가 등 경쟁력 세약의 근본적인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 일본 등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급선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나, 현재 지원방식·규모(연간2,450억원)로는 10조원 규모 시설 현대화에 40년 이상 소요



* MSY (Marketed pigs per sow per year) : 이미터지 1두당 연간 세끼체지 출하두수

세부계획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 지원

추진방향

- 경영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융자보 전환, 이차보전 방식으로 추진
- 농신보 제도 개선 확대 등으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

지원 방식

- 이자 보전 방식을 통해 지원규모 및 수혜자 대폭 확대
- 가족농 : 현행 지원방식(보조+융자)
- 법인 등 대규모 경영체 : 장기 저리 융자지원
- 경영능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전업 농어가 중심으로 지원, 특성부채 증가 방지

기대효과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



사례 (예시)

하립 종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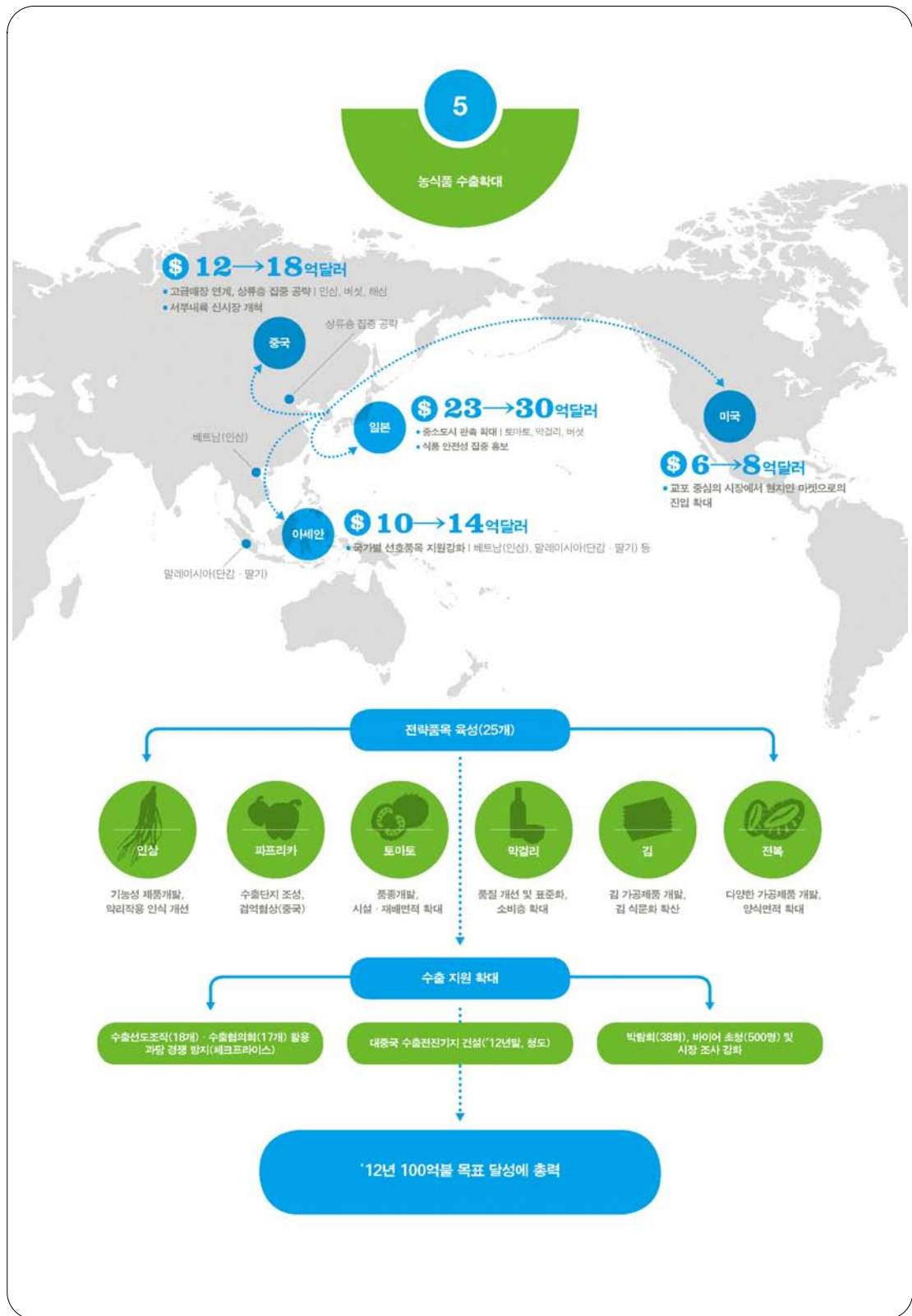
- 최적의 환기시설
- 분뇨 스크립 시설
- 자동사료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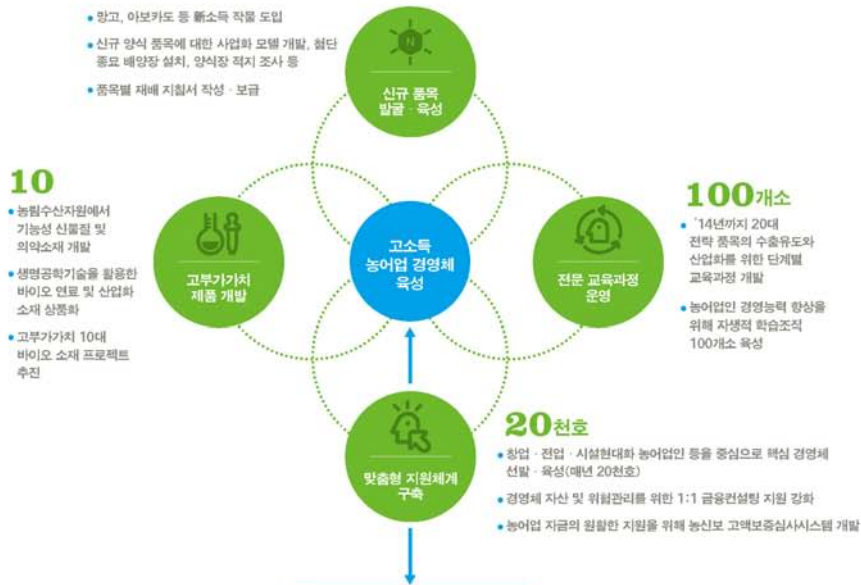
농산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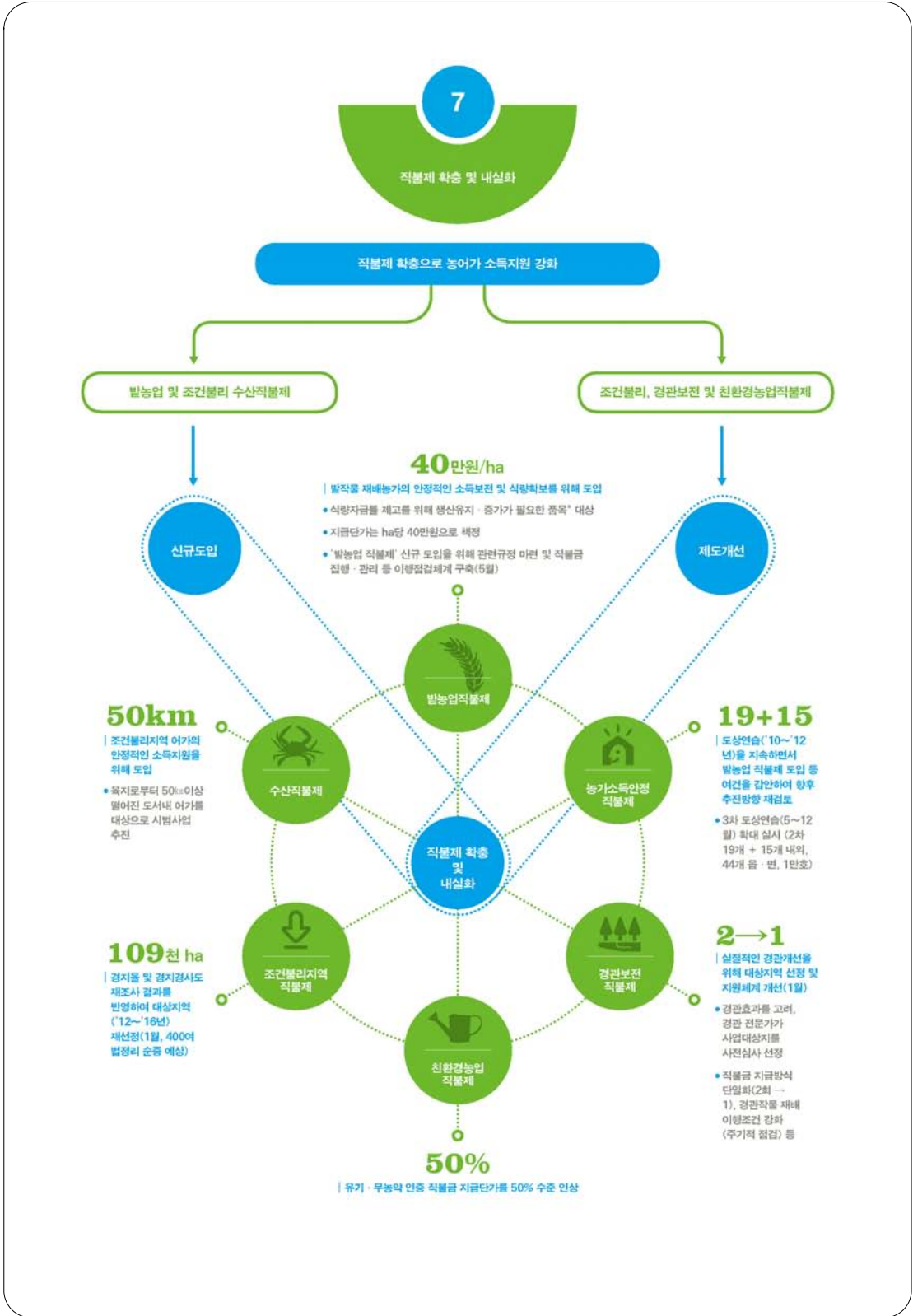
- 환경제어 시스템(온도, 습도 등)
- 에너지 절감형 난방

금호양식장

- 양식장 수조 개방
- 자동사료공급
- 사육환경관리시스템







Ⅲ

보도자료

1. 보도자료



Press Release

보도자료

제 공 일 : 2011. 12. 15.
제 공 자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 김 인 중
서 기 관 : 김 정 주
전 화 : 500-1617, 1618
쪽 수 : 6page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12월 16일 08: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파고를 넘어 농어업 선진화에 매진하겠습니다.’ =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

□ 농림수산식품부는 12.16(금) 오전 8시부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추진
- ②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경주
- ③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본격 육성,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준비
- ④ 농협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 ⑤ 귀농·귀촌 One-stop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께서는 구제역 현장관계자, 업무보고 참석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

< 업무계획 보고 개요 >

- ▶ 일시·장소 : 12.16(금) 08:00 ~ 10:1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안양 소재)
- ▶ 참 석 자 : 140여명(관련 공무원 110명, 전문가 등 30여명)

○ 아울러, ‘FTA와 한국 농어업, 귀농·귀촌’을 주제로 현장전문가와 합동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음

1. FTA를 계기로 농어업 선진화를 앞당기겠습니다.

(1) 사람이 가장 중요,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을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 (농고·농대교육) 전문 교과과정 개발, 실습시설 지원(2개소) 및 선도 농어업인의 겸임교사제 활성화 등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추진 할 계획임
- (창업지원) 창업품목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30대 이하 농지 매입 및 임대지원(2,500ha) 등을 통해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매년 2,500명)할 계획임
- (농어업인 재교육) 평생교육 및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PTC⁺형 실습 교육장 확충 등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2)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 (종자산업육성) 'Golden Seed Project' 추진('12~'21년, 4,911억원)으로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조성, 방사선육종센터 설립·운영
- (신물질·식품소재 개발) 발효·저탄소 가공 등 식품 핵심기술(18개), 코팅제 등 품질유지기술 개발 등 유통·식품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실용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산업화를 신규로 지원(1,000억원, 3%)할 계획임

(3) 경쟁력의 필수 조건,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필요성) 미래 농어업의 중심은 시설 농어업임. 기후변화 및 어족 자원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농어업 발전이 필수임

- 낙후된 시설은 생산성 저하, 질병발생 빈도 증가, 경영비 절감 제약의 주요 원인

* MSY(어미돼지 1두당 연간 출하두수) : 우리나라 15두, 덴마크 25

◦ (추진방안)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원방식 전환*(보조+융자→이차보전)

* 현재 지원방식·규모(2,450억원)로는 10조원 규모 시설현대화에 40년 이상 소요

- 시설현대화를 통해 품질을 고급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

(4) '12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 달성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 (전략)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임

* (중국) 서부내륙 신시장 개척, (일본) 중소도시 판촉강화, (아세안) 국가별 선호품목 지원

* (신선) :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 (가공)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 (수산) 넙치, 굴, 전복 등 10대 양식품목

◦ (수단) 수출선도조직(16개), 수출협의회(17개)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자율규제(체크프라이스)토록 하고, 다품목·공동수송이 용이한 가공제품부터 전문물류업체를 선정(4월)하여 수출업체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5)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원예농산물) 인삼,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전문단지(292억원) 이외 일반 원예시설을 신규로 지원(500ha, 250억원)할 계획임

◦ (10대 양식전략품목*) 연구클러스터 운영, 양식면적 확대(4천ha) 및 갯벌 양식장 임대차 허용 등 신규 경영체의 진입도 활성화(‘수산업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할 계획임

* 갯벌참굴, 해삼, 넙치, 해조류, 관상어, 새우, 능성어, 참치, 뱀장어, 전복

◦ (축산물) 필리핀 등 해외농장개발(‘11 : 37천ha → ‘12 : 80)을 통한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 (‘10) 1,597천톤 → (‘12) 2,522 → (‘14) 3,138

2. 농협개혁을 완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하는 농수산물 유통을 실현하겠습니다.

(1) 농업인은 생산, 가공·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도록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판매능력 확충)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 필요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임

◦ (농업인 참여유도) 농협과 장기 수탁 계약시 출하선도금 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조합 경제사업 참여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해나갈 계획임

- **(이행 점검)** 정부농협간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2월)하고, 이행점검을 위해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운영(3월~)할 계획임
- **(품목별 유통선진화)**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담당토록 할 계획임
 - 쌀 : 전국단위 판매회사 설립 추진, 수도권 집배송센터(안성) 설치
 - 청과 : 안성 등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소비지 대형 소매매장과 직거래
 - 축산 : 생산~판매를 계열화한 대형패커 육성 및 수도권 종합물류센터 설치

(2) 농협·수협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품목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쌀)** 수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2년 RPC 비 매입자금의 **25%** 이상 수탁매입을 의무화('11 : 20%)하고, 가공용 쌀소비를 보다 확대('08 : 22만톤 → '12 : 40)해 나갈 계획임
- **(원예)**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11 : 12% → '12 : 20)하고, 수급불안 품목의 국내산 수매·비축(고추 : 0% → 2, 마늘 : 1% → 2)을 늘려나갈 계획임
 - 아울러,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능력 제고를 위해 고랭지 배추에 대해 면적조절 시범 추진(농협)
- **(축산)** 한우 암소도태, 돼지 종돈공급 확대, 우유 전국단위 수급관리 등 **축종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 **(수산)**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시설현대화**('12~'15, 2,024억원) 등 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수산물유통선진화방안' 마련, 9월)

3. 귀농귀촌,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추진배경) 베이비 부머 세대('55~68년생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 부머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13.9%는 5~10년내 이주 계획)
 - 도시의 베이비 부머에게는 농어촌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어촌은 신규인력 유입으로 활력을 창출
- (교육·지원) 귀농·귀촌 전문상담사를 양성(120명)하여 귀농인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농지·어선·주택구입·시설건립 등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600억원)할 계획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코디네이터(120명) 육성 등을 통해 귀농·귀촌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울러, 귀농·귀촌 페스티벌(6월),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공동경영체)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운동'과 연계하여 공동영농·영어,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등을 추진할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 강원도 옥계 한울타리 마을 >

- ▶ 귀촌자 6명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영화체험학교를 운영하여 매년 3천명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체험학습장도 운영
- ▶ 작목반을 구성하여 우렁이 쌀, 마늘, 두릅, 산채 등 친환경 농산물을 연간 138백만원 판매

2. 보도자료 Q&A

2012 업무보고 관련 Q&A

2011. 12.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 ❖ 목 차 ❖ ❖

Q1. '12년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중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249
Q2. '04년부터 FTA 기금사업을 통해 과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신규과원의 참여제한 으로 경쟁력 있는 농가가 지원받지 못할 경우 대책은?	250
Q3. 시장개방화 대응위해 일반원예 시설 신규지원, 시설원예 작물 수출품목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51
Q4. 양식장 시설 현대화는 왜 필요한지?	252
Q5.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건조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253
Q6. 어선감척을 하면서 어선 대체건조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254
Q7. 해외 어분공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255
Q8. 농신보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256
Q9.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에 따라 일부 밭작물의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불안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가?	257
Q10. 대형 패커(Packer)란?	258
Q11. 10대 품목의 선정 기준 및 육성 전략은?	259
Q12. 갯벌양식어업의 현황 및 전망은?	260
Q13. 밭 농업 직불제는 왜 일부 품목만 도입하는지?	261
Q1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다 도입이 늦은 이유는?	262
Q15.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추진사항과 밭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예정대로 추진은 되는지?	263
Q16.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추진시 쌀직불제 등 타 직불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64
Q17.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련 읍·면 지역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조사결과는?	265
Q18. 친환경농업직불 중 저농약 인증 직불금은 왜 지급단가를 인상하지 않는지?	266
Q19.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2년도에는 어떤 일에 중점을 둘 것인지?	267
Q20. 우리 농어촌 운동과제 중 농어촌 재능기부는 무엇이며, 활성화 방안은?	269

Q21. 식품산업과 농어업 연계강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 및 사업추진 계획은?	270
Q22. 수출 전략품목 육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71
Q23. 우수 외식업 지구란 무엇이며, 왜 육성해야 하는지?	272
Q24. 영농·영어 정착교육과정 운영방안은?	273
Q25.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방안은?	274
Q26. 도시민 농어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방안은?	275
Q27.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운영방안은?	276
Q28. 국가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의 주요 내용은?	277
Q29.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278
Q30. 수익창출 R&D 비즈니스 모델 육성 방안은?	279
Q31.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유 및 기대효과는?	280
Q32. 방사선육종연구센터 건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281
Q33. 생명자원산업화센터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282
Q34. 농업 탄소상쇄사업이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283
Q3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개념과 향후 추진계획은?	284
Q36. 품목별 GAP 인증 심사기준 마련의 구체적 내용은?	285
Q37. 음식점 원산지표시에서 어떤 표시방법이 구체적으로 바뀌나요?	286
Q38. 중금속 오염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은?	287
Q39. 해외농업개발 면적 2배 확대방안은?	288
Q40. 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산지·수출엘리베이터 등 미국 현지 유통망 확보계획은?	289
Q41.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의의 및 향후 산림분야의 해외자원개발·협력 확대 방안은?	290
Q42. 농산업복합단지(MIC)의 향후 추진방향은?	291
Q43.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은?	292
Q44. 수산분야 ODA 발전 방향은?	293
Q45. 내년도 러시아 명태 입어협상 결과는?	294
Q46.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중 어업위에서 마련할 수 있는 조치와 실효성은?	295

문1) '12년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중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 축산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리 적용, '11.12.31 이전에 축산업 등록이 된 축사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현행방식(보조+용자)**으로 지원되는 농가는 전업규모 이상부터 전업농가 규모의 약 2배까지
 - **용자방식(이차보전)**으로 지원되는 농가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초과하는 농가
 - 다만, 전업농가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전업규모로 축사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 **현행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
 -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 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2,5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축종·지원대상자별로 예산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
 - **현행방식 대상자**는 현재 기 설정된 **상한액** 규모에서 지원
 - * 단, 낙농의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보조포함사업에 미포함)
 - **용자방식 대상자**는 **축종별로 상한액을 설정(최대 50억원)**

- 또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시설도 지원할 계획**
 - 조사료배합기(한육우), 로봇착유기(낙농) 등으로 **축종별로 지정**

문2) '04년부터 FTA기금사업을 통해 과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규과원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으로 경쟁력 있는 농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책은?

- 한·칠레 FTA대책으로 '04년부터 '10년까지 1조 2천억원의 FTA 기금을 조성하여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흡한 실정
 -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율이 23%수준에 불과하고, 영세한 경영 규모와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 향상에 한계

-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과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조건을 '04.5.31일 이전 조성된 과원에서 '11.5.31일 이전 조성된 과원까지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농가 육성
 - * 단, 한·칠레 FTA 폐업지원품목은 2004.5.31이전 조성된 과원에 한정
 - 사업량과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충분히 지원할 계획
 - * 사업량 및 사업비 : ('11) 3.1천ha, 491억원 → ('12) 3.5천ha, 552억원
 -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원조건도 50ha 규모에서 30ha 규모로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거점으로 육성
 - 지원조건 완화 : ('11) 50ha(최소 30ha) → ('12) 30ha(최소 20ha)

문3) 한·미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원예 시설에 대한 신규지원과 시설원예 작물을 수출품목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부담경감 등을 위해 일반 원예시설에 대해서도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겠음
 - '17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 100개소, 일반원예시설 3천ha에 대해 5천억원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 추진
 - 일손부족 등으로 자급률이 떨어지는 고추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주산지 23개소 3.6천ha에 대하여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 단위면적당 2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으로 자급률 하락에 대응
 - * 비가림시설 생산성 : (노지) 232kg/10a → (비가림시설) 670kg/10a
 - 자급률 추이 : ('00) 85.9%→('05) 71.0→ ('09) 62.9 → ('10) 50.9
- 첨단유리온실 단지 1천ha(3조원)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작물을 농산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기도록 하겠음
 - 재해예방 및 수출 안전농산물 생산거점으로 육성
 - 신규작목 개발, 수출 전용 품종개발 등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문4) 양식장 시설을 현대화는 왜 필요한지?

- 우리나라 양식산업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이 20년 정도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중
 - 넙치 육상양식장 300여개소 중 50%, 뱀장어 수조식양식장 500여개소 중 40%가 15년 이상 경과

- 노후시설은 생산성 저하 및 양식수산물 위생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설 개보수 및 첨단시설로 교체가 필요함
 - 해면의 경우 양식장 및 종묘배양장 1만여개소 중 '17년까지 10%인 1천개소의 수조, 보일러, 펌프시설 등 정비
 - 내수면은 뱀장어 양식장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양식장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을 100개소 지원
 - 관상어는 낙후된 생산 시설 정비, 신제품 생산 시설 설치 등 관상어 용품 제조업체 등 150개소 시설 현대화 자금 융자

-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영세어업인 지원을 위해 저리 융자를 통해 시설 현대화를 유도
 - 개소당 4~8억원의 한도내에서 이자 1%대 융자 지원

-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생산성 및 수출 증대효과 거양
 - '10년 대비 양식생산량 25% 증가, 수출액 5배 확대

※ 양식생산량 : ('10) 140만톤 → ('17) 175, 수출액 : ('10) 7억불 → ('17) 37

문5)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건조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 (지원대상) 연근해어선 중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선을 중심으로 지원
 -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조업경쟁이 불가피한 근해어선 중 선령이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에 우선 지원
 -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중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의 규모를 축소 대체 신조를 하는 경우 등에 우선 지원하며, 기존 어선은 폐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

- (지원규모) 업종별로 구분을 두지 않고 톤당 단간(4천만원)를 기준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지원
 - 어선원 노동·거주 환경 개선,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선형개선 등에 사용

문6) 어선감척을 하면서 어선 대체건조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 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량보다 과도한 어선 수를 줄이는 사업으로 적정 허가 정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

- 반면,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건조 사업은 어업의 인프라인 어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어선원의 조업·거주 여건을 개선시키고 유류사용량 감소 등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문7) 해외 어분공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 세계적인 양식생산량 증가로 인한 어분 확보경쟁 가열되어, 양식 사료의 주원료(50% 이상)인 어분의 안정적 확보는 양식산업 발전의 필수 요건
 - 어분 생산은 소폭 증가하는데 반해 수요는 지속 증가하여, '08~'10년 평균 대비 '20년 어분 생산은 2%, 가격은 43% 상승 전망

- 국내산 어분*은 13개사에서 연간 2~3만톤 생산('09년 이후 3만톤 이하로 정체)하며, 잔여 수요는 17개국에서 연간 4~5만톤을 수입하여 충당
 - * 주로 수산가공 부산물로 제조, 수입산에 비해 단백질 함량과 신선도가 낮아 전체의 30% 내외만 양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양축용 또는 비료로 이용
 -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남미 어분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여 물량확보가 곤란하고, 평균 수입단가는 매년 증가세
 - * 평균 수입단가 : ('00) 556\$ → ('05) 767 → ('08) 1,152 → ('09) 1,135 → ('10) 1,698
 - 독자적 어분 생산거점 및 공급선 확보가 미흡할 경우 사료가격 폭등으로 국내 양식업계 피해 및 양식 수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

- 해외 생산시설 및 설비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가 요구
 - 중·소 원양어업자 단독 또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원양어업 관련 회사* 설립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여 투자 추진
 - *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 관련사업(양식, 운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및 운영 지원 (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
 - 어분의 원료가 되는 어류의 생산이 용이한 남미 또는 인도 현지에 어분공장 및 시설을 건립

문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 FTA 대책으로 추진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규모화된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하므로 **고액의 융자금 형태로 지원**
- 현행 농신보 제도에는 보증 한도, 부분보증비율, 심사평가방법 등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강한 규제가 있어 대출에 한계**
 - * (보증한도) 개인 및 단체 10억원, 법인 15억원
 - * (부분보증비율) 개인 및 농어업법인 85%, 기타 90%(나머지는 대출기관 책임분)
 - * (심사평가방법) 5천만원 이하 : 간이신용조사,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 약식 신용조사(재무40%, 비재무60%), 2억원 초과 : 정식신용조사(재무50%, 비재무50%)
- 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보증 한도 및 부분보증비율 상향 조정, 농신보 보증심사 및 대출 기관 평가 시 경영능력·가능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

문9)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에 따라 일부 밭작물의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불안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가?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단계부터 1년생, 조사료 및 다년생 작물 등 한도를 정하여 특정품목으로 쏠리지 않도록 유도
- 수요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콩, 조사료, 고추 등의 품목은 어느 정도 생산 확대가 필요한 실정
 - 콩 등은 두류 수매약정사업과, 채소류 등은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최저보장가격제도)과 연계하여 계약재배 추진
 - 조사료는 생산특구 지정(50개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톤당 4만원) 등과 연계하여 '14년까지 사료작물 생산량 2배 확대 추진

< '12년 품목별 재배면적 계획(안) >

	콩	조사료	1년생 작물	다년생	기타작물 등
40천ha (100%)	18 (45.0%)	10 (25.0)	5 (12.5)	2 (5.0)	5 (12.5)

* 다년생 : 인삼, 과실류 등

- *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실적(추정)
 - 콩 13천ha : 자급률 ('10) 31.7% → ('11p) 35.3(+3.6)
 - 조사료 5천ha : ('10) 82.0% → ('11p) 85.3(+3.3)

문10) 대형 패커(Packer)란?

- 대형 패커란 생산·도축·가공·판매(수출)를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축산기업
 - 생산단계에서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과 연계를 통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계약 생산
 - 패커는 소유·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협동조합형과 민간기업형으로 나뉨
 - 협동조합형은 농가가 주축이 되어 협동조합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며, 민간기업형은 민간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임
 - * 협동조합형 :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 농협의 안심축산
 - * 민간기업형 : 태국 체, 미국 타이슨푸드, 칠레 아그로슈퍼 등

- 우리 현실에 적합한 패커 형태는 규모화된 전업농가가 많고,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직이 존재하는 현실을 볼 때 협동조합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
 - 농협중앙회 또는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는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육성할 계획
 - 민간 패커의 경우에도 도축장 통합 등의 요건을 갖추면 기존 정책사업의 틀 내에서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는 지원할 계획임

문11) 10대 품목의 선정 기준 및 육성 전략은?

- 10대 품목 선정은 ①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품목(예 - 갯벌참굴 : 여름철에도 생식이 가능한 굴 생산) ②신개념 양식방법이 개발되는 품목(예 - 참치 : 외해양식, 새우 : 빌딩양식), ③세계시장에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품목(예- 해삼 : 중화권 소비 폭발적 증가 등) 등 세계시장이 확대되고 기술개발 잠재력이 큰 품목을 선정
- 10대 품목 육성을 위해 자본·기술·인력이 수산업에 들어올 여건을 조성하고 고품질·안전·위생의 대한민국 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
- 갯벌양식장 임대차 허용 등 양식어장 진입규제 완화 및 어장별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총허용양식량 제도 도입 등 친환경 양식 실현
 - 최정예 수산인력(경영체 및 기술인력) 및 양성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수산업의 글로벌화 견인
 - 양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금리인하) 확대 및 양식재해보험 확충을 통한 위험관리체계 강화
 - 10대 전략 품종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 클러스터(R&D 로드맵)를 구성·운영하여 조기 산업화 도모
 - 수협·품목별 단체를 활용한 마케팅조직화 및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
 - 고품질, 고효율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 생산·가공·판매 계열화형 해외양식 진출 지원
 - 품목별 수출홍보 강화 및 시장 확대 지원

문12) 갯벌양식어업의 현황 및 전망은?

□ 세계적으로 우수한 갯벌(25만ha)을 보유하고 있으나 갯벌의 이용은 수산물 단순히 포획·채취 등 소극적 이용에 한정

○ 갯벌에서 연간 수산물 생산액은 3,200억원 수준

○ 어촌계 중심의 배타적 어장지배로 신규자본 및 인력 진입 제한 등으로 어촌경제 침체

* 갯벌면적(25만ha) : 마을어장(14만ha, 57%), 보전(7만ha, 28%), 유희(4만ha, 15%)

* 갯벌 수산물 생산실적 : ('90) 165천톤/1,613억원 → ('10) 77천톤/3,256억원(△53.3%)

□ 유희, 방치된 갯벌의 종합적·체계적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 마을어장에 갯벌양식어업을 허용하여 갯벌참굴, 해삼 등 새로운 소득품종을 집중 양식

○ 갯벌양식어업에 대한 임대차 허용 등 진입규제를 완화

⇒ 현재 「갯벌양식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심의중이며, 어업권 임대차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 동시 추진 중

□ 향후 2020년까지 갯벌참굴 38백ha, 해삼 75백ha 등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 수출에 기여

* 갯벌 수산물생산 전망 : ('10) 77천톤/3,256억원 → ('20) 510천톤/4조원

* 어업인 후계인력 등 신규 일자리 창출 : 35천명(5년후 연간)

문13) 쌀 농업 직불제는 왜 일부 품목만 도입하는지 ?

- 쌀은 과수, 화훼, 시설채소 등 고소득 작목이 많은 점*, 한정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논(쌀)과 유사한 형태의 전체 쌀에 대한 고정직불을 별도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분야별 평균소득('10년, 천원) : (전체평균)31,121, (논벼)20,628, (과수)34,991, (채소)28,625, (특작)39,127, (화훼)27,408, (전작)27,252, (축산)42,179

** 쌀고정직불제도 추가 도입 시 소요예산 : 연 5,136억원(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 다만,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여·야 합의 내용*에 기초하여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증산을 희망하지만 생산이 감소하는 일부 품목(19개 품목**)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하는 것임

* (여·야 합의내용, 10.31) 쌀농업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ha당 40만원 지급

** (19개 품목) 겉·쌀·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문1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다 도입이 늦은 이유는 ?

□ 그동안 수산부분 직불제는 법적근거 미비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접직불금)에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12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18억원을 확보하였음

* 시범사업 대상 : 육지생활중심권 5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4,415가구

□ 앞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8km이상 떨어진 2만7천가구로 점차 확대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제와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 도입 등 수산분야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문15)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추진상황과 밭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예정대로 추진은 되는지 ?

- '13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도상연습을 실시('10~'12년) 하면서 도입 방안과 도입 시 예상문제점을 검토 중임
 - 작년 1차 도상연습에 이어 금년에는 44개 읍·면(약 1만호)에서 19개 품목에 대해 2차 도상연습(5~12월)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분석중에 있음
 - * 1차 도상연습 품목(9개) : 쌀, 콩, 고추, 사과, 포도, 감귤, 한우, 돼지, 산란계
 - * 2차 도상연습 추가품목(10개) : 감자, 보리, 배추, 마늘, 오이, 대파, 배, 육우, 번식우, 인삼
 - * 3차 도상연습 추가품목(15개) : 식량작물(5), 채소(5), 과수(2), 축산(1), 특작(2)

-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대상품목 중 주요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도입한 밭농업 직불제의 추진동향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방향 재검토 예정('12년)

문16)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추진시 쌀직불제 등 타 직불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 다른 직불제와의 관계(통합, 제도개선 등)는 밭농업 직불제 추진 동향, 소득안정직불제 도상연습 결과 분석 및 평가,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결정할 예정임

문17)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련 읍·면지역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조사결과는 ?

- 조건불리지역의 농지전용 등으로 대상지 선정기준인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가 변화되어 '11년에 재조사를 통해 대상지역 재선정 추진
 - * 조건불리지역 대상지 선정기준 :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가 14%이상 농지가 50% 이상인 법정리(종전 동일)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국 139개 시군(1,416개 읍·면)을 대상으로 '06년 본 사업 추진이후 처음으로 재조사('11.5~'11월, 668백만원)
 - * '11년 사업지침에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을 재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전국 16,566개 법정리 잠정 조사결과 조건불리지역 지원대상 법정리는 400여개가 증가한 3,540개 수준 전망
 - * 증감 : 신규진입 540여개 법정리, 기존에서 제외 110여개, 동 편입·법정리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감소 20여개

문18) 친환경농업직불 중 저농약 인증 직불금은 왜 지급단가를 인상하지 않는지 ?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유기농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하였고, '16년에 저농약 인증제 전면 폐지

□ 따라서,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에 따른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유기인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무농약, 유기인증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을 추진하는 것임

* (여·야 합의내용, 10.31) 친환경 유기, 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지급단가 50% 인상 및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2012년부터 시행

문19)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2년도에는 어떤 일에 중점을 둘 것인지?

- 도·농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 공공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임
 - 농어촌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중요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농어촌영향평가 등을 통해 부처·지자체의 적극적 협력 유도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모색
 - 농어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개선을 위해 주민, 전문가 대상 정책공모제,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 주택 규모를 100㎡에서 150㎡로 확대하고,
 - 환경부와 협력하여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 염전 소금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예정임

- 고령농어업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제 총 지원규모를 2.5배 이상 확대('11 : 72억원 → '12 : 190억원)하고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도 2배 확대('11 : 480개소 → '12 : 930)
 - 농어촌 부모들의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연차별로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10개소, 9억원)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대상인원을 약 4천명에서 8천명으로 2배 증대
- 결혼이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해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400명) 하고, 정착단계에 따라 기초 영농교육, 1:1 맞춤형 영농교육 실시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200호를 선정하여 모국방문 지원
-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범 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13년까지 '색깔있는 마을' 3천개 발굴·육성
 -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사업을 "색깔 있는 마을"에 집중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마을협의체, 농어촌현장포럼 및 재능기부자가 마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지원
 - 마을협의체, 농어촌현장포럼이 마을별 발전과제 발굴, 지역별 추진방향 설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가 육성
 - * 시·군 당 3인 이상의 현장 활동가(420명 수준)를 선정하여 교육 등 추진
 - 재능기부자 3만 명을 확보하여 농어촌 지원('11.12.12현재 10.5천명)

문20) 우리 농어촌 운동과제 중 농어촌 재능기부는 무엇이며, 농어촌 재능기부의 활성화 방안은?

- 농어촌 재능기부는 농어촌 활력 창출 및 발전을 위해 개인 또는 기업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농어촌과 공유하는 활동
 -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수립, 의료, 문화, 경영, 관광, 경관, 회계, 금융, 건축, 미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 가능

- 농식품부는, 도시민 재능기부자와 농어촌 마을간 연결·지원을 위해 금년 9월 5일부터 스마일 재능뱅크(www.smilebank.kr) 본격 운영
 - 농어촌 재능기부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상담을 위해 재능기부 콜센터(1577-7820)를 운영하고 있음
 - 재능기부 희망자와 재능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재능매칭 알림 서비스” 제공
 - 전·현직 전문직업인, 출향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등을 중심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음
 - * 12.12일 현재 개인(7,403명) 및 단체(88개 3,109명) 10,512명 재능기부 신청 등록

- 농어촌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핵심재능기부단을 구성하여 농어촌 현장견학, 교육 및 재능기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
 - 재능기부자가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협의체 또는 시군단위 농어촌 현장포럼에 적극 참여 유도
 - 1사1촌 결연 기업체('10년도 8,180쌍, 교류 44천건)가 재능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체 홍보, 마을 정보 제공 등 추진

문21) 식품산업과 농어업 연계강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
및 사업추진 계획은?

□ (그간의 성과) 식품산업이 규제 대상에서 육성 대상으로 전환되어 농어업과의 동반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음

- 발효기술 R&D 개발을 위해 세계김치연구소 설립('10.3)하고, 전통 발효식품 시설현대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09~'11년 236억원)
 - 막걸리 '09년도 히트상품 1위 선정(시장규모: '08년 4400억원 → '10년 7,100원)
 - 소금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09.3)하여 천일염 산업화 시작하였고, 고추장·된장·인삼의 CODEX 규격 채택('09.7)
- 지역전략식품사업단* 및 농공상 융합형 기업** 육성추진
 - * 산학관연이 연계, 지역특산물의 생산·판매까지 체계적 관리('08: 42개소 → '11: 67, 누계)
 - *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자금 지원신설('10.7)

□ (사업 추진 계획) 식품산업이 국내 농수산물의 핵심 수요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농어업과의 연결고리 강화

- 식품기업-생산자간 원료공급을 규모화하고, 원료공급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농협의 역할강화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파일럿 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시제품 생산·상품화 교육을 지원('11: 8개소 → '12: 12)
 - * 예시(횡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가 스스로 가공·포장 판매하도록 가공 플랜트 지원, 복분자 등 생산
-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지정을 확대하고(신규 10개소, 누계 77), 농공상 융합형 기업을 활성화(신규 200개소, 누계 300)
 - * '11년 선정사례 : 농업법인(주)장수채가 여주땅콩작목반과 장수채판매(주)와 협력하여 땅콩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일괄 추진('10 : 매출 7억원 → '12목표 : 173)

문22) 수출 전략품목 육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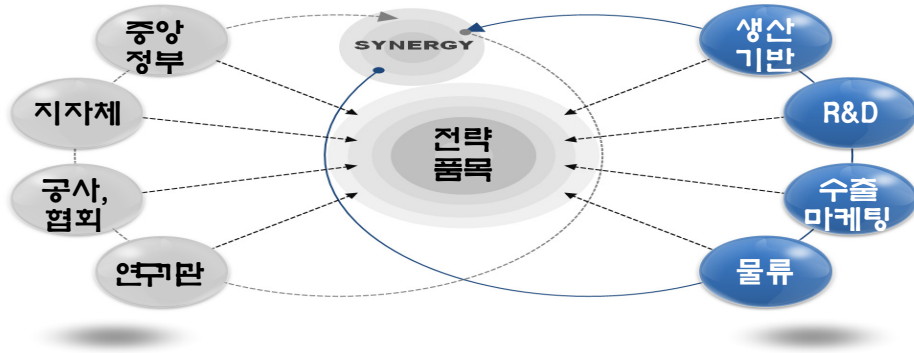
□ 성장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20개 전략 품목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책성과를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

○ 품목별 중점 국가·지역을 설정하고 연차별 지원 로드맵('12~'16)을 구축하여 프랑스의 와인(31억불), 노르웨이의 연어(71억불)와 같은 스타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생산·유통·수출 지원 담당기관으로 '전략품목 수출촉진단'을 구성하여 수출목표 설정 및 우선 해결과제* 발굴·지원

- 각 기관별 추진해온 지원 사업 연계 및 신규 협력 사업 발굴에 역점

* 예시 : 검역장벽으로 수출이 막힌 품목은 R&D, 수출 마케팅이 무의미



□ 또한, 기존 지원사업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임

○ 우리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박람회 참가, 판촉 지원 등 해외 시장개척사업('12년 350억원)의 지원 확대

○ 수출 물류비 지원 비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

* 전략품목 : 표준물류비의 10% 지원 / 일반품목 : 8%

문23) 우수 외식업 지구란 무엇이며, 왜 육성해야 하는지?

- (그간 정책방향) 외식산업 정책은 기존에는 안전·위생관리 등 규제 중심으로 진흥정책 부재한 상태였음
 - 일부 지자체에서 외식업체에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시설개선 위주로 지원되는 한계가 있음

 - (필요성) 우수한 외식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곳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하여 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홍보사업 등을 지원하여 특색과 품격을 갖춘 외식지구를 육성할 필요

 - (육성방향) 단순 시설개선 등 H/W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S/W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시켜 지구 내 외식업체간 시너지 효과 창출
 - (경쟁력) 위생·안전·서비스 교육과 경영 컨설팅 실시로 산업 경쟁력 강화, 지구 내 외식사업자 간 식재료 공동·대량 구매 추진으로 원가절감 유도 등
 - (관련산업 연계) 지역 문화-관광산업 및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 지역 축제, 박물관,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및 홍보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시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30%이상)을 평가·반영하여 국내 농수산물 사용 유도
-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친환경 농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 (평가) 주기적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 유도, 우수한 점은 모범사례로 전파

문24) 영농·영어 정착교육과정 운영방안은?

- 농어업 현장으로 진출할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농어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역량 배양 필요
- 영농·영어 정착교육과정은 취업준비 단계의 학생들이 직업세계로서 농어업과 농어촌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여 영농·영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
- 내년에는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등을 통해 선진 영농·영어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농어업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외에도
 -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농어업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학습체계를 갖추며,
 - 특히, 진로발달단계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졸업 후 농어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제공

문25)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방안은?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원화(One-Stop)** 체계 구축 필요
 - 현재 지자체, 농진청 및 유관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종합 추진

- 향후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농식품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사이트를 통합·관리하고,
 -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관심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맞춤형 전문 상담서비스 및 종합 정보를 제공할 계획
 - 개별 운영을 일원화함에 따라 수요자의 접근 용이성 확보 기대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귀농관련 상담을 위해 **상담전화(1577-9597)**를 운영하고 종합 정보를 **포털(www.returnfarm.com)**을 통해 제공

문26) 도시민 농어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방안은?

- 도시민 농어촌 유치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이주 준비부터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현재 도시민 유치를 위한 의지가 높은 25개 시·군을 선정해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도시민 유치활동 전담기구에서는 빈집 등 주거정보, 농어촌 문화 체험·체득 프로그램 제공
 - 또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방문 또는 연락 시 상세한 상담 제공
 - * 사업추진 시·군(25개) : 강원(화천, 양구, 양양), 충북(단양, 옥천), 충남(금산, 청양), 전북(남원, 완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전남(순천, 곡성, 장흥, 강진, 영암, 장성, 완도), 경북(안동, 상주, 봉화), 경남(하동)

- 이들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웰촌 포털 (www.welchon.com)을 통해서도 제공 중
 - 내년에도 2개 시·군을 추가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

문27)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운영방안은?

- 귀농·귀촌 코디네이터는 귀농인의 품목 및 지역 결정, 정보수집 등 귀농 준비부터 실행까지 현장에서 **종합 안내자 역할**을 수행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귀농 정책, 상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

-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 코디네이터 직무인식, 정보처리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현장 상담 및 실습 등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안내**를 위한 **실무 위주**로 구성
 - 특히,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귀농·귀촌인 및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실제 사례** 등을 공유

문28) 국가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의 주요 내용은?

- 구제역·AI 등 국가재난형 동물전염병 발생, 대형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병해충 증가 등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 기술개발 추진 필요
- 이상기상으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 발생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10년 병해충 예찰, 예측, 진단 등을 위한 국가병해충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 개발
 - '12년부터 농가단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찰정보 제공 등 국가병해충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13년까지 추진
- 구제역, AI가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진단기술 및 발병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대응 기술개발
 - (진단·예방기술 개발) 구제역, AI질병의 신속 진단 및 예방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사전질병 노출 최소화
 - (검역·방역기술 개발) 해외에서 발병한 질병의 국내유입 차단 및 국내 발생 시 조기 근절로 피해 최소화
 -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기술 개발) 구제역, AI의 전파방지 등 확산방지 및 질병 종식 후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후관리
 - (동물의약품 개발) 구제역, AI 질병에 필요한 동물의약품 개발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으로 도시생활권에 발생하는 산사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재기술 개발 요구
 - 도시침수 및 도시홍수에 대비한 시설정비 확충, 도시생활권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효율적 대응 시스템 구축('12~'14)

문29)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 R&D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실용화·사업화 필요성 증대
 - '12년부터 우수 기술을 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 시제품 생산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여 실용·사업화를 촉진

- 기술평가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인증을 받은 농림수산물 관련 기업(대기업 제외)에 장기·저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
 - '12년 지원규모(융자금)는 1,000억원으로 금리 3%,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

문30) 수익창출 R&D 비즈니스 모델 육성 방안은?

- 동일한 영농규모에서도 경영주의 역량에 따라 2~10배 이상의 소득 격차가 발생('09. 농가소득조사)
 - 생산성, 품질 등의 기술과 상품차별화 마케팅 역량이 소득격차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
 - 개발된 기술이 실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개발기술을 모델화하여 현장화 하는 연구가 필요(On-Farm 연구)

- 연구개발의 영역을 기술개발에서 보급확산 영역까지 확대
 - 생산기술에 가공, 마케팅, 디자인 등 종합적인 연구개발로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
 - 단편기술 종합화 및 가공하는 현장접목 모델개발 연구 확대

- '12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하여 생산, 상품화 및 마케팅 등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40개 거점 모델을 육성하는 수익모델 현장접목 연구 수행

문31)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유 및 기대효과는?

- 품종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육종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시험포장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나,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투자여력이 취약
 - 육종연구에 필요한 첨단 시설·장비 등을 갖춘 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소규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
 - * 950개 등록업체 중 10인이하 고용 소규모업체가 97%
 - * 연구원 10인이상 업체는 4개소에 불과

- '15년까지 육종연구에 필요한 첨단 시설·장비 및 시험포장 등 인프라가 구축된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종자업체 20개소를 입주
 - R&BD·수출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연구단지내 설치

- 첨단 연구시설 등 하드웨어와 R&BD·수출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종자수출 견인 및 고용창출
 - (수출) 글로벌시장 성장 가능성 있는 민간기업 20개를 유치하여 '20년 종자수출 2억불 중 40%이상 담당
 - (고용창출) 석·박사급 연구인력 120명 등 550여명 고용창출 예상

문32) 방사선육종연구센터 건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 1973년 방사선농학연구소 폐지이후 주변 경쟁국에 비해 방사선육종 연구개발이 부진하였으나, 최근 식물유전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방사선을 이용한 핵심 연구개발 거점 구축 필요
- 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방사선육종 전담 국공립연구기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기단계로 연구개발 실적이 미흡한 실정
 - * 돌연변이 신품종 육성 : 중국(655종), 인도(276종), 일본(233종), 한국(20종)
 - * 돌연변이 품종 재배면적 비율 : 중국 20%, 일본 10%, 한국 0.5%
- 2013년까지 방사선육종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방사선 육종 연구개발 확대와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육종연구 및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
- 2020년까지 돌연변이 품종개발수(25위 → 8위), 육종기술(12위 → 5위) 수준 진입 및 연간 1.5조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 방사선육종(radiation breeding)

식물 종자나 묘목에 방사선을 조사해 유전자나 염색체 돌연변이를 유발한 뒤 후대에서 우수한 형질을 갖는 변이체를 선발하여 육성하는 것

문33) 생명자원산업화센터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지원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곤충, 천연색소, 양잠분야에 4개소를 할 계획('12)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지역의 산업곤충 소재개발과 특화된 곤충자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필요
 - (기대효과) 지역의 특성화된 곤충자원을 산업화로 촉진시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
 - * 애완용, 화분매개용, 사료용, 식·약용, 지역축제용 등 지역의 다양한 곤충자원 종 개발·확보 가능
 - (사업내용) 1개소 건립에 총 50억원 투입('12~'14)
 - (향후계획)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4월)
-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약용작물을 소재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차원의 고부가 산업지원기반 구축 필요
 - (기대효과) 약용작물 및 자생식물을 활용한 천연색소·음료소재 개발 등 산업화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고부가소득원 창출 가능
 - (사업내용) 2개소 건립(나주·안동)에 총 200억원 투입('12~'14)
 - (향후계획) 건축공사 착공(1년차) 및 기자재 구입 등 설비 구축('14년 완료)
-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주산지에 원료 저장·가공·판매 및 체험학습이 가능한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창출 도모
 - (기대효과) 고부가가치 성장작목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양잠 산업이 지역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 제시
 - (사업내용) 3개소 건립에 총 180억원 투입('12~'16)
 - (향후계획)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4월)

문34) 농업 탄소상쇄사업이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 농업 탄소상쇄사업이란 새로운 설비투자 또는 녹색기술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이 감축분을 온실가스 감축 의무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임
 - 탄소상쇄사업을 통해 '20년에는 19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감축한 온실가스는 2013년 이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탄소상쇄사업에 적극적인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 지경부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CER) : 탄소상쇄사업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예산으로 구매(5천원/톤, 343억원)

문3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개념과 향후 추진계획은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등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량을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얼마나 감축시켰는지 검·인증하여 이를 제품에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저탄소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사업
 - *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CO₂ 표시제를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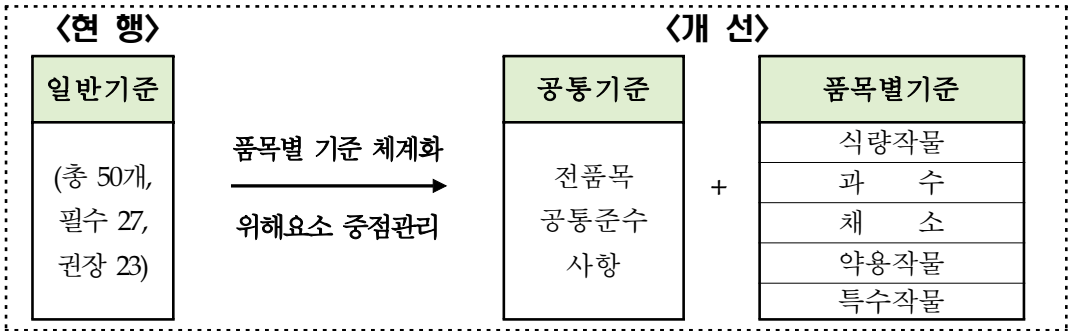
- '12년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인 쌀(곡물), 상추(채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10건의 인증을 농산물 브랜드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인증품목 및 건수를 확대

-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 47개 농산물의 LCI(전과정 목록 : 생산과정별 CO₂배출 현황 목록)가 연구개발이 완료
 - * 현재까지 LCI가 구축된 농산물 : (식량작물) 벼, 보리, 콩 등 9종 / (채소류) 고추, 배추, 양파 등 27종 / (과수) 사과, 배, 감귤 등 9종 / (특용작물) 느타리 버섯, 인삼 2종
 - * 달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접치, 전복 등 양식수산물은 품목별 LCI의 연구개발이 '14년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

- 인증방법은 생산자(농산물 브랜드)가 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농산물에 대한 기준 배출량을 산정하고 적용된 녹색기술에 따른 감축량과 비교하여 등급별(10%감축, 20%감축, 30%감축) 인증을 부여 검토

문36) 품목별 GAP인증 심사기준 마련의 구체적 내용은?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GAP 제도를 도입(06)
 - *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농산물 우수관리)
- 우수관리기준(50개)에 맞게 생산·관리되고, 우수관리시설에서 수확후 관리되며, 이력추적관리가 되는 경우 GAP 인증 부여
- 농가의 부담 및 GAP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일 관리 기준을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편한다는 내용임
 - 현행 품목구분 없이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단일 관리기준을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개편
 - (공통기준) 농약관리, 중금속 관리, 이력 관리 등
 - (품목별 기준) 식량작물, 과수, 채소, 약용작물 및 특용작물 등 5개 품목별 특성을 감안, GAP 기준 재설정



문37) 음식점 원산지표시에서 어떤 표시방법이 구체적으로 바뀌나요?

- 최근 소비자, 언론으로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사항에 대한 표준화 작업 추진(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6월)
- (글자크기)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 크기와 동일(현행: 1/2)
- (표준 원산지 표시판 신설) 유형별 표준 “원산지표시판(안)” 마련, 홈페이지(농식품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게시
- (표시 위치) 해당 음식명 옆이나 하단에 표시 (현행: 규정×)
- (섞음 표시) 국내산 섞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이 30%이상 함유되어야 함 (현행: 함량에 상관 없이 섞은 사실 표시)

문38) 중금속 오염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은?

-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중금속 오염정보를 필지별로 집약하여 관리·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토양·수질 오염 조사(환경부),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부적합 농산물 폐기(농식품부), 휴경·토양복원 사업 추진현황(지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오염 정보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오염정보를 필지별로 집약·관리하여 관련 정보의 활용성 제고

문39) 해외농업개발 면적 2배 확대 방안은?

* 개발면적 : ('11) 37천ha → ('12) 80, (증43)

- '12년에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 해외농업개발 협회 설립, 용자 조건 개선 등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펀드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농업협력사업을 규정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
 -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2월), 투자타당성 조사·교육훈련·정보 수집 등 지원체계 구축
 - 해외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용자조건을 석유·광물 등 수준으로 개선**(3년 거치 7년→ 5년 거치 10년)
- 이를 통해 '12년에는 해외농업 개발 규모가 **80천ha***로 '11년 37천ha 대비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
 - * 생산면적(66천ha) + 수집·유통물량의 환산면적(14천ha)
 - 기 진출 기업의 **파종면적 증가**와 유통시설 투자 증가로 인한 **곡물 생산·수집 면적 확대** ('11) 37천ha → ('12) 71, (증34)
 - 필리핀·인니·러시아 등에 **신규 민간 투자 증가** * ('12) 9천ha (순증)

문40) 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산지·수출엘리베이터 등
미국 현지 유통망 확보계획은?

- 수출 엘리베이터는 안정적 사용과 경쟁력 창출이 가능한 지분 참여,
합작투자 추진
 - 현지 곡물 메이저 G社의 시설증축을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현지
법인(AGC)과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고 세부사항 논의 중
 - 단기적으로는 지분투자 없이 장기 연간물량 보장방식의 시설사용
계약도 병행 추진

- 산지 엘리베이터는 '12.6월까지 투자가능 물건 확보 및 12월까지
인수 추진
 - 투자 자문사인 D社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중서부 지역 소재의
곡물기업 접촉 및 인수 가능성 타진
 - 자문사 내부 데이터베이스 및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AGC의
인수기준에 부합하는 잠재 인수대상 기업 선정 및 목표기업의
비즈니스·영업활동에 대한 자료 조사
 - *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D社와 Advisory 계약 체결 : '11. 9월
 - '11년도에 1차 검토 완료한 잠재 인수대상 55개사에 대해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접촉 추진

문41)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의의 및 향후 산림분야의
해외자원개발 · 협력 확대 방안은?

- 산림분야는 '87년부터 체결된 아세안 및 중·남미와의 양자협력 관계를 활용하여 해외조림 등 산림사업을 추진중

* 인도네시아('89), 캄보디아('08), 파라과이('09) 등 12개국 MOU체결

- 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의 실천적 수단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설립, ASEAN과의 산림협력 강화

* AFoCO :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09.6월, 제주) 공동성명으로 AFoCO 설립을 제안하여 1단계로 아세안 10개국과 기구설립을 논의
- 한·아세안 정상회의시('11.11.18, 인니) 국가간 체결한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에 기반하여 사무국을 국내설치하고('12.4월),
- 황폐산림복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보전, 인력양성 등 아세안과의 산림협력사업을 중앙아시아 등 제3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

* ('11) 아세안 9개국 → ('12) 아세안, 몽골, 키르기즈스탄 등 확대

- 해외조림지역 다변화를 통한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도모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에 한정된 조림 진출 지역을 중남미(파라과이)로 다변화하여 자원개발 거점 확대 및 활성화 도모
- 파라과이 신규조림 추진(1천 ha)

* 2011년 6월말 현재 12개 국가에 23개 업체가 진출하여 239천ha 조림 실시

문42) 농산업복합단지(MIC)의 향후 추진방향은?

- MIC 사업은 개도국의 농업잠재력과 한국의 개발경험·자본을 결합하여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등 연관산업을 함께 발전
 - 양국의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개도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

- 이번 11.21. 체결된 필리핀 MIC 사업 추진을 위한 MOU는 지난 2년간 준비한 MIC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계기
 - 민간기업은 사업을 주도하여 투자를 확대
 -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토지확보, 치안유지 등 간접지원에 주력

- 정부는 필리핀 외에도 인니, 캄보디아 등 성공 가능성 높은 국가로 MIC 사업을 확대할 계획
 - 농업환경조사를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에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계약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진출 활성화에 주력

문43)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은?

- 자원 보유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자원 감소 및 새로운 국제수산기구 설립에 대비하여 해외 신어장 개발을 지원
 - '01년부터 해외 신어장 조사를 실시하여(214억원 투입), 현재 사업성이 확인된 7개 수역에서 상업 조업 중
 - '12년에는 14억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대한 조사를 추진 예정
- 최근 해외에서 고수익 사업으로 부각되는 해외양식·가공 등 해외 수산시설에 대한 국내 원양·수산 기업의 투자 지원
 - '12년에는 12억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예정
- 기존 사업 방식의 보완 등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12.4월까지 마련할 것임
 -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12.6월 개정안 국회 제출)하여, 정부 투·융자 확대 및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

문44) 수산분야 ODA 발전 방향은?

- UN 해양법 발효 이후,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및 자원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연안국 조업에 대한 어려움 가중
 - 세계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82%)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고 자국 수역내 수산자원 이용 조건으로 경제적 원조를 요구

- 연안국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06년부터 물자공여사업을 추진
 - 사무기기, 비상용 발전기 등 내구성 물품을 중심으로 지원
 - * 지원규모(억원) : ('06) 2.4 → ('08) 4 → ('09) 4 → ('10) 5 → ('11) 10 → ('12) 16
 - * 지원물품('10) : 키리바시, 투발루, 기니, 기니비사우 등 4개국에 굴삭기, 양식장용 시약품, 복사기, 발전기 등을 지원
 - 일본, 중국 등 조업 경쟁국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아 이들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 * 일본 → 키리바시 지원('05년 6백만불 투자, 해안개발 지원)
 - * 중국 → 바누아투 지원('05년 10백만불 투자, 여객선 및 화물선 건조 지원)

- 향후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협력국을 선정하고, 연안국 주민들의 자생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통합적 기술지원 사업으로 확대
 -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원양어선 주요 입어국을 중점 지원
 - * 참치 연승어업의 최대 어장인 키리바시 및 대서양 트롤 주요 어장인 기니·기니비사우에 집중 지원
 - 특히, 필수 섭취 영양소 부족, 식생활의 서구화 등의 원인으로 비만 등의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島嶼國)에 식생활 교육, 농수산물 재배·종자 기술 등 전수하는 사업 추진

문45) 내년도 러시아 명태 입어협상 결과는?

- 제21차 한·러어업위원회(11.11)에서 2012년 러시아 EEZ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쿼터 61,966톤 확보
 - 어종별로는 명태 40,001톤을 비롯하여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8,000톤, 기타 2,015톤(오징어 이외 어종은 전년과 같은 수준)
 - 조업어선은 명태트롤 12척, 대구저연승 4척, 꽁치봉수망 19척, 오징어채낚기 104척 등 총 4개 업종 139척
 - * 오징어는 금년도 조업쿼터를 54%만 어획함에 따라 업계가 실제 잡을 수 있도록 쿼터는 줄이고(10,000톤→ 8,000톤) 조업척수는 늘림(90척→ 104척)
 - 입어료는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모든 어종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
 - * 입어료 : 명태 336\$/톤, 대구 385\$, 꽁치 101\$, 오징어 96\$, 청어 100\$, 가자미 269\$, 가오리 134\$, 복어 81.5\$
- 러시아측은 자국산 게류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IUU어업 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이행을 조건으로 쿼터를 배정
 - 러시아산 게류를 신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의 입항정보 제공 및 원산지 확인을 통해 불법교역 차단
-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설 등 투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러시아수역 명태조업선사(5개사)가 사할린에 냉동창고 시설, 그 밖의 다른 수산업체에서도 가공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문46) 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중 어업위에서 마련할 수 있는 조치와 실효성은?

- 한·중 어업협상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우리 EEZ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 과거, 1만2천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조업하였으나,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12년 현재 우리 EEZ내 중국어선 입어척수를 1,650척으로 대폭 축소하여 입어 허가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은 현저히 감소
-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1.10)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해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
 - * 중국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 실시('12.9), 중대위반(무허가·영해침범조업 및 공무집행방해)어선에 대한 우리EEZ내 3년간 입어자격 취소('11.12) 등
- 향후 한·중 어업공동위 및 수산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방안 등 다각적인 불법어업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

IV

언론 보도

농어업시설에 10년간 10조 투자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정부가 농어업시설 현대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엔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경기 안양 소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보고'를 했다. 농림부의 업무보고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한·미 FTA 등에 따른 국내 시장개방에 맞서 외국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농협 유통망을 개혁하는 등 농수산품의 유통구조 혁신에 힘쓰고, 귀농 지원을 통한 농촌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0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시장개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지원금 절반 이상(5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자금은 축사 신축·개보수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또 시설원에 분야에 3조7300억원, 수산 분야에 6400억원, 과수 분야에 5600억원 등이 쓰인다.

농수산식품의 수출도 크게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인삼, 김치 등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갯벌참굴, 참치 등 수산분야에서 성장 잠재

력이 높은 10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다품목·공동수송이 용이한 가공제품부터 전문 물류업체를 선정해 수출업체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내년 농협의 개혁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그동안 농협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되면 경제지주를 전국 단위 판매조직으로 전면 개편해 유통과 마케팅을 맡길 계획이다.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현재 12% 수준에 불과한 취급물량을 계약재배 등을 통해 내년에는 20%, 2015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또 현재 5~7단계로 형성된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여 직거래를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이 정착될 경우 유통문제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추와 무를 고정가격으로 다년간 계약하고 다양한 방식의 직거래를 활성화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물가를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상담사를 양성해 귀농인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농지·시설건립 등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미래 농어업의 중심은 시설 농어업"이라며 "FTA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농어업 발전이 필수"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농어업 시설현대화 10조 투입

농식품부 2012년 업무보고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민간이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 정부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대신 기존의 시설 분야 보조금은 2015년까지 폐지된다. 또 내년에는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농협 개혁을 통해 농산품의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도 꾀한다. ▶관련기사 6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

품부는 우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현재 연간 2450억원 수준인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액을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분야 보조금 지급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비중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6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농식품 수출액을 내년 100억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인삼 등 25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홍승완 기자/swan@

농어업 시설 현대화 10년간 10조 원 투입

매년 2천500명 농어업인도 양성

정부는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한국 농어업의 선진화 계기로 삼기 위해서다.

또한 내년에는 농림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농협 개혁을 통해 농산품의 판로 확대와 물가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우리 농어업이 시설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연간 2천450억 원인 농어업 시설 현대화 지원액이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액 보조금 지급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비중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원 방식도 현재까지의 '보조+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고와 농대에 전문 교과과정이 마련된다. 창업지원원을 통해 매년 2천500명의 젊은 농어업인도 양성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간 76억 달러 수준인 농산물 수출 목표를 내년에는 연간 100억 달러로 끌어올리도록 국가별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인삼과 파프리카, 굴, 막걸리 등 25개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농협 신·경(신용·경제사업)분리가 이뤄지는 내년을 기점으로 농협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농협이 농산물 가공·판매를 담당해 농민은 농산물 생산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 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과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설립해 이행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아울러 품목별 유통 선진화를 통해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고자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불리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해 귀농·귀촌 안내를 위한 전문상담사 120명을 양성하고 농어촌 마을 공동 경영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문화일보

1사1촌운동 질적 도약 정부, 발전방안 만든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 문화일보가 농협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펼치고 있는 1사1촌운동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에 1사1촌운동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사1촌운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어촌 재능기부', '우리 농어촌운동' 등 다른 도농교류 운동과 연계해 1사1촌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농어촌지역 및 도농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맞춰 초·중등 학생들이 농어촌 가치를 습득하고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팜스쿨과 농어촌 유학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도 내년 9월에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우리 농어업이 시설 개발을 통해 기후 변화와 어족 자원 고갈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연간 2450억원인 농어업 시설 현대화 지원액을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 보조금 지급 비중을 줄이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비중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76억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 목표는 내년에 100억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삼, 파프리카, 굴, 막걸리 등 25개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

'1사1촌' 종합진단·시너지 효과 모색

■ 농식품부 업무 보고 농어업 10년간 10조 지원



▶ 관련기사 1면

■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사업계획 중 하나로 1사1촌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한국 농어업의 선진화 계기로 삼기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일보와 농협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펼치고 있는 1사1촌운동이 내년부터 더욱 내실화·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1사1촌운동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사1촌운동에 대해 정부도 힘을 보태 범국민적 농상생운동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시대에 1사1촌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1사1촌운동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의 '우리 농어촌운동' 등 다른 도농교류 운동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1사1촌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10년간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10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어업 시설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연간 2450억원인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액을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고와 농대에 전문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지원을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올해 76억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 목표를 내년 100억달러로 끌어올리도록 국가별 진출 전략도 적극 마련되고 25개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이뤄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농협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과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설립해 이행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

2011년 12월 16일 (금)
경제 16면

문화일보

FTA맞아 농산물 외국시장 진출 강화 물가안정 위해 농협 유통망 대폭 개혁

■ 주요내용

■ 농림수산물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국내 시장 개방에 맞서 외국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올해 경제에 큰 부담이 됐던 물가 안정을 위해 농협 유통망을 개혁하고 질병·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노력도 눈에 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맞춰 귀농 지원을 통한 농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한미 FTA 등을 외국 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고자 내년 수출 지원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성장 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25개 전략품목을 선정한다.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품목별 협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략품목별 수출 촉진단을 통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괄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수출업

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연말에 중국 칭다오에 국외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출 물류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갯벌잡굴 등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육성해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 2021년까지 수출용 종자 20개를 개발하는 골든 시드프로젝트도 추진한다. FTA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10년간 10조원의 시설현대화 자금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8000억원을 투자하되 절반은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한다. 절반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순수 융자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융자 방식이 종전 보조금 방식보다 20배 이상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기업농을 시작으로 2013년 전업농, 2014년 준전업농, 2015년 소규모 농가 등으로 축산업 허가제 대상을 확대한다. 도축장도 85개소에서 내년 78개, 2015년 36개로 줄일 계획이다. 저가 수출 등 수출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도 독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내년

농협의 개혁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그동안 농협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되면 경제지주를 전국단위 판매조직으로 전면 개편해 유통과 마케팅을 맡길 계획이다. 2020년까지 경제지주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 판매를 하면 유통 문제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955년과 1968년 사이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농식품부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13.9%는 5~10년 내 이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동영농·영어,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등을 추진할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상담사를 양성해 귀농인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10조 투입

10년간 연평균 1조 씩 확대
인삼·굴 등 수출 전략 품목 육성

김태경 기자 tkim@kookje.co.kr

정부가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농어업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또 내년 농식품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로 잡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연간 2450억 원인 농어업 시설 현대화 지원액을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현대화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또 글로벌 수출 종자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곤충, 천년

색소, 양잠 등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비용 감축 및 직거래 등 유통 경로를 다양화·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생산량의 관측 정확도를 평가하고 농협 계약재배 확대 및 수급 조절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76억 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이 내년 1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인삼과 파프리카, 굴, 막걸리 등 25개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조직을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 필요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시설 현대화 10년간 10조 푼다

■ 농식품부 내년 업무보고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대비해 농축수산업 시설 현대화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전라품목 육성을 통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농협 개혁을 통해 국내 농산물 유통망도 개선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먼저 일단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뿐만 아니라 호주, 콜롬비아 등 농·임강국과의 FTA 체결도 마비지 단계에 있다"며 "그러나 아직 국내 농업계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자생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10년간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연평균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낙후된 시설 때문에 가축 질병 발생에 취약한 축산분야 등에 현대화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미FTA 대비 경쟁력 강화 전략품목 키워 수출 늘리기로

또 농식품부는 인삼, 파프리카, 굴, 마늘리 등 25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해 올해 76억 달러 규모인 농식품 수출을 내년엔 100억 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종자 산업, 관상어 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분야 신성장동력 산업도 확충해 장기 수출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물가 안정

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변동의 폭을 줄이기 위해 농협의 유통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농협 구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의 50%가 농협을 통해 판매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농촌이 선진화돼야 진정한 선진사회가 된다"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농촌에 대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단지 농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 내 자식이 성공하도록 하듯 냉철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농민이) 세계 어떤 농민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김승련 기자 skim@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안양시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수산물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실을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황태석기자

농어업 현대화 10년간 10조 투입

농식품부 내년 업무보고 수출 목표 100억弗로

정부가 농어업 시설 현대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 과 함께 농협 개혁을 통한 농산품의 판로 확대가 적극 추진된다.

농림수산물부는 16일 오전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연간 2,450억원인 농어업 시설 현대화 지원액을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소액 보조금 지급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비중을 늘려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농고와 농대에 전문 교과과정 마련되고 창업 지원을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인도 양성할 방침이다.

또 올해 76억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 목표를 내년에는 1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인삼과 파프리카·굴·막걸리 등 25개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한영일기자 hanu@sed.co.kr

농어업 시설현대화 10년간 10조 투입

농식품부, 2012 업무보고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농협 개혁을 통해 농산품의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농업 투자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5면>

농식품부는 우리 농어업이 시설

농식품 수출액 추이
(단위: 달러)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연간 2450억원인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액을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차

원에서는 농고와 농대에 전문 교과 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을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인도 양성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76억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 목표를 내년 100억 달러로 끌어올리도록 국가별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인삼, 파프리카, 굴, 막걸리 등 25개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농촌이 선진화해야 진정한 선진사회가 된다”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농촌에 대한)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농어촌 체질 개선·농식품 수출 드라이브... 'FTA 파고' 넘는다



농림수산물검역본부 측은 MB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안양 농림수산물검역본부 연구시설을 방문해 동물 질병 진단을 위한 실험 장비 연구실에서 동물 중인 연구원을 진찰해 주고 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농식품 수출 강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파고를 넘는다', '16일 이뤄진 농림수산물부의 2012년도 업무계획은 이렇게 요약된다. 한·유류연합(한·미·FTA 등)에 따른 국내 시장 개방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자 외국 농식품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시대 연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성장 가능성과 농가 소득효과가 큰 25개 전략품목을 선정키로 했다. 1980년 19억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올해 7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략품목별 수출촉진단도 구성돼 생산에서 수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가 FTA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10년간 10조원의 시장현대화 자금도 지원된다.

이성진 농식품부 1차관은 "각 부처가 합심해 농산물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 내년에는 올해보다 농산물 수출 목표를 31% 늘리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0여억 수출 시 제조업 분야에서는 통상 7~8%의 취업 유발요

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농업분야는 40여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기업농을 시작으로 2013년 전업농, 2014년 준전업농, 2015년 소규모 농가 등으로 축산업 허가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도축장도 80개에 서 내년 78개, 2015년 50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25개 전략품목 선정-수출 100억 달러 목표

낙후시설 자동화 등 경쟁력 강화 방침

농협 유통망 개혁-수급·물가안정 추진

배이비비머 귀농·귀촌 서비스 지원도

생산 및 사유시설이 자동화되고 현대생비가 보급됨으로써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사유 규모가 충분히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이비비비 세대 귀농 돕는다

귀농·귀촌 지원도 농식품부의 내년 주요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55년과 1963년 사이 출생한 배이비비 세대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대시에 거주하는 배이비비비 세대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13.9%는 5~

10년 내 이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개혁도 농식품부의 내년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다. 내년 3월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되면 경제지주를 전 국민에 판매조적으로 개편해 농식품 유통과 마케팅을 철저히 맡길 계획이다. 이 차관은 "2020년까지 경제지주가 조합 총리출판의 50% 이상을 책임 맡게하면 유통 문제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던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역 농민을 활용해 장외 초기 생산인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기초적응 교육을 하는 다문화 여성대학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해 기자 next@segye.com



“FTA 이겨내자” 농업시설 현대화 내년부터 10조 투입

내년부터 10년간 농업시설 현대화에 10조원이 투입된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연간 2,450억원인 농·어업 시설 현대화 지원액을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도 핵심과제. 정부는 ▲ 농·농대 전문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 실습시설 지원 ▲ 선도 농·어업인을 겸임교사로 활용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한

다. 평생교육 및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농민들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농식품 수출 목표도 올해(76억달러)보다 31.6%나 많은 100억달러를 설정,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등을 공략한다. 특히 인삼 파프리카 마길리 굴 진북 등 25개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을 쓴다. 내년 3월 출범하는 농협 경제지주는 전국 판매조직을 구축해 2020년에는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추·무 등 주요 채소는 고정된 가격에 다년(3년간) 재배하는 장기 계약재배를 시범 실시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갖는다. bermyes@hk.co.kr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FTA 대비 농업 경쟁력 강화

- 시설 현대화 10조원 투입
- 농·농대 전문교과과정 개발
- 젊은 농·어업인 2,500명 육성
- 25개 수출전략품목 발굴해 수출 100억달러 달성

물가안정 유통구조 개선

- 배추·무 가격 고정해 다년(3년) 계약재배 시범 도입
- 할당관세 적용기간 3개월, 6개월 등으로 탄력적 운용
- 농협 경제지주 전국 판매조직으로 개편해 책임판매

기타

- 가공용 쌀 소비 40만톤으로 확대
- 인도네시아, 파리와이 등 해외 농업개발 80만ha로 확대
- 베이비푸드 세대 귀농·귀촌 돕는 원스톱 서비스 실시



농어업 시설 현대화 10조 투입

한·미 FTA 대책 농수산부, 내년부터 10년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10년간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경기도 안양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한·미 FTA 대책보다 지원 기간과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기존 한·미 FTA 대책에는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금 지원 방식도 바뀐다. 농어업인들이 정부 지원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측사·과수·원에 시설 투자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방식인 보조와 융자로 10조원을

지원하려면 40년이 걸리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매년 2500명씩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정부가 구입·임대를 지원해주는 농지 면적의 16%를 30대 이하 농어업인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작년엔 9% 수준이었다. 또 농어업 전문가가 청년 농어업인에게 유망한 창업 품목 등을 개별 상담해주기로 했다. 농업대에선 선도적인 농어업인을 겸임교사로 초청해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기로 했다.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은 농산지와 어선에서 농어업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전문상담사 120명을 양성, 귀농인의 농지·주택 구입은 물론 창업까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농식품 내년 수출 100억弗

올해보다 32% ↑ … 김치등 20개품목 집중 육성

정부가 내년도 농식품 수출 목표를 올해 예상치(76억달러)보다 32% 늘어난 100억달러로 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국내 농·어업 선진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향후 10년간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10조원을 투입하고 농협 개혁으로 농산품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경기도 안양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부처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성과 소득 효과가 큰 수출 전략 품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신선식품(인삼 김치 파프리카 버섯 장미 딸기 등), 가공식품(막걸리 면류 유자차 등), 수산식품(김 넙치 굴 전복 해삼 등)에서 품목별로 수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해외 시장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수출 지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전략 수출 상품은 개별 품목별로 '수출촉진단'을 설치해 △검역 장벽 해소 △기술개발(R&D) △해외 마케팅 등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받고 “단지 농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 냉철한 애정을 갖고 지원하면 세계 어떤 농민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며 “농촌이 선진화돼야 진정한 선진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A 10면에 계속 
이진명·김정환 기자

농업시설 현대화에 10년간 10조원 투입

농식품부 내년 업무계획

인삼 등 전략품목 집중육성

농협 개편해 유통구조 개선

정부가 농업시설 현대화를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경기도 안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외국 시장 개척의 기

회로 삼고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간 2450억원인 농·어업 시설 현대화 지원액을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 보조금 지급 비중을 줄이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비중을 늘려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인삼, 파프리카, 굴, 마늘리 등 25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76억 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액을 1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

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함께 전략품목별 수출촉진단을 구성해 이들 전략품목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21년까지 4911억원을 들여 수출용 종자 20개를 개발하는 '황금씨앗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 3월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와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되면 경제지주를 전국단위 판매조직으로 개편해 유통과 마케팅을 맡길 예정이다. 농민은 농산품 생산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 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틀리겠다는 의미다. 농협과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사업평가회의를 설립해 이행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고와 농대 등에 전문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업인도 양성키로 했다. 아울러 배 대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귀농·귀촌 안해를 위한 전문상담사 120명을 양성하고, 농어촌 마을 공동 경영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홍상 기자 sotong203@kmib.co.kr

농업시설 현대화에 10년간 10조 투입

농식품부 2012년 업무 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농협 개혁을 통해 농산품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이 유도된다. 불법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3년간 입어 자격이 취소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6일 경기 안양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만 내용의 2012년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선진화돼야 진정한 선진사회가 된다."면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정책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농촌에 대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업무 보고의 중점을 뒀다. FTA 피해 보전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조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문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 기업농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

인삼·파프리카·굴 집중 육성

영해 침범 불법조업 중어선

3년 동안 입어자격 취소

중심으로 이자차액 보전 방식 도입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 올해 76억 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을 내년 100억 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삼·파프리카·굴·막걸리 등 25개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 중 수출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연말에 중국 창다오에 국외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10억원 어치를 수출했을 때 취업 유발 효과는 제조 분야에서 7~8명 정도지만 농업 분야는 약 40여명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불법 어업 예방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국가지도선을 2015년까지 4척(인력 100명 확충)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중대 위반(무허가·영해침범·폭력 저항) 어선에 대해 3년간 입어 자격이 취소된다.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고와 농대에 전문 교과과정이 마련된다. 장업 지원을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장업 품목 컨설팅과 1대1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30대 이하 농업인에게는 2500ha의 농지 매입과 시설·수출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귀농·귀촌 전문 상담사를 120명 양성해 귀농인에 대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농협 신경 분리가 이뤄지는 내년을 기점으로 농협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협이 농산품 가공·판매를 담당해 농민은 농산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사업조직을 조합 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한다. [황비용기자 stylist@seoul.co.kr](mailto:stylist@seoul.co.kr)

덴마크돼지 새끼 25마리 낳는데 한국돼지는 15마리

‘10년간 10조’ 농어업 시설투자

정부가 농어업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양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열린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시설 현대화가 미래 농업의 핵심 = 농식품부의 내년 중점사업은 ‘시설 현대화’다. 우리 농어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뒤처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설 농어업 중심의 발전은

필수다. 실제로 덴마크의 MSY(어미 돼지 1마리가 낳는 새끼돼지 수)가 25마리인 반면 우리는 60% 수준인 15마리에 불과하다. 파프리카 생산량은 네덜란드의 40%, 참돔은 일본의 65%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시설투자에 지원키로 했다. 방식도 기존 보조금 지원에서 융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5243억원의 보조금을 감축하고 2015년부터는 전액융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방식

으로는 농어가에 10조원을 지원하는데 40년 이상 걸리지만 지원방식을 변경하면 보다 많은 농어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자의 책임의식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 = 내년 농식품 수출 목표는 100억달러로 설정했다. 올해 76억달러(예상치) 대비 31% 늘어난 수치다. 박 실장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렵지만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중소 도시를 공략해 일본 수출을 23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리고 중국은 서부 내륙의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액을 12억달러에서 18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김진형 기자 jhkim@

▶ A1면서 계속

농식품 내년 수출 100억달러 목표

농협 경제지주 통해 농산물값 안정

수출 인프라스트럭처도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에 수출 농산물 안전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출 대상국 기준에 맞게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중국 칭다오에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도 올해 9 곳에서 내년 11곳으로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깻벌잡곡, 해삼 등 수산 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육성해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까지 벼, 감자, 배추 등 수출용 종자 20개를 개발하는 '골든 시드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산물 수출은 제조업 수출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수출 비중 확대와 함께 집안 '살림살이'에 집중 투자해 생산성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작업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이 검증된 전업농을 중심으로 △축사 신축·개보수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과 배수시설 △포도·감귤 등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는 사업 △노

2012년 농식품부 주요 정책

- 김치, 막걸리 등 전략 상품 선정, 수출 100억달러 달성
-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해외 공동물류센터 9곳→11곳 확대
- 10년간 10조원 규모 농어업시설 현대화
- 굴, 해삼 등 수산양식 10대 품목 육성,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달러
- 벼, 감자 등 수출용 종자 20개 개발
- 농협 경제지주, 조합출자 50% 이상 판매
- 노령진 수산시장 현대화 작업
- 베이비붐 귀농 수요 대상 현장실습
- 농어업계 학교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말산업학과, 전통주가공과 등 신규 대학 학과 신설

후 양식장시설 현대화 작업 등에 투자해 생산성을 높인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종전에 지급했던 소액 보조금을 줄이고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융자 비중을 늘린다.

대신 정부가 융자 이자를 지원해 지원 규모와 수혜 대상자를 늘린다. 내년도 지원금액은 8000억원으로 이 중 4000억원은 민간 금융회사 융자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한다.

농협 개혁을 완성해 농산물 유통도 정상화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 경제지주를 전국 단위 판매 조직으로 전면 개편해 유통과 마

케팅을 맡긴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경제지주가 조합 출자 물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조합 지원에 집중했던 농협 경제사업 조직이 판매 중심으로 재편된다.

농식품부는 농협 경제지주가 농산물 가공과 판매를 담당하게 되면 유통 문제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1955~1968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712만명)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인 귀농 수요를 잡는다는 정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13.9%는 5~10년 이내 이주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동영농과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등을 추진할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전문상담사를 양성해 귀농인에 대한 현장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어업계 학교 교육도 개편한다. 내년에 농식품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수산고 창업 비중을 늘리기 위해 현장 실습장을 64곳에서 75곳으로 늘린다.

V

국회 상임위 보고(2.8)

제305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년 업무 계획 보고

2012. 2. 8.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

❏ 목 차 ❏

1.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325
2. 2012년 주요 추진과제	326
가. 체질개선 · 미래준비	326
나. 활력창출 · 생활안정	330
다. 소득안정 · 위험관리	333
라. 안전식품 · 안정공급	336

1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 미국과 FTA 발효 및 콜롬비아, 터키 등과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개방 확대 전망
- 유럽발 금융위기 등에 따른 세계 경제불안으로 원유·곡물·사료 등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 및 소비심리 위축 우려
-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안정, 사전 재해대응 필요성 확대
 - * 물가상승률(전년비) : ('09) 전체 2.8%↑/농수산물 6.4%↑ → ('10) 3.0/10.0 → ('11) 4.0/9.2
- 휴양, 일자리 등 농어촌 유·무형 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 농식품부 조성 체험마을 방문객/매출액 : ('10) 532만명/792억원 → ('11p) 586/899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중점 추진 방향	체질개선·미래준비	활력창출·생활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 ▶ R&D 지원 및 성장동력 확충 ▶ 수산업 체질개선 ▶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인력육성·유입지원 체계화 ▶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지원 ▶ 투자 활성화
	소득안정·위험관리	안전식품·안정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 동물질병 및 자연재해 사전 예방 ▶ FTA/DDA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 ▶ 안정적인 식량공급 ▶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가 체질개선·미래준비

(1)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

□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12~’21년, 총 10조원 규모) 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시설현대화 예산 : (’11) 2,450억원 → (’12) 4,109(이차보전방식 포함시 7,002)

○ ’12년에 축산(4,885억원, 2천호), 과수·원예(1,349억원, 4.9천ha), 양식시설(768억원, 220개소) 등 품목별 시설현대화 지원

* ’12년 신규 : 고추비가림시설(180억원, 150ha), 양식시설(768억원, 220개소)

○ 경영체 시설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용자(이차보전)로 전환(’15년부터 전액 용자지원)하여 지원대상 농어가를 대폭 확대

- ’14년까지 가족농은 보조+용자, 법인 등 대규모 경영체는 장가·저리(1%) 용자

○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및 대상자 선정·사후관리 강화로 부채증가 최소화

□ **축산업 허가제의 단계적 도입***,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등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 (’13) 기업농 → (’16) 소규모 (다만, 기존 농가는 해당 규모별로 1년씩 도입 유예)

○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 의무교육(21천명) 및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유예기간 1년)

○ 우유의 ‘전국단위 수급관리 체계’ 구축 및 ‘가격생산비 연동제’ 시행

○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실시(’12~’13년)

(2) R&D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투자확대 및 지원체계 선진화

- 농식품 R&D 예산(농진·산림청 포함) : ('11) 8,625억원 → ('12) 9,089
- 농생명소재산업화('13~'22년 5,982억원), 기후변화 대응('13~'20년 7,518억원), 유전체 연구사업 등 대형 R&D 프로젝트 기획 추진
- 우수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화 자금을 신규로 지원(1,000억원, 3%)

*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현장지원팀(30개) 구성·운영

□ 글로벌 수출종자 개발, 육종인프라 확충을 통한 종자산업 육성

- **Golden Seed Project**('12~'21년 4,911억원, '12년 25억원) 추진
- 벼, 배추, 무, 납치 등 20개 전략품목의 글로벌 수출종자 개발
- 민간육종연구단지('11~'15), 방사선육종센터('10~'13) 등 연구기반 확충
- 품종보호제도(UPOV) 전면시행('12.1월)에 따른 해조류 신품종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 운영(3월~, 수산과학원)

□ 생명자원 확보·산업화를 통해 농식품분야 新 성장산업 육성

- '생명자원통합정보서비스(BRIS, '12년 유전자원정보 138만점 D/B화)'를 타 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적 정보제공**
- 말산업을 레저산업, 농외소득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상반기)
- 낚시산업 육성대책을 추진(2월~)하고, '관상어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12월)

(3) 수산업 체질개선

□ 체계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및 어업 효율성 제고와 안전조업에 필요한 제도정비·시설개선

○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어선허가 유지를 위해 허가정수 재조정(6월)

○ 어업 구조조정방식 전환(어업인 희망 감척 → 자원관리를 위한 직권감척 추가)을 위한 추진절차 확립

* 감척 대상 업종 선정, 감척절차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도상연습 실시

○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등을 위한 어선톤수 조정*(10월) 및 조난 대비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12 : 5톤 이상 → '15 : 모든 어선)

* 현행 어선톤수 제한 규정 : 연안 10톤 미만, 근해 140톤 미만

□ 10대 양식전략품목* 및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

*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 외부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품목별 연구클러스터 운영(1월~)

○ 빌딩형 양식 등 다기능 육상양식방법 개발 및 외해·갯벌 등 신규어장 개발('12년 총 4천ha / 전복 2천ha, 김 1.8천ha 등)

○ 갯벌양식어업 위탁관리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수산업법 상임위 계류중)

○ '(가칭)갯벌양식어업육성법' 제정(상임위 계류중)으로 유희, 방치된 갯벌의 종합적·체계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원양어선 현대화 추진 및 원양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정비

○ 노후어선 대체건조(참치어선 4척, 154억원) 및 시설개선(1척, 10억원) 추진

○ 국제 자원관리 규제를 반영한 원양산업 정책 및 제도 정비

- 허가제도 개편 등 '원양산업발전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

(4)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확대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15년 완공) 종합계획 수립(상반기)
 - 핵심 식품기술(18개)* 중심으로 R&D 지원 확대('11 : 248억원 → '12 : 290)
 - * 기능성 증진, 신소재 개발, 발효 기술, 저탄소·융복합 가공, 식품유통기술 등
 - 식품인력 교육인원('11 : 1,245명 → '12 : 3,180) 및 교육과정 확대('11 : 22개 → '12 : 45)
 - '김치산업 종합계획' 수립(7월), 장류·소스류의 수출용 상품개발·해외판촉 등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 공세적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11 : 76.9억불 → '12목표 : 100)
 - 인삼, 김치 등 25개 수출 전략품목에 대해 해외 마케팅·홍보·물류비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략 품목별 '수출촉진단' 구성·운영
 - 중국, 아세안 등 신흥시장 개척 및 현지화 노력 강화
 - * 중국 : 동부연안 → 중서부 내륙시장 개척, 아세안 : 국가별 선호품목(베트남-인삼 등) 집중 판촉
 -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18개)을 '휘모리'(수출 공동브랜드)와 통합
 - 전문물류업체를 선정(상반기), 수출업체의 물류공동이용 지원
- 사업추진 체계화·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한 한식 세계화 정착
 - 시장성을 고려하여 진출지역 확대('11 : 북미·아시아 → '12 : 유럽·호주)
 - 해외한식당협의체를 확대('11 : 9개소 → '17 : 20), 해외 거점으로 활용
 - 한식세계화 성과지수 개발(3월)로 성과평가 및 사업개선 추진
 - * 국내외·국가간 한식인지도 비교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보완

(1)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별로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특화작목 재배·가공, 마케팅, 유통 등 **융복합 산업화 지원**
 - * 지역별 농어촌 자원 현황 자료집 발간(2월),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9월)
 - 농어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12월)
 - 향토산업 육성사업(완료75, 진행58)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 활성화**로 농어촌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색깔 있는 마을을 선정(3천개), 지역개발 등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육성('11 : 2,232개 → '12 : 2,440)
 - 취약계층 일자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공동체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6월~, 100개)하여 컨설팅·교육 등 추가지원 추진
 - 지원조직, 인재육성 등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계획 수립(7월)
 -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11년까지 113개소 → '15 : 500)하여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 **차별화된 상품 개발, 서비스 질 제고** 등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
 - 관광자원이 풍부한 거점지역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산청 등 12개 지구)
 - **농어촌관광사업등급제 세부시행방안 마련**(10월)
 - **농어촌 관광명소를 지속 발굴**(Rural-20, '14년까지 100개소)하고, **마을단위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10월)

(2) 인력 육성·유입 및 지원 체계화

□ 전문인력 양성, 창업활성화 등을 위한 농식품 교육체계 개편

-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12월)하고, 농어업계 고교생의 기술습득을 위한 현장실습장 확대('11 : 64개소 → '12 : 75)
- 창업농 등 30대 이하 젊은 인력에 농지매입·임대 집중 지원(2,500ha)
- 농어촌 지역개발 등 마을발전을 이끄는 핵심리더 양성과정 운영(6월~)
- 교육과정 모니터링·컨설팅, 교육운영 표준지침 제정(4월), 우수 교육기관 인증(12월) 등을 통해 농어업계 교육기관 질적 수준 제고

□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확대·재편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 도시민 관심단계부터 정착까지 농지, 교육, 자금 관련 통합정보 서비스
- 귀농·귀촌 상담사 교육과정(2개, 120명) 운영, 현장실습(200명) 확대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민 농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11) 25개 시·군, 23억원 → ('12p) 27, 26
- 우수사례집 제작·배포(7월), 귀농·귀촌박람회(7월) 등 홍보 강화

□ 신규품목 발굴,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고소득 경영체 육성

- 시장성 있는 新소득작목* 및 新품종** 개발 보급(20개, 누계)
* 아보카도, 석류, 올리브 등 아열대성 작목 ** 고온 적응성 넉치, 전복, 미역 등
-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자생적 학습조직(100개소) 육성
- 농어업인 평생학습관리를 위한 '농어업인력포탈' 구축(10월)

(3) 농어촌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 교육·의료·주거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농어촌 공공서비스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 서비스기준 항목 및 목표치 수정·보완(10월)

○ 농어촌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과제 발굴·보완(11월)

* 농어촌이 정책 추진으로 차별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6.5천동, 100억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취약계층 '집고쳐주기사업' 확대('11 : 301가구 → '12 : 375)

□ 농어업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강화

○ 농지연금 및 경영이양직불 지원 확대('11 : 72억원/623억원 → '12 : 190/659)

○ 고령농어업인 등을 위한 경로당 기사도우미 확대('11 : 480개소 → '12 : 930)

○ 다문화 가족의 농어촌 정착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여성영농 교육'(1,100명, 농협) 및 '농어촌정착지원과정'(1,200명) 등 운영

□ 체계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시·군 단위 계획*을 '(가칭)농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통합('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마련, 12월)

*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산어촌 종합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정주권개발 계획 등

○ 마을·권역 단위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농어촌 정비계획제도* 도입방안 마련(10월)

*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합한 정비 중심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2월)

다 소득안정 · 위험관리

(1)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 직불제 신규도입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안정망 확충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및 지급률 제고를 위한 '밭농업직불제' 도입

* 밀, 콩, 보리 등 19개 품목 대상, ha당 연간 40만원 지급

○ 조건불리지역에서의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직불제' 도입

* '12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도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가구당 49만원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 상향 조정* 및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30% → 20)

* 논 : 31~39만원/ha → 40~60, 밭 : 67~79만원/ha → 100~120

□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인 재해공제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강화

○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11 : 50개 → '12 : 61)하고, 일부 시범품목(7개)의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11 : 본사업 26개 → '12 : 33)

○ 농어업인 재해공제의 보상수준 확대 및 다양화

* 사망시 공제금 : ('11) 농업인 50~70백만원/수산인 25~45백만원 → ('12) 50~80/25~60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활성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및 이용 효율화

○ 밭작물용 농기계임대사업 추가(30개소, 고추·마늘 전용 5개소 포함) 설치

○ 농기계 은행사업(농협)을 연중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체제 (경운·이앙·수확 중심 → 육묘·방제 등 추가)로 전환

* 농작업 대행면적 : ('11) 130천ha(벼 재배면적의 15%) → ('12) 170(20)

○ 콜센터 운영 등 임대사업(지자체)과 농기계은행사업(농협)간 연계 강화

(2)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조기 대응체계 구축 및 적응역량 강화

○ '농업관측기동반' 운영 및 농업 기상정보 제공 확대

* 농업기상정보 제공(KREI) : ('12) 2개 품목(배추, 무) → ('15) 6 → ('20) 10

○ 온난화에 따른 작물 생산예측 및 적응기술 개발(품종개발, 병해충 방제, 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 아보카도, 석류, 올리브 등 아열대성 소득 작목 선별(누계) : ('11) 15개 → ('12) 18 → ('20) 25

○ '(가칭)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14년 설치·운영 예정) 설립방안 검토(5~11월 연구용역)

□ 저탄소 농식품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24천tCO₂)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26개)의 감축이행 중간점검(6~7월)

○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15년)에 대비,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분(Offset)을 크레딧화하기 위한 검·인증체계 구축

○ 저탄소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한 저탄소 인증제도 도입('12 : 쌀, 상추, 깻잎, 사과, 배 5개 품목)

□ 농어업 시설 개보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영농·영어기반 확충

○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수리시설개보수 추진(716개소)

○ 상습 침수 농경지 24천ha('12준공 4.2)의 배수개선 및 가뭄 상습지역 34천ha('12준공 2.1)에 대한 농촌용수개발 시행

○ 최근 강우 패턴분석과 재해대비 수리시설 능력조사결과(3월)를 반영하여 '중장기 수리시설 보수·보강계획' 수립(12월)

(3) FTA 보완대책 후속조치 및 DDA 협상 대응

□ FTA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법령 정비

○ 피해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한 'FTA특별법' 하위법령 개정(4월)

* 품목별 지급한도 설정 :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 가격 대비 90%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 보전('11.12월 'FTA지원특별법' 개정)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료 적용 시설 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추진(관계부처 협의)

* 농업용 1톤 트럭 추가, 로더는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

**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굴껍질 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추가

□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FTA이행 지원센터' 지정·운영(2월~)

○ FTA협정과 관련된 농어업인 상담, FTA로 인한 가격영향 조사·분석, FTA 대책사업 이행점검·평가 등의 역할 수행

□ DDA 협상은 FTA 체결 증가 등 대외환경 변화를 감안, 쟁점별 우리 입장을 재검토하고, 협상타결 후에도 철저히 대비

○ 주요 품목별 우선순위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양허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대비

○ 공조그룹(G33, G10)과의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에 대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 논의 대응

- 수산보조금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입장이 유사한 일본, EU 등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

라 안전식품 · 안정공급

(1) 안전 농식품 공급

- GAP·HACCP 등 사전예방체계 내실화 및 위해요소관리 강화
 - GAP 인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품목군별 심사기준 마련(하반기)
 - 브랜드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장부터 판매까지 일괄 HACCP 적용체제 구축('12년 10개 시·군 축산브랜드 대상)
 -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국내산 농수산물 모니터링 강화
 - * 방사능 분석장비(36대) 및 검사인력(8명) 추가 확보 추진

- 도축장·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 도축장 설비 및 위생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위생규정 위반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11월)
 - * 허가취소(1년 내 4회 → 3) 및 과태료 상향 조정(300~500만원 → 500~700) 등
 - 폐광산(반경 2km → 6) 및 기타오염우려지역(산업단지, 매립장 등)에 대한 농지·농산물 중금속 조사 강화('11 : 4,800건 → '12 : 5,600)
 - 중금속 오염 정보공유를 위한 GIS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12월)

- 친환경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12 : 신규 8개소/누계 42) 지속 추진
 - *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지원, 기술지원단 운영 및 단지 내 양분총량 관리
 - 생분해성 어구 보급(350척) 및 수산물 이력제 확대('11 : 1,320개 업체 → '12 : 1,450)
 -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통모니터링 및 재포장취급자 의무인증제 도입('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2)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협의 수급안정 기능 강화,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
 - 주요 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 확대('11 : 생산량의 12% → '12 : 20)
및 수급조절 능력 확충('11 : 국내산 수매·비축 328천톤 → '12 : 367)
 - 배추·무 : 고정가격에 의한 다년계약(3년) 방식 시범 도입
 - 농협의 유통·판매역량 강화를 위해 청과도매물류센터 건립(안성), 양곡유통센터(안성) 및 축산물종합유통센터(부천) 착공 등 인프라 확충
 - 5대 권역별(안성,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도매물류센터 구축 추진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aT)를 통한 직거래 확대('11 : 6,255억원 → '12 : 1조원) 및 직거래 장터 개설('11 : 8개소 → '12 : 10개소 추가)
- 도축·가공·유통의 일관체계 구축 등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 농협 안심축산 등 대형패커를 집중 육성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직거래 확대
 - * 안심축산 시장점유율 : ('11) 한우 8%/돼지 0.5% → ('12) 20/7 → ('15) 50/18
 - 위생수준, 경영관리 상태 등 도축장 평가 및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구조조정 가속화('11 : 83개소 → '12 : 60)
 -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 휴대 등 편의성 강화제품 개발
- 수협과 연계하여 산지-소비지 유통 및 물류기반 강화
 - 거점 위판장과 연계, 물량집적·상품개발·마케팅 기능을 강화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2개소 신규, 72억원)
 - 산지·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물류 효율화, 거래제도 개선, 가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수산물유통선진화방안' 마련(9월)

(3) 안정적인 식량 공급

□ 쌀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개선

- 벼 수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확기에 정상적인 가격형성 및 농가-산지유통업체 간 갈등 최소화
 - '12년 RPC 벼 매입자금의 25% 이상('11 : 20%)을 수탁매입토록 의무화
 - * '12년 벼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85만ha)으로 전망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간 공동 출자로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추진('12~'13년 공동브랜드 개발 및 시범사업)

□ 조사료재배 확대, 겨울철 유희농지 활용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 조사료 생산특구(10개소, 5천ha) 및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5개소) 조성
 - * 조사료 재배면적 : ('10) 244천ha → ('11) 260 → ('12) 330 → ('14) 370(52% ↑)
 - * 조사료 생산량 : ('10) 1,597천톤 → ('12) 2,522 → ('14) 3,138(97% ↑)
- 겨울철 유희농지 활용(448천ha) 및 배수불량 논 배수개선(4천ha)

□ 해외 농어업 개발·협력 활성화를 통한 식량자원 확보

- 동남아, 연해주 등에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면적을 2배 이상 확대('11 : 37천ha → '12 : 80)하고, 국내반입물량 확대
 - 미국 현지에 엘리베이터 확보(산지 10기, 수출 1기)를 통한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 양식시설·가공공장 등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12억원) 및 투자정보·컨설팅 제공 등 종합 지원계획 수립(4월)
 - 상업 조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해외 신어장 조사(2개소, 17억원)